KINU 연구총서 18-11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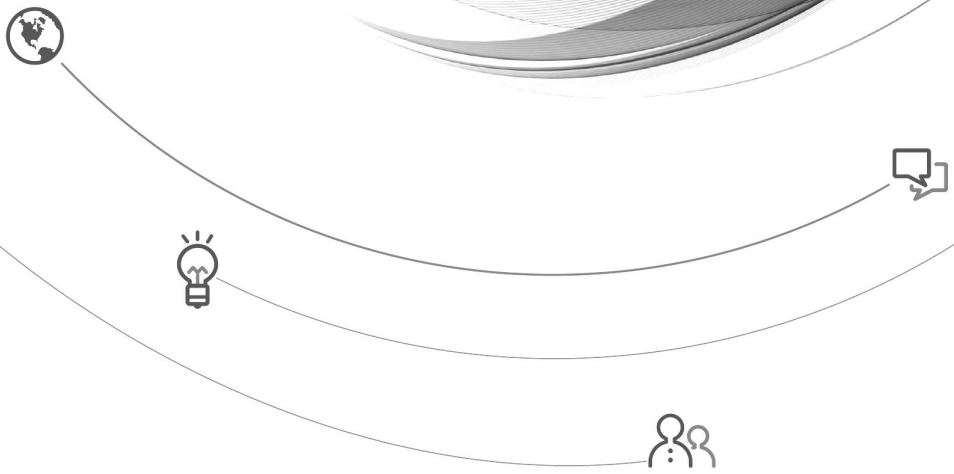
김진하 · 김규륜 · 배정호 · 우평균 · 이기태 · 이기현 · 정구연

KINU 통일연구원

KINU 연구총서 18-11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연구책임자: 김진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규륜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배정호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우평균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기태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기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정구연 (강원대학교 교수)



KINU 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1/3년차) KINU 연구총서 18-11

발 행 일 2018년 12월 15일
저 자 김진하, 김규륜, 배정호, 우평균, 이기태, 이기현, 정구연
발 행 인 김연철
발 행 처 통일연구원
편 집 인 국제협력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 페 이 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계문사(02-725-5216)
인 쇄 처 (주)계문사(02-725-5216)
I S B N 978-89-8479-942-4 93340
가 격 9,500원

ⓒ 통일연구원, 2018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 례

요 약 ····· 9

Ⅰ. 서론 | 김진하 ····· 15

1. 연구의 목적 ····· 17
2. 주요 연구내용 소개 ····· 19

Ⅱ. 국가별 네트워크 확장 거점 분류 연구 ····· 23

1. 미국 | **정구연 · 김규륜**(감수) ····· 25
   - 가. 미국 네트워크의 특징 및 평가 ····· 25
   - 나. 주요 기관 ····· 28
   - 다. 주요 전문가 ····· 52
2. 중국 | **이기현** ····· 68
   - 가. 중국 네트워크의 특징 및 평가 ····· 68
   - 나. 주요 기관 ····· 73
   - 다. 주요 전문가 ····· 90
3. 일본 | **배정호 · 이기태** ····· 108
   - 가. 일본 네트워크의 특징 및 평가 ····· 108
   - 나. 주요 기관 ····· 112
   - 다. 주요 전문가 ····· 128

4. 러시아 | **우평균** ····· 136
가. 러시아 네트워크의 특징 및 평가 ····· 136
나. 주요 기관 ····· 138
다. 주요 전문가 ····· 168

Ⅲ. 결론 | 저자 일동 ····· 183
1. 미국 ····· 185
2. 중국 ····· 186
3. 일본 ····· 190
4. 러시아 ····· 195

참고문헌 ····· 198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05

표 차례

〈표 Ⅱ-1〉 싱크탱크의 목적과 역할의 분화 ····· 29
〈표 Ⅱ-2〉 미국 내 싱크탱크의 이념적 분포 예시 ····· 30
〈표 Ⅱ-3〉 미국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들의 의회 증언 비율(1999~2008) ··· 31
〈표 Ⅱ-4〉 115대 회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전문가 증언 현황 ····· 32
〈표 Ⅱ-5〉 115대 회기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가 증언 현황 ····· 33
〈표 Ⅱ-6〉 이념별 주요 재정 지원 그룹 ····· 35
〈표 Ⅱ-7〉 115대 회기 북한 관련 미 의회 법안 현황 ····· 44
〈표 Ⅱ-8〉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주요 사업 및 활동분야 ····· 116
〈표 Ⅱ-9〉 방위연구소의 주요 연구과제 ····· 117
〈표 Ⅱ-10〉 러시아 싱크탱크 순위(2016) ····· 140
〈표 Ⅱ-11〉 주요 싱크탱크 현황 ····· 141
〈표 Ⅱ-12〉 한반도 관련 싱크탱크 ····· 143
〈표 Ⅱ-13〉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 조직 ····· 146
〈표 Ⅱ-14〉 IMEMO 조직 ····· 147
〈표 Ⅱ-15〉 RIAC 조직 ····· 150
〈표 Ⅱ-16〉 고르바초프 펀드 조직 ····· 152
〈표 Ⅱ-17〉 DOC 주요 인사들 ····· 156
〈표 Ⅱ-18〉 IISI 조직 ····· 158
〈표 Ⅱ-19〉 극동연구소 조직 ····· 160
〈표 Ⅱ-20〉 주요 언론 현황 ····· 161
〈표 Ⅱ-21〉 주요 사회단체 현황(공공외교 관련) ····· 166

그림 차례

〈그림 Ⅱ-1〉 RISS 조직 ····· 153
〈그림 Ⅱ-2〉 올리가르히와 그들의 소유 미디어 ····· 163
〈그림 Ⅱ-3〉 인기 TV 채널 ····· 164

요 약

본 연구는 남북한 및 동북아 주요국가 간 복합적 상호의존 및 갈등의 국면과 이슈영역이 어지러이 교차하는 복잡한 국제환경의 맥락하에서, 글로벌 차원의 행위자들, 특히 한반도 관련 주요 국가들인 미·중·일·러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공조체제와 한반도통일 지지 네트워크를 형성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국제적 통일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적 통일기반이란, 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장애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한반도평화통일 과정을 단축·안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국제적 유·무형의 조건을 의미하며, 이 보고서는 국제적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 전략 수립을 위해 추진되는 3개년 연구 프로젝트의 1년 차 연구 결과이다. 이번 1년 차 연구에서는 한반도 통일 환경에 영향력이 큰 4대 주요 관련국(미·중·일·러)의 민관 싱크탱크 및 공공기관 등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외교안보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각국 외교안보정책 공동체 여론형성과 정보전달 연결망의 교점(nod)들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미국의 경우, 반기득권주의를 주창하는 대통령의 특성상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한반도 문제 주류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되는 과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내 정책결정가들은 이들의 의견을 외면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의회는 여전히 한반도 주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기에 기존의 보수적인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정책결정 네트워크의 접근이 동북아 질서차원에

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닌 미중관계에 대한 미국 내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중국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은 중국의 정치인, 정책관료, 지식인, 대중들에게도 유사하게 공유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의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전략적인 통일외교와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우리의 외교적 성과를 쉽게 생산해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중국의 정책 네트워크는 매우 다양하고 그 범위 또한 넓다. 중국은 그 규모만큼이나 다수의 정책 싱크탱크와 대학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역시 매우 많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 문제에 국한해 보니, 몇몇 거점 단위와 인물 네트워크의 핵심 전문가들을 선별할 수 있었다. 우선, 지역별로는 크게 베이징, 상하이, 동북지역 주요 정책 거점 단위를 분류하였다. 나머지 지역 역시 중요하나 전문가 풀이 상대적으로 적고, 한반도 통일 문제에 직접적인 관심이 적기 때문에 전략 거점에서는 제외하였다.

둘째,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 네트워크 거점은 각 단위의 성격에 따라 국책 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와 언론으로 분류하였다.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큰 당국가 체제에서 국가의 민간 영역에 대한 제약이 클 수밖에 없고, 전통적으로 중국의 대학이나 민간단체 역시도 자금 운영에 있어 국가 투자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하지만, 점차 사회의 다원화·민주화 추세에 따라 사회영역의 자율성이 제고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이러한 분류 역시 가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 관련 전문가 그룹이다. 본문에서는 국제정치/전략 그룹, 한반도 전문가 그룹, 차세대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각 전문가들의 학문적 배경에 따른 구분으로, 한반도 지역 전문가는 아니지만 동북아 국제정치, 중국의 외교전략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는 국제정치학자 그룹과, 한국어에 능통하면서 한국과 북한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방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 온 한반도 전문가 그룹,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미 주요 기관에서 핵심적 실무 역할을 담당하고 주요 언론에서 주목하는 차세대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한반도 관련 싱크탱크와 전문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유의하며 조사 및 분류 작업을 하였다. 첫째, 의회 차원에서 참의원의 한반도 관련 외교·방위위원회의 역할이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 참의원은 직능대표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외교·방위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하고, 필요할 때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를 초청해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정확한 현안 인식을 갖게 된다. 둘째, 대학 연구기관은 일본 내에 지역별로 산재하고 있지만, 뚜렷한 정책 지향의 연구기관을 찾기는 어렵다. 먼저 대학 연구기관은 크게 수도인 도쿄 소재 대학들과 교토, 규슈, 그리고 본 작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히로시마 등 한반도 관련 연구기관이 존재한다. 하지만 도쿄 내 소재하는 도쿄대, 게이오대, 와세다대가 한반도 정책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역은 정책 지향적이라기보다는 한국학이라는 지역학 차원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한반도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해 한반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요 동아시아 국제정치학자를 조사하였다. 다섯째, 한반도 전문가는 원로, 중견, 소장 학자로 나누고 대표적 인물들을 소개하였다. 여섯째, 일본 내에서 한일관계 및 북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언론인들의 분석도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 정부의 시각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민간 기관 및 연구자들은 대체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모스크바 카네기센터(Moscow Carnegie Center)처럼 서구의 연구재단 사무실이 모스크바 등지에 지부를 개소하여 연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갖고 서구와 러시아 사이에서 대체로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단, 러시아 국내 정치 문제나 인권 관련 사안에서는 러시아 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표명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에 도입된 서구의 사회과학 이론과 국제관계의 시각을 습득한 젊은 연구자들이 등장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개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대러시아연구소(Institute of Modern Russia)처럼 시민사회 발전과 법의 지배 확립 및 외국과의 관계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등, 서구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간 싱크탱크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또한, 전략기술분석센터(Center for Analysis of Strategies and Technologies, CAST)처럼 정부 산하의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담당해 온 군사문제 분석이나 무기산업체계 등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민간연구기관들도 생겨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사회단체는 러시아의 수많은 단체를 모두 서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공외교를 목적으로 하는 몇 개의 주요 단체 위주로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내 시민사회의 영역이 확대함에 따라 민간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정부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시민사회가 차지하는 영역은 크지 않으며, 여론도 마찬가지로 부차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명망이 있거나 잠재력 있는 민간 싱크탱크 및 기타 기관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장 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기관 및 인물에 대한 기본 자료는 별도의 소책자로 요약·정리하여 발간한다.

주제어: 한반도 평화통일,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한반도통일 지지 네트워크, 정보전달 연결망의 교점(Nod), 싱크탱크, 통일기반 구축, 공공외교

Abstract

Global Network Strategy for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Kim, Jin Ha *et al.*

This study aims to develop to an effective global networking strategy for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policy report is the results of the first year study of the 3 years project on the subject, mainly focusing on the major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This year study has a purpose to explore and analyze the major think-tanks, experts, and public organizations as the significant network nods, which used to formulate and circulate policy opinions and knowledge on the Korean problems for the policy community of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in the aforementioned 4 countries.

Keywords: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global network strategy, nods of communication network, think tank, establishment of unification base, public diplomacy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표는 남북한 및 동북아 주요국가 간 복합적 상호의존(complex interdependence) 및 갈등의 국면과 이슈영역이 어지러이 교차하는 복잡한 국제환경의 맥락 하에서 글로벌 차원의 행위자들, 특히 한반도 관련 주요 국가들인 미·중·일·러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공조체제와 한반도 통일 지지 네트워크 형성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국제적 통일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적 통일기반이란 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장애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을 단축·안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국제적 유·무형의 조건을 의미하며, 이 보고서는 국제적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 전략 수립을 위해 추진되는 3개년 연구 프로젝트의 1년 차 연구 결과이다.

이번 1년 차 연구에서는 한반도 통일 환경에 영향력이 큰 4대 주요 관련국(미·중·일·러)의 민관 싱크탱크 및 공공기관 등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외교안보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각국 외교안보정책 공동체 여론형성과 정보전달 연결망이 되는 교점(nod)들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2~3년 차 연구에서는 최근 중요도를 더해가는 인도나 동남아 등 중개권력이나 위치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개자 유형 국가들의 기관과 조직 등으로 연구의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지지 글로벌 네트워크 확산 전략과 맞춤형 콘텐츠 개발 작업도 추진될 것이다.

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연구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첫째,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한국의 평화통일 목표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기회에 대처할 필요성이다.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unipolarity)의 뚜렷한 약화

추세, 그리고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도전에 따른 동북아 다극 체제(multipolarity)로의 전환 가능성 증대 및 지정학적 경쟁구도의 귀환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위협적일 수 있는 국제환경의 변화가 진행 중이다.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은 글로벌 패권국으로 세계 외교와 경제를 주도하며 반자유주의(illiberal) 연합세력 형성을 성공적으로 억지해 왔으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중국의 고속성장으로 인한 동아시아에서의 경쟁체제 등장 등으로 미국 쇠퇴 및 미중 세력전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세력전이와 다극체제의 불확실성은 한반도 통일 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20년은 사실상 미국 단극체제하에서 주어졌던 한반도 통일 기회(통독은 양극구조 해체의 산물)가 소멸되어 가는 과정이 점철된 기간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약화되면서 다극체제적인 국제환경과 강대국 권력게임이 등장한다. 중국의 부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동북아에서도 미러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냉전구도의 재현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강대국 정치의 귀환과 더불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쇠퇴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더욱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 제한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다극체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외교안보적 도전의 시기를 맞게 되었으나, 다른 한편 다극구조는 일종의 현상변경적인 성격을 지닌 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냉전 체제 양극구조하에서는 한국 자체의 통일 노력보다는 국제구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다극체제에서는 불확실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능동적인 외교를 통해 통일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적 통일지지 여론을 형성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다. 하나의 역설로서 전통적 의미의 권력정치의 부활과 더불어 국제질서의 제도화·사회화·다자화 추세가 가중되면서 외교의 중층화 현상이 병행해서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다양한 행위자는 물론 각국 내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주요행위자들의 지지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한반도상에 전개되는 강대국 간 권력 정치적 갈등의 최소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

국제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대외적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지지확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고, 남북 갈등 불식과 지속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을 배가하여야 한다. 한반도 통일 기반구축에 있어 국제사회 공조체제 구축과 통일지지 여론 형성은 필수적이다.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나아가 동북아 협력과 번영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한다는 국제적 공감대 확산과 지원을 이끌어 내야만 한다. 이를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2. 주요 연구내용 소개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① 주요 관련국 싱크탱크 및 공공외교 대상 등을 파악하는 등 국제 네트워크 확산의 주요 전략적 거점을 발굴한 후, ② 이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개선 및 확장을 위한 상대국 행위자들의 수요조사 및 맞춤형 확장 전략을 개발하는 등 국제적 통일지지 네트워크 확산전략을 수립하

며, ③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방안 및 통일 외교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본보고서는 1년 차 연구의 결과물로서, 일단 한반도 관련 4개 국가 미·중·일·러의 각 국가(4강)별 네트워크 확산 전략거점으로서 주요 정책자문 싱크탱크, 정당 및 정부기관, 언론, 사회단체 등에 대한 현황 정보를 파악하고 분류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들 제도적 거점 대상의 조직적 성향 및 배경을 분석하고, 더불어 주요 활동 인물들의 정치 및 이념적 정향, 과거 활동배경 등 주요 인적 요소의 정보를 분류하여 정리한다. 한국 공공외교 및 공식적 외교, 그리고 국제적 통일지지 여론 형성을 주 업무로 하는 정부 관련 기관이나 관계자, 그리고 기타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 연구자들에게 기초적 접근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현장 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기관 및 인물에 대한 기본 자료는 별도의 소책자로 요약·정리하여 발간할 예정이다.

2년 차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 대상을 한반도 평화통일지지 여론 형성에 미칠 수 있는 주요 중견국들을 발굴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1년 차 연구에서 분류된 주요국 행위자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각 국가별 외교정책 결정과정 및 여론 형성 네트워크에서의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점검하여 보다 효과적인 통일지지 네트워크 확산 전술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는 국제·지역 질서 속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을 수립하고 활용하는데 있으므로 주요 국가별 행위자의 전략과 구조적 환경을 복합적으로 담아내는 입체적 지지 확장 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각 국가별 맞춤형 확산 전략과 이를 한데 묶는 통일지지 국제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통합적 조율 전략을 모색한다.

3년 차에서는 확산전략에 담아낼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 먼저 한반도 평화통일이 가져올 국제적 편익을 전략적으로 발굴한다. 글로벌 통일편익이 국제안보에 있어 일종의 공공재(public goods) 성격을 띠고 있음을 다양한 네트워크 채널을 통해 집중 부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편익의 예로는 북한 핵문제 해결, 북한의 WMD 확산위험 해소, 한반도에서 전쟁가능성 제거, 통일한국과의 안정적 경제교류 등을 고려할 수 있겠다. 특히 주요 국가의 개별적 통일편익에도 주목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양자 간 트랙 1.5 회의 등을 통해 주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극평화 추진을 기조로 삼는 콘텐츠를 개발한다. 통일을 위해서는 평화주의적 명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실리가 자연스럽게 뒤따르도록 하는 선(先)명분·후(后)실리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실정치적(realpolitik) 기준에 의한 실리계산의 어려움과 역효과 초래 가능성을 차단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통일 외교 전략의 평화주의적 이미지를 투영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일 수 있으므로, 국제현안에 있어 적극평화(positive peace) 명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실리가 자연스럽게 후행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1년 차 연구 결과로서 주요 4대국의 각 국가별 네트워크 확산 전략거점과 노드에 중점을 맞춘 본 보고서를 시작한다.

Ⅱ

국가별 네트워크 확장 거점 분류 연구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미국

정구연(강원대학교) · 김규륜(감수, 통일연구원)

가. 미국 네트워크의 특징 및 평가

한국의 대북정책 및 통일 정책에 대한 미국 내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네트워크는 싱크탱크뿐만 아니라 의회, 행정부, 학계 등에 다층적으로 포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영역별, 인물별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추진해야할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 내 싱크탱크, 정당과 의회, 사회단체들, 즉 소위 정책결정 과정 벨트웨이(beltway)를 구성하는 네트워크의 첫 번째 특징은 이념적 양극화(polarization)이다. 물론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한 주요 싱크탱크 전문가들의 평균적 성향은 학계와 시민단체에 소속된 전문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도의 성향이 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내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이념적 양극화의 추세를 비껴가고 있지는 못하는 듯하다.

사실 미국 내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 간의 이념적 양극화의 정도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서로에 대한 적대감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1] 이러한 추세는 양당 간의 합의와 타협이 점차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의미하며, 더욱이 공화당 내부의 비대칭적 이념 분

1) "Political Polarization in the American Public: How Increasing Ideological Uniformity and Partisan Antipathy Affect Politics, Compromise and Everyday Life," Pew Research Center, June 12, 2014, 〈https://is.muni.cz/el/1423/podzim2016/POL571/um/Oct18Rf_Pew_Report__Political_Polarization_in_the_American_Public__Overview_Section_1.pdf〉 (Accessed September 9, 2018).

극화는 공화당 리더십의 약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분극화가 정책의 양극화로 이어져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내 유권자들의 경우 역시 이러한 의회 내 양극화와 연동되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때 의회와 유권자 간의 인과관계는 양방향으로 일어난다고 분석한다. 더욱이 대외정책상에서 자유국제주의에 대한 양당적 합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연구는 이미 오래전에 등장한 바 있는데, 이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전후질서에 대한 공약을 유지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대전략조차 내부적으로 큰 논쟁의 중심에 서있음을 알 수 있다.[2)]

두 번째 특징은 네트워크 외부로부터 발생한 상황에 기인한다. 2016년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정책 주류세력(foreign policy establishment)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이들의 영향력 배제를 시도해왔다. 실상 주류세력에 대한 비판은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전략 가운데 하나이다. 포퓰리즘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정치적 이념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중 설득의 방식, 즉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3)] 일반적으로 포퓰리스트들은 국민을 '순수한 인민'과 '부패한 엘리트'로 나누어 타락한 기득권 엘리트 계층을 비난하고, 이 두 집단 간의 적대감을 고조시켜 불만과 비판을 증폭시키는 것을 시도한다. 이러한 반기득권주의(anti-establishment)적 특징은 기본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기존 대외정책 엘리트 및 네트워크를 배제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지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정가의) 오물을 청소하겠

2) Joshua Busby, "off-center: Misplaced Emphases in Debates About Liberal Internationalism," *H-Diplo/ISSF Roundtable Review,* vol. 2, no. 4 (2011), pp. 6~14.

3) Paul Taggart, "Populism and Representative Politics in Contemporary Europe," Journal of Political Ideology vol 9, no. 3 (2004), pp. 269~288; Michael Kazin, *The Populist Persuasion: An American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1995).

다(drain the swamp)"는 표현을 사용하며 기존의 전통적 정책결정 네트워크 내의 인물보다는 네트워크 밖의 새로운 인물을 기용하려 시도해왔다. 이러한 접근법은 전통적 정책결정 네트워크 혹은 전문가들의 전문성 보다 충성도(loyalty)에 좀 더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실제 외교현장에서 많은 정책적 혼선을 가져왔다.[4)]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는 공화당의 전통적 보수 이념이 우파 포퓰리즘, 즉 트럼피즘에 의해 압도당하고 있는 상황이다.[5)] 대외정책차원에서 트럼피즘과 전통적 공화당의 대외정책이 어떠한 차별성을 보이는지, 혹은 이 둘 간의 타협으로 제3의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 내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양하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들은 최근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 더 나아가 이와 맞물린 동북아 질서구축과 관련한 방향까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문제에 관해 현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 즉 최대압박과 관여의 접근법을 받아들이면서도, 북미 간의 비핵화협상이 진행되며 종전선언, 평화협정, 제재완화 등 다양한 단계별 로드맵의 제시와 함께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관찰되고 있다. 또한 미중관계의 향후 전망에 따른 상이한 예측과 맞물려,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예측을 제시한다.

---

4) 정구연, "우파포퓰리즘과 미국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담론201』 제 21권 2호 (2013), pp. 139~169; Russell Mead, "The Jacksonian Revolt: American Populism and the Liberal Order," *Foreign Affairs,* vol. 96, no. 2 (2017), pp. 2~7.

5) Eliot Cohen, "The Republican Party Abandons Conservatism," *The Atlantic,* October 1, 2018, 〈https://www.theatlantic.com/ideas/archive/2018/09/republican-party-conservative/571747/〉 (Accessed November 2, 2018).

요컨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와 정당, 의회 내부의 네트워크와 주요 인물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이들 네트워크 내부에 미국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정책 결정과정에 관여하는 네트워크와 인물들을 중심으로 분석의 폭을 좁혀보고자 한다. 물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부분 동북아시아 지역을 포괄적으로 조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 폭을 유연하게 설정할 것이다.

나. 주요 기관

(1) 연구기관

미국 내에서 싱크탱크(think tank)는 연구기관으로서, 공공정책 현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6]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주요 싱크탱크는 워싱턴 D.C.에 위치해있다. 물론 원칙적으로 미국의 싱크탱크란 비영리기관이며 주식회사의 형태도 아니고, 이들의 주요 목표는 연구 수행과 아이디어 형성, 그에 따른 정책적 영향력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이익집단과는 달리 이들은 로비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으며, 선거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싱크탱크들은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서 벗어나는 정파적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세법상으로도 비과세지위(tax-exempt status) 위반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내 싱크탱크들은 다양한 형태와 역할로 분화되어왔다. 〈표 Ⅱ-1〉은 그러한 현황에 대해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싱크탱크는 그 목적에 있어서도 단순한 정책적 영향력 행사뿐만이 아니라 싱크탱크 자체적인 이념의 추구, 정부 용역 수행을

6) Howard J. Wiarda, *Think Tanks and Foreign Policy: The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and Presidential Politics* (New York: Lexington Books, 2010), p. 29.

통한 정책결정과정 지원, 다양한 공공정책 영역을 아우르는 정책 패키지 제공, 선거 승리를 위한 정강(party platform) 구축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각의 목적에 적합한 전문가 유형과 조직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표 II-1〉 싱크탱크의 목적과 역할의 분화

유형	문화	목표	한계	활동 대상	예시
Academic (학생이 없는 대학 형태)	Academic	공공정책에 함의를 가지는 지식 제공	정책에 대한 이론적 접근	학자 및 정책결정자	Brookings Institution
계약/컨설팅	Technocratic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정량적 접근	정부기구 및 행정부 부처	Rand Corporation
Advocacy	Ideological	이념추구	연구주제에 대한 이념적 제약으로 협소한 연구영역	Ideologues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Policy Enterprise	Marketing	정책 패키지 제공	선별적 공여자 혹은 정책결정가들을 위한 정책 패키지 제공	정책결정가	Heritage Foundation
정당	Political	선거 승리	정강(party platform)에 국한된 연구 범위	정당	Progressive Policy Institute
정부산하	Bureaucratic	정책형성을 위한 정보제공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어젠다에 국한된 연구 범위	행정부 부처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대학	Academic	지식형성	교육과 지식창출이 목표	학계	Asia Pacific Research Center-Stanford University

출처: James G. McGann, *Think Tanks and Policy Advice in the United States: Academics, Advisors and Advocates* (London: Routledge, 2007).

결과적으로 싱크탱크는 이념적으로도 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미국 정치의 맥락상 싱크탱크는 민주당·공화당 양당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념적 양극화의 결과 최근에는 중도적 싱크탱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싱크탱크 간 생산적인 정책 토론과 협력이 약화되는 추세에 놓였다.

〈표 II-2〉 미국 내 싱크탱크의 이념적 분포 예시

Progressive	Center-left	Centrist	Center-Right	Libertarian	Conservativ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Carnegie Endowment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ato Institute	Heritage Foundation
Justice Policy Institute	Brookings Institut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RAND Corporation	Reason Foundation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World Watch Institute	Urban Institut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Hoover Institution

출처: Alek Chance, "Think Tank in the United States: Activities, Agendas, and Influence," *ICAS Report 2016* (Washington D.C.: Institute for China-America Studies, 2016).

〈표 Ⅱ-2〉는 미국 내 이념적 지형에 따라 주요 싱크탱크들을 유형화한 것이다. 미국 내 싱크탱크들을 이념적 지형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상당 부분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한 미국 내 싱크탱크 내에 존재하는 연구진 개별의 이념적 정향 역시 상이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표 Ⅱ-2〉는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공개적으로 제시한 이념적 어젠다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이때 분석 기준은 경제적 자유(economic liberty)와 사회적·개인적 자유(social and individual liberty)라고 하는 두 요소이며, 이는 미국 내 다양한 행위자들의 정치적 이념적 분포 분석을 시도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다.

〈표 Ⅱ-2〉에서 알 수 있듯, 미국 내 싱크탱크들은 원칙적으로 중립적인 위치를 표방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당파성(partisanship)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념적 양극화의 추세로 인해 당파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정당으로부터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싱크탱크의 활동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우선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단기간, 프로젝트별 예산이 확대됨으로써 장기연구가 어려워졌고, 또한 연구주제와 방법에 있어 예산 후원자의 요구와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더욱이 미국 내 싱크탱크의 급증 추세와 싱크탱크와 유사한 비정부기구의 확대는 예산확보 경쟁의 추세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책대안이 더욱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편 당파적 특성의 강화는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고루 포함시키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미국 내 싱크탱크의 영향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다양한 회의, 세미나, 워크숍 개최, 싱크탱크 전문가의 미디어 노출, 정책결정가들에 대한 접근성, 의회 증언(testimony), 자문단 및 이사회 참여, 개인적 컨택, 그리고 실제 입각 등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다.

〈표 Ⅱ-3〉 미국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들의 의회 증언 비율(1999~2008)

싱크탱크	AEI	CSIS	Heritage	CATO	RAND	Urban Institute	기타
비율	21%	17%	15%	13%	11%	10%	13%

출처: Alek Chance, "Think Tank in the United States: Activities, Agendas, and Influence," *ICAS Report 2016* (Washington D.C.: Institute for China-America Studies, 2016)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관해 미 의회에서 이루어진 증언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싱크탱크 소속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Ⅱ-4〉와 〈표 Ⅱ-5〉는 115대 회기, 즉 2017~2018년 사이 미국 상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이뤄진 청문회 현황과 이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명단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Ⅱ-4〉 115대 회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전문가 증언 현황

날짜	위원회 주제	주재 의원	전문가
1/31/2017	Full Committee Hearing Confronting the North Korea Threat : Reassessing Policy Options	Bob Corker (R-TN)	- Nicholas Eberstadt (AEI) - Scott Snyder (CFR)
6/22/2017	Full Committee Hearing North Korea: Recent Developments	Bob Corker (R-TN)	- Joseph Y. Yun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Korea And Japan;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Department Of State)
6/28/2017	Full Committee Hearing North Korea : Recent Developments	Bob Corker (R-TN)	- Joseph Y. Yun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Korea And Japan;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Department Of State)
7/25/2017	Subcommittee Hearing Assessing The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Cory Gardner (R-CO)	- Susan A. Thornton (Acting Assistant Secretary,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Department Of State) - Bruce Klingner (Heritage) - Leon Sigal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날짜	위원회 주제	주재 의원	전문가
11/7/2017	Briefing North Korea's Cyber Capabilities And U.S. Policy Response	Cory Gargner (R-CO)	– Robert L. Strayer (Deputy Assistant Secretary; Cyber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Policy, Department Of State)
6/5/2018	Subcommittee Hearing Next Steps On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Cory Gardner (R-CO)	– Victor Cha (CSIS) – Joseph Y. Yun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Korea And Japan;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Department Of State)

출처: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oreign.senate.gov); 본 표에 명기된 전문가들의 소속은 청문회가 개최되었던 시점의 소속을 반영함.

〈표 II-5〉 115대 회기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가 증언 현황

날짜	주제	주재의원	전문가
2/7/2017	Full Committee Hearing Countering The North Korean Threat : New Steps in U.S. Policy	Ed Royce (R-CA)	– Victor Cha (CSIS) – Sue Mi Terry (Bower Group Asia) – Anthony Ruggiero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 Robert L. Gallucci (Georgetown University)
3/21/2017	Subcommittee Hearing Pressuring North Korea : Evaluation Options	Ted Yoho (R-FL)	– Bruce Klingner (Heritage) – Sung-Yoon Lee (Tuft University) – Anthony Ruggiero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9/12/2017	Full Committee Hearing Sanctions, Diplomacy, And Information : Pressuring North Korea	Ed Royce (R-CA)	– Susan Thornton (Acting Assistant Secretary,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Department Of State) – Marshall Billingslea (Acting Secretary, Office of 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 Department of Treasury)

날짜	주제	주재의원	전문가
11/1/2017	Full Committee Hearing An Insider's Look At The North Korean Regime	Ed Royce (R-CA)	- Tae Yong-Ho (Former Deputy Chief Of Mission, Embass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The United Kingdom)

출처: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홈페이지(http://foreignaffairs.house.gov); 본 표에 명기된 전문가들의 소속은 청문회가 개최되었던 시점의 소속을 반영함.

〈표 Ⅱ-4〉와 〈표 Ⅱ-5〉에서 알 수 있듯 한반도 문제에 관한 싱크탱크 전문가들의 의회 청문회 증언은 대부분 미국 내에서 주류 한반도 전문가이자 한국에도 잘 알려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전·현직 행정부 관리를 제외하고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들은 빅터 차(Victor Cha), 수미 테리(Sue Mi Terry),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니콜라스 에버슈타트(Nicholas Eberstadt),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등 대개 중도보수에서 보수의 이념적 정향을 가진 이들로서, 이는 현재 상하원 여당이 공화당인 점에 기인할뿐만 아니라 2018년 북미정상회담 직전 한반도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인 "최대압박과 관여"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주목할 만한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기득권주의 성향과는 달리 미 의회에서 접촉한 전문가는 기존의 한반도 정책 주류 전문가임을 알 수 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집단 규모가 작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또한 문재인 정부 등장으로 한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했다 하더라도 미국 대북정책의 기본 입장은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사이버 안보 관련 미국 국방부와 재무부측 관리를 초청함으로써 의회에서 입안할 수 있는 대북제재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영향력 행사 행위를 통해 싱크탱크는 정치인과 행

정부의 주의를 끌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더욱 많은 재정후원자들로부터의 지원을 얻어낼 수 있기에, 이념적 양극화와 예산확보과정은 상호 강화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7)]

예컨대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는 미국 민주당과 연대하고 있으며,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경우 미국 공화당과 연대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브루킹스연구소는 그 영향력을 상실했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중도성향으로 그 이념적 성향을 이동시키기도 하였다.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의 경우 보수적 성향의 후원자들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얻기 위해 보수적인 정책 제안을 다수 제공했으며, 브루킹스연구소는 진보적 관점에서 헤리티지재단의 연구와 정책 제안을 비판함으로써 중도성향의 후원자들의 지원을 확보하고자 했다.[8)] 이러한 단적인 예는 예산 확보를 위해 싱크탱크들이 재정 후원 집단의 집단적 이념적 지향에 맞추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표 II-6〉 이념별 주요 재정 지원 그룹

진보 성향	보수 성향
Annie E. Casey Foundation	Lynde and Harry Bradley Foundation
Arca Foundation	John M. Olin Foundation
Charles Stewart Mott Foundation	Richard and Helen DeVos Foundation
Ford Foundation	Sarah Scaife Foundation
MacArthur Foundation	Carthage Foundation
McKnight Foundation	Shelby Cullom Davis Foundation
Moriah Fund, inc.	Charles G. Koch, David H. Koch Foundation

7) Donald E. Abelson, *Capital Idea: Think Tank and US Foreign Policy* (New York: McGill-Queen's Press-MQUP, 2006), pp. 147~162.

8) Kubilay Yado Arin, *Think Tanks: The Brain Trusts of US Foreign Policy (*Germany: Springer, 2014), pp. 35~44.

진보 성향	보수 성향
Nathan Cummings Foundation	Phillip M. McKenna Foundation
Noyce Foundation	Earhart Foundation
Open Society Institute	Claude R. Lambe Charitable Foundation
Pew Charitable Trusts	Smith Richardson Foundation
Rockefeller Brothers Fund	Henry Salvatory Foundation
Rockefeller Foundation	

출처: James G. McGann, *Think Tanks and Policy Advice in the United States: Academics, Advisors and Advocates* (London: Routledge, 2007).

〈표 Ⅱ-6〉은 싱크탱크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미국 내 주요 재단의 명단이다. 물론 싱크탱크의 역량이 확인된 후에는 이러한 관계를 넘어서 많은 곳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주요 싱크탱크에 국한된 경우이며 대부분의 경우는 재정 지원을 받기위해 후원자 재단의 이념적 지향에 부합하는 정책 제안과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가) 국제평화를 위한 카네기기금(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10년 창설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싱크탱크로서, 주로 글로벌 환경 변화와 관련한 공공정책을 제안해왔다. 앤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의 천만 달러 공여를 바탕으로 창설되었다. 카네기 기금의 헌장은 '전쟁을 종식시키고, 문명의 진보를 위해' 기금을 창설했다고 그 미션(mission)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연구 분야도 다양한 갈등 및 위협에 대한 평화적 관여(peaceful engagement)의 방안을 도출해내는데 있다. 2006년부터 공격적인 네트워크 확장을 시도하여, 본부는 뉴욕에 위치하지만 북경, 베이루트, 브뤼셀, 모스크바, 워싱턴에 연구센터를 건립하였다. 이들 세계 분소를 포함한

카네기 기금 네트워크는 기금 내 국제이사회(international board of trustee)에 의해 관리되며, 세계분소에서의 연구는 글로벌 관리 그룹(global management group)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미션을 반영하듯 대부분의 연구와 정책제안은 상당히 진보적이며 다양한 영역에서의 평화 유지 및 구축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전문가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지역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념적 시각에서 현안 분석과 정책 제안을 하고 있으며 그 입장도 매우 다양하다.

(나)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1921년 창설된 외교협회는 독립적이고 초당적 멤버십 기구이자 싱크탱크, 또 출판사로서 정부 관료, 비즈니스 경영자, 언론인, 교육자와 학생, 시민운동 및 종교 지도자 등 각계각층의 집단에게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외정책을 이해시키고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뉴욕과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고위 정부관료와 의회 지도자, 세계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제현안을 논의하고 토론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이 미션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외교협회에서 다루는 현안과 지역은 국방, 외교, 경제, 에너지, 보건, 인권, 사회이슈 등 다양하며, 동시에 아시아, 유럽,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지역을 전부 연구한다. 이를 통해 중도적 입장에서 분석을 하며, 정책적 제안 역시 평균적으로 중도적 입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속 연구원들이 한반도를 전문적으로 다루기보다 일본과 중국 연구와 함께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압박 캠페인과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다)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1962년 데이빗 앱셔(David Abshire)와 알레이 버크(Arleigh Burke) 제독에 의해 창설된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는 국방 및 안보문제 연구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소는 펜실베니아대학에서 매년 발표하는 싱크탱크 인덱스의 1위를 지난 7년간 차지하였으며,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어 미국 각 행정기관 및 백악관과 지리적으로 인접해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본 연구소의 이사회 의장은 토머스 프리즈커(Thomas Pritzker)로서, 조지아주 민주당 상원의원이었던 샘 넌(Sam Nunn)의 뒤를 이었다. 또한 본 연구소의 CEO는 존 햄리(John Hamre)이다. 토머스 프리즈커의 경우 시카고대학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스펜 전략그룹(Aspen Strategic Group)에도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소의 한반도 문제 연구는 대부분 중도 보수적 시각으로 진행되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미중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국제질서, 그리고 북한의 인권, 국방 및 안보전략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정에 대해 '최대압박' 및 제재 캠페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현재의 동북아 세력균형이 변화되지 않아야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라)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

카토연구소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의 시각으로 공공정책을 제안한다. 이념적 지향이 뚜렷한 연구소로서, 개인의 자유, 제한적 정부, 시장의 자유, 평화를 표방하는 정책 제안과 연구의 미션을

보유한다. 1977년에 창설되었고, 18세기 영국에서 출판되었던 카토의 편지(Cato's Letter)에서 모티브를 얻어 연구소명을 카토로 정하게 되었다. 이때 카토의 편지는 에세이집으로, 개인의 자유와 제한적 정부, 시장의 자유를 표방한 미국혁명이 전 세계에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 연구와 제안을 한다.

이념적 지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카토의 재정은 정부지원보다는 80% 이상이 개인 회원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며, 그 외에 도서 출판, 기업과 재단으로부터의 후원에 의존한다.

대부분의 연구는 미국 내 공공정책에 관한 것이나, 연구소의 이념적 정향에 맞춘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 취해야할 입장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제시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외교협회나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에서의 주류적 접근법과는 달리 미국의 동아시아 공약 철회 혹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과도한 영향력을 지적하는 연구도 제시한다. 이것이 카토연구소의 보편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다른 싱크탱크에 비해 동북아 문제에 대한 의견의 스펙트럼이 넓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랜드연구소는 비영리 싱크탱크로서 1948년 더글라스 항공회사(Douglas Aircraft Company)가 미 육군에게 연구 및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차 대전 중 미국전쟁부(War Department)와 과학연구 및 개발부서 등에 의해 미래 무기체계와 군사전략 구상 등을 연구하기 위한 사적 연구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창설 초기 주요 연구 분야는 미래무기체계에 대한 선제적 접근법이었다. 현재는 군사안보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보

건 등 다양한 공공정책영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본부를 두며, 알링턴,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등지에도 분소를 둔다. 또한 랜드연구소는 랜드대학원(Frederick S. Pardee Graduate School)을 통해 석·박사 과정을 운영한다.

랜드연구소의 연구는 단순히 정책적 연구뿐만이 아니라 정량적 방법론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다양한 이론 및 정책 연구가 병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북한문제, 동북아 안보, 핵비확산 등 동아시아 전반과 관련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특히 북한 내부에 관한 연구도 냉전기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왔으며, 북중관계, 북미관계 등의 주제에 관해 이론과 정책적 함의를 접목한 연구들을 제시하고 있다. 정량적 연구방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중립적 입장에서 연구결과를 제시하지만, 군사안보 분야를 연구하는 인력을 다수 갖추고 있어 일반적으로 중도보수에 가까운 정책제안이 주류를 이룬다.

(바)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

1973년 설립된 헤리티지재단은 자유로운 기업, 제한 정부, 개인의 자유, 전통적 미국적 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재단의 미션으로 삼는다. 500,000명에 이르는 개인 후원자들 역시 이러한 헤리티지재단의 보수적 가치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후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은 국내정책, 정치사상, 국제관계, 문화, 경제, 국가안보, 보건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은 '보수적' 방향으로 도출할 것임을 미션에 명시한다.

헤리티지재단이 제45대 대통령선거 직후 발간한 "Mandate for

Leadership" 보고서 가운데 64%의 내용이 현재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예산 결정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가장 잘 반영하고 이해하는 싱크탱크로 인식한다. 이미 2016년 45대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헤리티지재단에 많은 조언을 구했고 대통령 당선 이후로도 인수위원회에 헤리티지재단의 연구원들이 대거 투입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대북정책 및 동북아 정책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며 이를 반영하는 정책 제안들이 주류를 이룬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 모멘텀 유지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보상 혹은 양보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사)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

브루킹스연구소는 1916년 설립된 싱크탱크로서 경제학, 도시공학, 거버넌스, 대외정책과 글로벌 개발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미션은 미국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경제, 안보 및 사회적 복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공공정책을 제안하는데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이념적 정향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라는 평가와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는데, 이는 그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념적 지향과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브루킹스는 1916년 창설 이후로 미국의 유엔 창설과 마셜 플렌, 의회예산소(Congressional Budget Office) 설립 등 다양한 국가정책에 기여했으며, 현재 브루킹스연구소는 카타르 도하, 중국 북경, 인도 뉴델리 등에 분소를 두며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한편 북한 문제 및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대부분의 브루킹스 소속

연구원들은 보수적인 입장이며, 특히 동북아 안보지형을 고려한 미국의 대외정책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한다.

(2) 대학

(가)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Stanford University, Walter H. Shorenstein Asia Pacific Research Center)

스탠퍼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는 국제학연구원(Freeman Spoqli Institute for Internatinoal Studies)의 산하 연구소로서, 1983년 개소하였다. 중국,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미국-아시아 안보, 비교보건정책 등 6개의 주요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과 사적 영역의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는 현재 신기욱 소장이 이끌고 있으며, 북한 비핵화 문제,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관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부상과 세력균형의 변화 등 전통안보 현안뿐만 아니라 역내 만성질병 증가와 인구학적 변화, 4차산업혁명 등 비전통적 안보현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연구소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현안을 정리한 연간보고서를 발간하며, 대학에 위치한 연구소이다 보니 특정한 이념적 정향을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나) 하버드대학교 벨퍼센터(Harvard University,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하버드대학교 벨퍼센터의 경우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국제안보, 외교, 환경 및 자원문제, 과학기술 정책 등에 대한 연구, 교육, 그리고 훈련의 허브로서, 펜실베니아대학의 대학소재 싱크탱크 순위 1

위를 7년째 유지하고 있다. 벨퍼센터의 미션은 두 가지로서, 국제안보 및 과학, 기술, 환경 현안 등의 현안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이끌어가고, 또한 이 영역에서의 차세대 지도자들을 양성하는데 있다. 비록 대학소재 싱크탱크이긴 하지만, 정치, 외교, 군사, 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종사했던 전·현직 종사자들 및 전문가들을 수용하며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제안보 프로그램은 미국의 안보 현안을, 과학, 기술 공공정책 프로그램은 경제 경쟁성과 지속가능성,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연구를, 환경 및 자연자원 프로그램은 환경문제를, 외교 및 국제현안 프로그램은 〈미래 외교 프로젝트〉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국제안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대한 학제 간 영역을 아우르고 있으나, 최근 애쉬 카터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연구소장으로 부임하며 군사 및 안보분야의 연구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의회

미국의 의회는 미국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입법과 예산안 결정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한다. 한편 미국 헌법은 명시적으로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나누고 있으며, 의회의 경우 결의안(resolution), 정책성명서(policy statement), 법안(legislature) 작성, 국제조약 비준(ratification), 그리고 예산 조정 및 예산안 처리 등의 기능을 맡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대외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내 입법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이 의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혹은 어떠한 이념적 입장을 취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그 정치인의 이념적 및 정책적 성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의 영역 안에서 법안 발의 혹은 공동

발의의 형태로 입안된 법안들을 식별하여, 본 절에서는 이에 참여한 의원들의 분포를 식별해보았다. 의원들의 법안발의 혹은 공동 발의 행위의 동기는 물론 단순히 이념적 정향이나 자신의 정책적 방향에 따르지만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질 수도 있으며, 의회 내 주요 위원회에 배정되기 위한 목표를 위해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 발의 혹은 발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해당 의원이 관련 현안에 관여하고 있는 다른 의원들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법도 분석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7〉 115대 회기 북한 관련 미 의회 법안 현황

날짜	법안 No.	법안명	공동 발의자
7/13/2017	S.1562	North Korean Enabler Accountability Act of 2017	Sen. Gardner, Cory [R-CO] Sen. Markey Edward J. [D-MA] Sen. Menendez, Robert [D-NJ] Sen. Portman, Rob [R-OH] Sen. Rubio, Marco [R-FL] Sen. Cotton, Tom [R-AR] Sen. Boozman, John [R-AR] Sen. Cruz, Ted [R-TX]
10/2/2017	H.R. 3898	Otto Warmbier North Korea Nuclear Sanction Act	Rep. Barr, Andy [R-KY-6] Rep. Hollingsworth, Trey [R-IN-9] Rep. Moore, Gwen [D-WI-4] Rep. Perlmutter, Ed [D-CO-7] Rep. Hill, J. French [R-AR-2] Rep. Vargas, Juan [D-CA-51] Rep. Sinema, Kyrsten [D-AZ-9] Rep. Williams, Roger [R-TX-25] Rep. Delaney, John K. [D-MD-6] Rep. Messer, Luke [R-IN-6] Rep. Rothfus, Keith J. [R-PA-12] Rep. Gottheimer, Josh [D-NJ-5] Rep. Sherman, Brad [D-CA-30] Rep. Pittenger, Robert [R-NC-9] Rep. Maloney, Carolyn B. [D-NY-12] Rep. Davidson, Warren [R-OH-8]

날짜	법안 No.	법안명	공동 발의자
			Rep. Heck, Denny [D-WA-10] Rep. Love, Mia B. [R-UT-4] Rep. Poliquin, Bruce [R-ME-2]
4/26/2017	H.R.2175	North Korea Intelligence Enhancement Act	Rep. Murphy, Stephanie N. [D-FL-7] Rep. Gallego, Ruben [D-AZ-7] Rep. Moulton, Seth [D-MA-6] Rep. Hanabusa, Colleen [D-HI-1] Rep. DelBene, Suzan K. [D-WA-1] Rep. Bordallo, Madeleine Z. [D-GU-At Large] Rep. Castro, Joaquin [D-TX-20] Rep. Kilmer, Derek [D-WA-6] Rep. Evans, Dwight [D-PA-2] Rep. Sinema, Kyrsten [D-AZ-9] Rep. Hastings, Alcee L. [D-FL-20] Rep. Bera, Ami [D-CA-7] Rep. Rosen, Jacky [D-NV-3] Rep. Veasey, Marc A. [D-TX-33]
3/21/2017	S.672	North Korea State Sponsor of Terrorism Designation Act of 2017	Sen. Cruz, Ted [R-TX] Sen. Tillis, Thom [R-NC] Sen. Heller, Dean [R-NV] Sen. Murkowski, Lisa [R-AK] Sen. Rubio, Marco [R-FL] Sen. Sullivan, Dan [R-AK] Sen. Gardner, Cory [R-CO] Sen. Inhofe, James M. [R-OK] Sen. Wicker, Roger F. [R-MS] Sen. Perdue, David [R-GA]
7/14/2017	H.R.3261	North Korea Follow the Money Act	Rep. Torres, Norma J. [D-CA-35] Rep. Wagner, Ann [R-MO-2] Rep. Evans, Dwight [D-PA-2] Rep. Stefanik, Elise M. [R-NY-21] Rep. Davis, Susan A. [D-CA-53]
1/12/2017	H.R.479	North Korea State Sponsor of Terrorism Designation Act of 2017	Rep. Poe, Ted [R-TX-2] Rep. Sherman, Brad [D-CA-30] Rep. Weber, Randy K., Sr. [R-TX-14] Rep. Yoho, Ted S. [R-FL-3] Rep. Cook, Paul [R-CA-8] Rep. Issa, Darrell E. [R-CA-49] Rep. Wilson, Joe [R-SC-2]

날짜	법안 No.	법안명	공동 발의자
5/25/2917	H.R.2732	North Korea Travel Control Act	Rep. Schiff, Adam B. [D-CA-28] Rep. Wilson, Joe [R-SC-2] Rep. Himes, James A. [D-CT-4] Rep. Cohen, Steve [D-TN-9] Rep. Veasey, Marc A. [D-TX-33] Rep. Fitzpatrick, Brian K. [R-PA-8] Rep. Slaughter, Louise McIntosh [D-NY-25] Rep. Scott, Austin [R-GA-8] Rep. Flores, Bill [R-TX-17] Rep. Dunn, Neal P. [R-FL-2] Rep. Shea-Porter, Carol [D-NH-1] Rep. Connolly, Gerald E. [D-VA-11] Rep. Zeldin, Lee M. [R-NY-1] Rep. Sherman, Brad [D-CA-30]
7/19/2017	S. 1591	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 Involving North Korea Act of 2017	Sen. Van Hollen, Chris [D-MD] Sen. Toomey, Pat [R-PA] Sen. Cruz, Ted [R-TX] Sen. Scott, Tim [R-SC] Sen. Hirono, Mazie K. [D-HI] Sen. Cotton, Tom [R-AR] Sen. Tester, Jon [D-MT] Sen. Cortez Masto, Catherine [D-NV] Sen. Warren, Elizabeth [D-MA] Sen. Schatz, Brian [D-HI] Sen. Kennedy, John [R-LA] Sen. Brown, Sherrod [D-OH] Sen. Casey, Robert P., Jr. [D-PA] Sen. Crapo, Mike [R-ID] Sen. Blumenthal, Richard [D-CT] Sen. Durbin, Richard J. [D-IL]
4/28/2017	H.R. 2231	To establish a joint commission on North Korea and for other purposes	Rep. DelBene, Suzan K. [D-WA-1] Rep. Moulton, Seth [D-MA-6] Rep. Peters, Scott H. [D-CA-52] Rep. Murphy, Stephanie N. [D-FL-7] Rep. Bera, Ami [D-CA-7]
6/26/2018	S. 3142	North Korea Policy Oversight Act of 2018	Sen. Menendez, Robert [D-NJ] Sen. Gardner, Cory [R-CO] Sen. Coons, Christopher A. [D-DE] Sen. Schatz, Brian [D-HI]
6/6/2018	H.R. 6012	North Korea Nuclear Baseline Act	Rep. Engel, Eliot L. [D-NY-16] Rep. McCaul, Michael T. [R-TX-10] Rep. Sherman, Brad [D-CA-30]

날짜	법안 No.	법안명	공동 발의자
			Rep. Yoho, Ted S. [R-FL-3] Rep. Lieu, Ted [D-CA-33] Rep. Russell, Steve [R-OK-5] Rep. Lance, Leonard [R-NJ-7] Rep. Cicilline, David N. [D-RI-1] Rep. Titus, Dina [D-NV-1] Rep. Deutch, Theodore E. [D-FL-22]
10/26/2017	S. 2016	No Unconstitutional Strike Against North korea Act of 2017	Sen. Markey, Edward J. [D-MA] Sen. Warren, Elizabeth [D-MA] Sen. Merkley, Jeff [D-OR] Sen. Sanders, Bernard [I-VT]
4/5/2018	H.R. 5434	Preventing Preemptive War in North Korea Act of 2018	Rep. Lieu, Ted [D-CA-33]
10/31/2017	S. 2047	Preventing Preemptive war in North Korea act of 2017	Sen. Murphy, Christopher [D-CT] Sen. Duckworth, Tammy [D-IL] Sen. Schatz, Brian [D-HI] Sen. Booker, Cory A. [D-NJ] Sen. Sanders, Bernard [I-VT] Sen. Merkley, Jeff [D-OR] Sen. Warren, Elizabeth [D-MA] Sen. Udall, Tom [D-NM] Sen. Gillibrand, Kirsten E. [D-NY] Sen. Wyden, Ron [D-OR] Sen. Feinstein, Dianne [D-CA] Sen. Hirono, Mazie K. [D-HI] Sen. Stabenow, Debbie [D-MI] Sen. Harris, Kamala D. [D-CA]
10/26/2017	H.R.414	No Unconstitutional Strike Against North Korea Act	Rep. Nolan, Richard M. [D-MN-8] Rep. Welch, Peter [D-VT-At Large] Rep. Ellison, Keith [D-MN-5] Rep. Pallone, Frank, Jr. [D-NJ-6] Rep. Slaughter, Louise McIntosh [D-NY-25] Rep. Beyer, Donald S., Jr. [D-VA-8] Rep. Nadler, Jerrold [D-NY-10] Rep. Grijalva, Raul M. [D-AZ-3] Rep. Hanabusa, Colleen [D-HI-1] Rep. Raskin, Jamie [D-MD-8] Rep. Schakowsky, Janice D. [D-IL-9] Rep. Jayapal, Pramila [D-WA-7] Rep. Cohen, Steve [D-TN-9]

날짜	법안 No.	법안명	공동 발의자
			Rep. Jackson Lee, Sheila [D-TX-18] Rep. Moore, Gwen [D-WI-4] Rep. Evans, Dwight [D-PA-2] Rep. Rush, Bobby L. [D-IL-1] Rep. Blumenauer, Earl [D-OR-3] Rep. Johnson, Henry C. "Hank," Jr. [D-GA-4] Rep. Gabbard, Tulsi [D-HI-2] Rep. Gutierrez, Luis V. [D-IL-4] Rep. Pingree, Chellie [D-ME-1] Rep. Lofgren, Zoe [D-CA-19] Rep. Clarke, Yvette D. [D-NY-9] Rep. Cleaver, Emanuel [D-MO-5] Rep. Davis, Danny K. [D-IL-7] Rep. Payne, Donald M., Jr. [D-NJ-10] Rep. Watson Coleman, Bonnie [D-NJ-12] Rep. Wilson, Frederica S. [D-FL-24] Rep. Capuano, Michael E. [D-MA-7] Rep. Cicilline, David N. [D-RI-1] Rep. Garamendi, John [D-CA-3] Rep. Barragan, Nanette Diaz [D-CA-44] Rep. McCollum, Betty [D-MN-4] Rep. DeSaulnier, Mark [D-CA-11] Rep. Beatty, Joyce [D-OH-3] Rep. Lewis, John [D-GA-5] Rep. Clark, Katherine M. [D-MA-5] Rep. Bonamici, Suzanne [D-OR-1] Rep. Napolitano, Grace F. [D-CA-32] Rep. Chu, Judy [D-CA-27] Rep. Huffman, Jared [D-CA-2] Rep. Velazquez, Nydia M. [D-NY-7] Rep. DeFazio, Peter A. [D-OR-4] Rep. Sherman, Brad [D-CA-30] Rep. Serrano, Jose E. [D-NY-15] Rep. Tsongas, Niki [D-MA-3] Rep. Carbajal, Salud O. [D-CA-24] Rep. Waters, Maxine [D-CA-43] Rep. Eshoo, Anna G. [D-CA-18] Rep. DeLauro, Rosa L. [D-CT-3] Rep. O'Rourke, Beto [D-TX-16]
1/18/2018	H.R. 4837	No Unconstitutional Strike Against North Korea Act	Rep. Beyer, Donald S., Jr. [D-VA-8] Rep. Nadler, Jerrold [D-NY-10]

날짜	법안 No.	법안명	공동 발의자
			Rep. Grijalva, Raul M. [D-AZ-3] Rep. Hanabusa, Colleen [D-HI-1] Rep. Raskin, Jamie [D-MD-8] Rep. Schakowsky, Janice D. [D-IL-9] Rep. Jayapal, Pramila [D-WA-7] Rep. Cohen, Steve [D-TN-9] Rep. Jackson Lee, Sheila [D-TX-18] Rep. Moore, Gwen [D-WI-4] Rep. Evans, Dwight [D-PA-2] Rep. Rush, Bobby L. [D-IL-1] Rep. Blumenauer, Earl [D-OR-3] Rep. Johnson, Henry C. "Hank," Jr. [D-GA-4] Rep. Gabbard, Tulsi [D-HI-2] Rep. Gutierrez, Luis V. [D-IL-4] Rep. Pingree, Chellie [D-ME-1] Rep. Lofgren, Zoe [D-CA-19] Rep. Clarke, Yvette D. [D-NY-9] Rep. Cleaver, Emanuel [D-MO-5] Rep. Davis, Danny K. [D-IL-7] Rep. Payne, Donald M., Jr. [D-NJ-10] Rep. Watson Coleman, Bonnie [D-NJ-12] Rep. Wilson, Frederica S. [D-FL-24] Rep. Capuano, Michael E. [D-MA-7] Rep. Cicilline, David N. [D-RI-1] Rep. Garamendi, John [D-CA-3] Rep. Barragan, Nanette Diaz [D-CA-44] Rep. McCollum, Betty [D-MN-4] Rep. DeSaulnier, Mark [D-CA-11] Rep. Beatty, Joyce [D-OH-3] Rep. Lewis, John [D-GA-5] Rep. Clark, Katherine M. [D-MA-5] Rep. Bonamici, Suzanne [D-OR-1] Rep. Napolitano, Grace F. [D-CA-32] Rep. Chu, Judy [D-CA-27] Rep. Huffman, Jared [D-CA-2] Rep. Velazquez, Nydia M. [D-NY-7] Rep. DeFazio, Peter A. [D-OR-4] Rep. Sherman, Brad [D-CA-30] Rep. Serrano, Jose E. [D-NY-15] Rep. Tsongas, Niki [D-MA-3] Rep. Carbajal, Salud O. [D-CA-24]

날짜	법안 No.	법안명	공동 발의자
			Rep. Waters, Maxine [D-CA-43] Rep. Eshoo, Anna G. [D-CA-18] Rep. DeLauro, Rosa L. [D-CT-3] Rep. O'Rourke, Beto [D-TX-16] Rep. Maloney, Carolyn B. [D-NY-12] Rep. Walz, Timothy J. [D-MN-1] Rep. Scott, Robert C. "Bobby" [D-VA-3] Rep. McNerney, Jerry [D-CA-9] Rep. Tonko, Paul [D-NY-20] Rep. Espaillat, Adriano [D-NY-13] Rep. Cummings, Elijah E. [D-MD-7] Rep. Courtney, Joe [D-CT-2] Rep. Jeffries, Hakeem S. [D-NY-8] Rep. Lowenthal, Alan S. [D-CA-47]
6/13/2018	H.R. 6094	To Prohibit Lifting of US Sanctions imposed with respect to North Korea	Rep. Boyle, Brendan F. [D-PA-13] Rep. Norman, Ralph [R-SC-5]
10/25/2017	H.R.4123	North Korea Ballistic Missile Investigation Act	Rep. Gottheimer, Josh [D-NJ-5] Rep. Rooney, Francis [R-FL-19]
5/11/2017	S.1118	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17	Sen. Rubio, Marco [R-FL] Sen. Cardin, Benjamin L. [D-MD]* Sen. Gardner, Cory [R-CO]* Sen. Menendez, Robert [D-NJ]* Sen. Cruz, Ted [R-TX]* Sen. Hatch, Orrin G. [R-UT] Sen. Coons, Christopher A. [D-DE]

출처: 미국 의회 홈페이지 (http://www.congress.gov)

115대 회기 동안 총 19개의 북한 관련 법안을 상정하였는데, 대부분의 경우 의회는 상하원을 막론하고 경제제재를 미국 대북정책의 주요수단으로서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7년도 말부터 2018년도 초기까지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을 반대하는 법안과 북한과의 예방전쟁을 반대하는 법안이 상하원에서 총 5건을 상정하였는데(H.R. 4737, H.R. 4140, S. 2016, S. 2047, H.R. 5434), 이는 또한 한반도에서의 전쟁뿐만 아니라 그 외의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반대함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대북정책에 있어서 주요 수단은 제재를 중심으로 한 대북압박임을 알 수 있으며, 심지어 제재해제를 반대하는 법안(H.R. 6094)도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은 고려해야 한다. 즉, 현재로서 미국이 갖고 있는 유일한 대북 레버리지는 제재인 것이며, 이것은 단순히 북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대북제재에 지속적으로 동참하도록 미국이 설득하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서구 국가들의 대 러시아 제재 역시 같은 맥락에서 대북 제재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의회 내부에서는 대북제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의견일치를 보고 있으나, 제재 완화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한다. 즉 북한의 비핵화 조치 수위에 따라 제재 완화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인데, 대개 다음의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눈다. 첫째, 핵프로그램 동결에 대한 사찰단 검증 이후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Jeff Flake, R-Arizona), 둘째, 핵프로그램 동결뿐만이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탄두 일부 폐기이후로 제재를 완화해야한다는 입장 (Chris Coons, D-Delaware), 셋째, 핵프로그램 전면 폐기 및 검증 이후(Ted Cruz, R-Texas; Marco Rubio, R-Florida)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컨대 미국 의회내부에서는 '최대압박과 관여'의 접근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에 대한 출구전략으로서의 제재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에 관해서 의회 내의 입장은 대부분 일관적으로 완전한 비핵화 이후의 시점을 선호한다. 민주당의 경우 오히려 공화당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입장을 보이는데, 민주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달성하지 않는 이상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포함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이에 대한 의회비준을 용

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다.[9]

또한 미국 의회는 2018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통해 현재 약 2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을 22,000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의무화했으며, 〈북한 핵기준 법안(North Korea Nuclear Baseline Act, H.R. 6012)〉을 통해 미국 정부가 의회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진전 기준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이는 과거 이란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의회가 배제되며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을 통해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이 마무리되었던 선례에 기인한다.

요컨대 이러한 분위기는 '최대압박과 관여'의 대북정책이 동북아 지역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의회 상하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다시 말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제시되기 이전에는 의회차원의 제재완화 혹은 유예조치가 도출되기 어려운 환경임을 말해준다.

다. 주요 전문가

(1) 국제정치/전략 그룹

■ **마이클 스웨인(Michael Swain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마이클 스웨인은 카네기기금 선임연구원으로서, 주로 중국의 안보정책을 연구한다. 과거 랜드연구소에서 선임정책분석가로 재직하였으며, 중국 국방 및 대외정책, 미중관계, 동북아 국제관계에 대해

9) United States Senate, "US Senate Democrat's Letter to President Trump," June 14, 2018 〈https://www.foreign.senate.gov/imo/media/doc/06-04-18%20Menendez %20joint%20letter%20to%20Trump%20on%20NK%20Summit.pdf〉 (Accessed October 5, 2018).

연구했다. 하버드대학 정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정부에 대한 자문활동과 동시에 중국과 안보관련 다수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이끌어왔다. 마이클 스웨인은 한반도 문제 및 동북아 국제질서에 관한 중국의 시각을 고려한 분석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미국의 대외정책이 균형잡힌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조언한다.

■ **더그 밴도우(Doug Bandow, Cato Institute)**

더그 밴도우는 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서 대외정책과 시민적 자유를 주요 연구 분야로 삼는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했으며, 저널 〈Inquiry〉의 편집장으로 활동 중이다. 스탠퍼드대학교 JD(Juris Doctor)학위를 취득했으며, 북한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 비핵화, 동북아 안보질서에 관한 연구와 정책 제안을 수행중이다. 워싱턴 D.C. 싱크탱크의 주류적 입장과는 반대로 동아시아 미군 주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는다. 한국의 대북접근 방식에 대해서 우호적이며, 최근 '평화가 목적이고, 비핵화는 수단'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지하고 있는 북미 간 대화 국면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칼 베이커(Carl W. Baker, CSIS)**

칼 베이커는 Pacific Forum CSIS executive director로서, CSCAP (Council of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멤버로 역임중이다. CSIS Pacific Forum 이직 전 미국방부 산하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교수로 재직하였고, 미 공군장교로 근무하며 한국과 필리핀 근무(유엔군사정전위원회 정치군사분야 장교이자 주한미공군 정치경제정보장교로 근무)한 바 있다.

미국 공군 전 대학(US Air War College) 졸업하였고, 오클라호마 대학 공공행정 석사, 아이오와 대학 인류학 학사를 취득하였다. 주

요 연구 분야는 예방외교, 다자안보건축,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핵안보 등이다. 칼 베이커는 비록 안보 연구자이긴 하지만 현재 북미 간의 대화 국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남북한 간의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무력을 통해서는 한반도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평화 국면 유지와 대화를 통해 비핵화 협상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한다.

■ **랄프 코사(Ralph Cossa, CSIS)**

랄프 코사는 Pacific Forum CSIS 회장으로서, CSCAP(Council of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창단 위원이자 ASEAN Regional Forum 전문가 그룹 멤버,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미중관계 국가위원회 이사로 역임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미국의 아태지역 안보현안이다.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2017년 '코피전략'이 우려하던 상황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평가한다.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협상 의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향후 미사일 발사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앤드류 스코벨(Andrew Scobell, 랜드연구소)**

정치학 선임연구원으로서, 랜드연구소 이직 이전 Texas A&M University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미 육군대학(US Army War College) 전략연구연구소 연구교수, 디킨슨대학(Dickinson College) 정치학과 외래교수로 역임하였다. 컬럼비아대학교 정치학 박사(Ph.D. Political Science)이며, 홍콩 태생으로 주로 중국의 국방정책과 동북아 및 중동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와 같이 중국연구와 함께 북한의 국방정책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기에, 북한 비핵화와 현재의 북미 협상과정에 대해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리차드 부시(Richard C. Bush, Brookings Institute)**

브루킹스연구소 대만연구소장(Yen Koo Chair in Taiwan Studies)이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로렌스대학(Lawrence University) 학사, 컬럼비아대학교 정치학 석·박사 학위(Ph.D. Political Science)를 취득하였다. 브루킹스연구소 재직 전에는 1983년 미의회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 및 태평양관계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역임하였고, 1995년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동아시아서기관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브루킹스연구소 이직 전까지 대만의 미국연구소장(American Institute in Taiwan)으로 2002년까지 재직한 바 있다. 주로 중국의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와 더불어 북중관계 및 한반도에 관한 연구도 진행한 바 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의 시각을 겸비한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정책제안을 한다. 북한의 레토릭과 협상은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의 와해와 미국의 대한반도 확장억지의 종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 **조나단 폴락(Jonathan Pollack, Brookings Institute)**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서, 브루킹스 재직 전 미국 해전대학(US Naval War College) 아시아 및 태평양학 교수 및 랜드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미시건 대학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브랜다이스대학(Brandeis University), 랜드대학원(RAND Graduate School), 캘리포니아대학 로스앤젤레스(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강사로 재직하였다. 현재 국가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 상임위원이며, 국제안보 및 군비통제위원회 명예위원, 미중관계 국가위원회 및 IISS, CFR member로 역임 중이다.

중국의 국가안보전략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으며, 미중관계, 미국의 아시아 및 태평양 전략, 한국정치와 대외정책, 아시아 국제관계, 핵무기 및 국제안보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현재의 협상국면을 이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이며, 지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은 국제사회 지도자로 등장할 수 있었고 트럼프는 아무런 협상 준비 없이 미디어의 주목만을 받고 싶었을 뿐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

(2) 한반도 문제 연구 그룹

■ 브루스 베넷(Bruce W. Bennett, Land Corporation)

국제관계 및 안보 분야 선임연구원으로서, 주로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전략, 게임이론, 위협 관리, 억지기반 전략, 국방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지역 치원에서는 동북아 지역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한반도 안보문제 전문가로서 북한의 생화학 무기, 한반도 군사균형, 북한 붕괴 및 중국의 잠재적 한반도 개입 시나리오 연구, 미국의 대 한반도 확장억지 및 핵위협 억지 등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다. 캘리포니아공과대학(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경제학 학사, 랜드대학원(Pardee RAND Graduate School) 정책학 박사로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량적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정책제안을 했다. 안보분야 전문가로서 정책의 이념적 정향은 보수에 가깝다.

■ 캐서린 문(Katherine H.S. Moon, Wellesley College/ Brookings Institute)

브루킹스연구소 외래 선임연구원(Non-resident senior fellow)이자 웰슬리대학 아시아학과 및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스미스

대학 학사, 프린스턴대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주로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연구를 진행하며,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의 관계에 대한 연구 수행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남북관계, 동아시아 정치, 북한 내 사회·정치학적 변화, 민족주의, 여성 및 젠더문제, 인권 문제 등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북한 내부 조직 변화 추이를 관찰하며 대외적으로 북한의 레토릭이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핵문제에 관한 태도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긍정정인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 **정 박(Jung H. Pak, Brookings Institute)**

브루킹스연구소 한국학 SK-Korea Foundation Chair이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이전에 중앙정보국(CIA) 및 국가정보국(DNI)에서 동아시아 정치 및 안보 현안 분석관으로 근무하였다. 정부 근무 이전에는 헌터칼리지(Hunter College)에서 강사로 재직하였으며 한국에서 풀브라이트 학자(Fulbright Scholar)프로그램 참가자로서 여러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부 재직 시 대외정책, 리더십, 대량살상무기, 확산, 동아시아 지역안보 등 다수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최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북한체제 및 북한의 대내외정책, 북한 내부 안정성, 남북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북한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제재를 유지해야하며,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건들로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에반스 리비어(Evans J. R. Revere, Brookings Institute)**

브루킹스연구소 외래 선임연구원(Nonresident Senior Fellow)이자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그룹 선임고문(Albright Stonebridge

Group)으로 역임 중이다. Korea Society 회장 및 CEO로 역임한 바 있다. 프린스턴대학교 동아시아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공군 전역하였다. 중국어, 한국어, 일어에 능통하며 2007년까지 미국 국무부 재직하였고, 주한미국대사관 Deputy Chief로 재직하며 북한과의 협상에 다수 참여한 바 있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 주장한 바 있으며, 현재의 비핵화 협상이 성공적일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m, Brookings Institute)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전 미 국무부 비확산 및 군비통제 특별 자문관(2009~2013), 전 CSIS 선임자문관, 전 비확산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Non-proliferation, 1999~2001), 정치군사 부차관보(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ate for political-military affairs, 1992~1999), 국무부 정책기획위원회 멤버(Member of the state department policy planning staff, 1986~1992)로 재직하였다.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 정부학 학사, 프린스턴대학교(Princeton University Woodrow Wilson Center) 공공정책 및 국제관계 석사를 취득하였다.

정부 재직 시 미국의 이란 핵정책 입안 및 수행하였으며 특히 오바마 행정부 비확산 정책 입안, 한미원자력협정 협상 미국 대표단에 참가하였다. 브루킹스연구소에서는 군비통제, 이란, 북한, 핵비확산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다. 아인혼은 북한에 대해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진정성에 대해 이해하지만, 그러한 태도의 변화는 북한 핵무기의 완성에 근거한 자신감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다시 말해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 실질적인 진정성 및 가능성에 대해 낮게 평가한다.

■ **스캇 스나이더(Scott Snyde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스캇 스나이더는 한미정책 프로그램 소장이자 한국학 선임연구원으로 외교협회에 재직 중이다. 외교협회 이직 전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 국제관계 프로그램 및 CSIS Pacific Forum; 미국 평화연구소(US Institute of Peace) 아시아 프로그램, Asia Society에 재직한 바 있다. 또한 스탠퍼드대학교 쇼렌스타인 아태연구센터 Pantech Visiting Fellow로 연구생활을 하였으며, 아베 펠로우십(Abe Fellowship)을 수여받기도 했다. 라이스대학(Rice University) 학사, 하버드대학 동아시아프로그램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이후 연세대학교 Thomas G. Watson Fellow로 재직하기도 했다.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관여하며, 북한 국가위원회 자문위원이자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스캇 스나이더는 북미 간 대화국면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다만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 속도가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진전 속도를 앞지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국면을 유지하고 신뢰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한미 간의 신뢰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데이빗 강(David Kang,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이자 한국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였다. 아시아 국제관계 전반, 경제발전, 안보관계 및 현재 국제관계의 역사적 배경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UC Berkeley) 정치학 박사, 스탠퍼드대학교(Stanford University) 국제관계학 및 인류학 학사를 취득하였다.

■ **스티븐 해거드(Stephen Haggar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고 정치학과 교수로서, 글로벌 정책 및 전략 대학의 한국-태평양 프로그램(Korea-Pacific Program) 소장을 맡고 있다.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정치학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멤버이자 저널 〈Global Asia〉 편집자로서 역임하고 있다. 주로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아태지역연구를 수행하였고, 대북제재, 대북원조 및 경제개혁, 체제전환 연구를 진행했다. 글로벌 정책 및 전략 대학은 한국의 여러 연구소 및 학교와의 전략대화 및 track 2.0대화 다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 대화를 선호하고 현 정부의 접근법에 우호적이나, 기본적으로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과 북한의 전략노선 변화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또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이 더욱 큰 제약조건일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 **매튜 크로닉(Matthew Kroenig, Atlantic Council)**

매튜 크로닉은 현재 조지타운대학교 정부학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시에 싱크탱크인 아틀란틱카운슬의 전략 및 안보연구소 부소장(Deputy Director for Scowcroft Center for Strategy and Security)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정치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조지타운대학교 부임 전에는 CIA 전략 분석 그룹 및 국방장관실, 전략연구실 등 정부에서 근무하였다. 주로 미국의 안보 및 대외정책을 연구하며,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전략경쟁, 신과학기술, 전략적 억지 및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주로 안보연구의 관점에서 북한 핵문제를 연구하며, 특히 북한

핵억지 전략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다. 최근 미국과의 대화국면이 진행되면서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다는 점을 밝히며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 **마커스 놀란드(Marcus Noland,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마커스 놀란드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부회장이자 연구소장으로서(Executive Vice President and Director of Studies) 아시아 및 아프리카 저발전 지역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북한 전문가로 성장하였다. 스와스모어대학(Swarthmore college) 학사, 존스홉킨스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선임경제학자로 역임하였다. 이외에도 예일대학교, 존스홉킨스대학교, 남가주대학교, 동경대학교, 사이타마대학교, KDI등에서 연구원 및 강사를 역임하였고, 북한 경제 전문가로서 한반도 통일문제 및 경제제재에 관해 연구를 수행 중이다.

마커스 놀란드는 북한 내에서 형성 및 발전하고 있는 장마당의 존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발전의 동력은 역설적이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에 근거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마커스 놀란드는 북한의 시장화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빅터 차(Victor Cha, CSIS)**

CSIS 선임 고문이자 한국학 체어(Senior Adviser and Korea Chair)이자 조지타운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 정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아시아 담당(2004~2007)이었고, 6자회담 미국 측 Deputy head of delegation로도 역임하였다. 컬럼비

아대학교 정치학 박사 및 국제관계학 석사, 옥스퍼드대학(Herford College) 철학, 정치, 경제학 석사, 컬럼비아대학 경제학 학사를 취득한 바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미동맹, 동북아 안보, 남북관계, 통일 등이다. 빅터 차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비핵화 협상에 대해 회의적이고, 동시에 남북관계를 강조하는 한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최근 한미공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으며, 남북 간의 발전 속도가 북미 간 협상 속도와 맞춰져야 비핵화 협상이 성공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수미 테리(Sue Mi Terry, CSIS)

수미 테리는 CSIS 선임 연구원으로서, CSIS 이직 전 CIA 한국 현안 선임분석가로 재직(2001~2008)한 바 있다. 또한 조지 부시(G.W. Bush) 및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 국가안보회의 한국, 일본, 대양현안 담당관(2008~2009)으로, 또한 국가정보위원회 동아시아담당 부서기관(2009~2010)으로 재직한 바 있다.

한국 태생이며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 정치학 학사, 터프츠대학 플레처스쿨(Tuft University Fletcher School)에서 국제관계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학위취득 이후 컬럼비아대학 웨더헤드 동아시아연구원(Weatherhead East Asian Institute) 선임연구학자, 바우어그룹아시아(Bowergroup Asia) 한국 담당 선임 고문 등 역임하기도 했다.

수미 테리는 최근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보다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에 더욱 관심이 있으며, 이에 따라 비핵화 협상을 우선순위의 뒤로 늦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미 간 실무진들 간의 협상보다는 지도자 간 협상을 통해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 한다

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한반도 위기설의 시점으로 되돌아 갈 가능성은 없을 뿐 아니라 불가능하다며, 지금의 대화국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 **프랭크 야누치(Frank Jannuzzi, Mansfield Foundation)**

현재 맨스필드재단 회장으로(Mansfield Foundation President/ Chief Executive Officer) 재직 중이다. 과거 앰네스티인터내셔널 부소장(Deputy Executive Director) 미 상원외교위원회 동아시아 및 태평양 분과 정책 담당관 역임(Joe Biden, John Kerry 자문위원), 게이오대학 방문학자로 역임했으며, 미 국무부 정보 및 연구분과 분석관으로 근무했다.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 학사,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John F. Kennedy School) 공공정책학 석사를 취득한 바 있다.

주로 남북관계, 북한 핵문제, 북한인권문제 등 포괄적인으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공감하며 대화국면 유지를 통한 단계적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도 지지한다. 특히 일괄타결 혹은 초기 가시 비핵화(frontload)조치보다는 북한의 안보위협 의식을 줄여주는 방식의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이며, 또한 핵물질 리스트 일괄 제출 보다는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단계적 리스트 작성 및 비핵화 로드맵 구축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Heritage Foundation)**

브루스 클링너는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으로서(Senior Research Fellow) 과거 미국 중앙정보국(CIA) 한국 분과 부책임자, Deputy division chief for Korea로 재직하였고 또한 국방정보위원회에 근무하기도 했다. National War College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National Intelligence College 전략정보학 석사 학위, Middlebury College 정치학 학사를 취득하였다.

북한, 남북관계, 군비통제, 미사일방어 등 주로 한반도 안보현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헤리티지재단의 특색과 일관되게 보수적인 안보정책 제안을 한다. 최근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미국은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에 기반한 정상회담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남북 간의 경협은 유엔제재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 니콜라스 에버슈타트(Nicholas Eberstadt, AEI)

니콜라스 에버슈타트는 미국 기업연구소(AMerican Economic Institute) 정치경제학 소장(Henry Wendt Chair in Political Economy)으로, 주로 한반도 및 아시아 안보문제, 경제발전, 인구학 등 분야의 연구를 진행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US Committee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창단 멤버이며, 월드뱅크, 미국 국무부, 미국 USAID, 미국 센서스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하버드대학 학사, 런던정치경제대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 석사,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Kennedy School of Government) 공공정책학 석사 및 하버드대학 정치경제학 박사 등의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니콜라스 에버슈타트는 북한의 국가이익이 지난 50년간 변한 적이 없으며, 한반도 적화통일과 미국의 영향력 배제를 위한 수단으로 도발과 대화국면을 병행한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평화국면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며, 북한과의 협상은 언제나 제로섬 게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협상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 패트릭 크로닌(Patrick Cronin,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패트릭 크로닌은 신미안보연구소(Center for New American Century)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으로(Senior advisor and senior director of the Asia-Pacific security program) 재직하고 있다. 전 미국 국방대학교(National Defense University) 국가전략연구소 선임담당관으로, 또한 국제전략문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런던 지부에서도 근무했으며, CSIS Vice President/ Director of Research 역임하였고,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에서도 근무한 바 있다. 아시아 태평양 안보, 미국 국방, 대외정책, 개발정책 연구 등 포괄적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연구를 진행한다. 한국정부의 협상국면 유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북한이 여전히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은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기반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에이브라함 덴마크(Abraham Denmark, Wilson Center)

에이브라함 덴마크는 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소장을 맡고 있고 전 국방부 동아태 부차관보(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East Asia)로 재직했으며 그 이전에는 국가 아시아연구소(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부회장으로, 신미안보연구소(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노던콜로라도대학교(University of Northern Colorado) 역사학 학사, 요제프 코벨 국제연구대학(University of Denver Josef Korbel School) 국제안보학 석사를 취득하였고, 이후 북경대학교에서 연수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아태지역 안보 및 미국 국가안보전략이며, 북한 동아태 부차관보로 재직하며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한 바 있다. 현재의 북미 간 비핵화 협상국면에 대해 북한의 살라미 협상 전술에 대해 지적하며, 협상국면이 유지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미국은 정확한 북한 핵리스트에 대한 이해 없이 양보조치를 취하지 말아야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3) 차세대 연구자

■ **밴 잭슨(Van Jackson,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Wilson Center)**

밴 잭슨은 윌슨센터 글로벌 펠로우이자 웰링턴빅토리아대학 교수(Senior Lecturer in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미국 공군 분석관으로 근무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미국 대외정책, 아태안보 현황, 그리고 북한 군사안보정책이다.

■ **앤드류 여(Andrew Yeo,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앤드류 여는 미국 카톨릭대학 정치학과 부교수로서,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위원, (2013~2018), Korea Foundation Grant를 받았으며 맨스필드재단-한국 재단 학자(Mansfield Foundation-Korea Foundation Scholar)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제관계이론, 동아시아 지역주의, 아시아 안보, 내러티브와 담론, 시민사회, 초국가 운동, 미군의 해외기지전략, 한국 국내정치, 북한 정치 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를 진행 중이다.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 정치학 박사,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심리학 및 국제학 학사를 취득하였다.

■ 존 박(John Park, Harvard University)

한국 프로젝트 소장이자, 하버드 케네디스쿨 외래 강사로 재직 중이며, “원자관리 프로젝트” 제하의 북한 핵문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Director of the Korea Project; Adjunct lecturer; Faculty Affiliate Project on Managing the Atom). 주요 연구 분야는 한반도 안보, 북한 제재, 핵비확산 문제이며, 캠브리지대학(Cambridge University) M. Phil, Ph.D.학위를 취득했으며, 하버드에 재직하기 이전 홍콩의 골드만삭스 및 서울 지부 보스턴 컨설팅에서도 근무하기도 했다.

■ 김두연(Duyeon Kim, CNAS)

현재 신미안보연구소 외래 선임연구원(Adjunct senior fellow)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한반도 문제, 핵비확산, 군비통제, 동아시아 국제관계, 미국 핵정책 및 안보정책 연구이다.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Fissile Materials Working Group 위원,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Council of Korean American, Bilateral Korean-American Association 위원으로 역임 중이며, 조지타운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 석사, 시라큐스대학(Syracuse University) 영문학 학사를 취득하였다.

2. 중국

이기현(한국외국어대학교)

가. 중국 네트워크의 특징 및 평가

중국에게 한반도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교류 파트너이다. 그러나 근세기 냉전체재, 한국전쟁의 경험 등으로 인해 중국은 분단된 한반도를 조심스럽고 전략적인 대상으로 인식해왔다. 중국에게 한국은 중국 경제발전의 모델이자 비중 있는 무역 상대국이나, 동시에 중국의 전략적 적대국인 미국의 동맹국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형제국가로 전통적 호혜관계를 추구하는 대상이나, 북한의 핵무력 자주노선은 중국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중국에게 분단된 한반도보다는 통일된 한반도가 이익이 될 것이고, 당연히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도 중국정부는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줄곧 지지해왔다.[10)]

그러나 중국의 속내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유독 강조한다. 이는 중국이 남북대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지한다는 의미이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제일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은 지지할 수 없다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한다. 현재 동북아 국제질서가 미국 주도의 동맹 강화 vs 중러 군사협력 확대 등 신냉전화 되는 추세에서 중국이 통일보다는 세력균형을 동북아 국제질서의 안정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10) 박영호 외,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139~140.

중국이 자주적 통일을 강조하는 이유 역시도 이중적이다. 이는 중국이 한국과 북한을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외세의 개입이 있다면, 통일과정에 중국 역시 개입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최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도 중국은 미국 요소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패턴 역시 이러한 우려를 야기한다. 사실 중국은 예측 불가능한 현상타파적 현상인 한반도 통일보다,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전쟁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현상유지적 현상을 전략적으로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통한 강대국 도약을 위해서는 자국의 주변 국제정치 환경이 안정적인 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정책 그룹에게 한반도 통일은 먼 미래의 일이거나, 일어나지 않을 일인지도 모르며, 좀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중요하지도, 관심이 가는 일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존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행스럽게도 중국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은 중국의 정치인, 정책관료, 지식인, 대중들에게도 유사하게 공유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의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전략적인 외교와 설득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우리의 통일 외교 성과를 효과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중국은 당국가로 불릴 정도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크다. 그러나 개혁·개방의 경험을 거치면서 당정분리의 정치개혁을 시도하였고, 정부의 전문성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 변화에 따라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의 분석과 능력을 중시하게 되었으며, 외교 관료뿐 아니라 정책 전문가 그룹, 언론, 여론 등의 변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11] 이 때문에 중국 정책 네트워

11) 전병곤, 양갑용,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 연구 기관 및 전문가 현황 분석』 (서울:

크에서 싱크탱크와 전문가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국제정치의 복잡성, 다원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 정책결정과정에서 싱크탱크의 전문성이 더욱 필요하게 됨에 따라, 한반도 평화 통일에 우호적인 정보를 확대시키기 위한 싱크탱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의 최고 권력 그룹에서도 다양한 정책 토론회, 자문회의, 정례학습의 제도적 자문 기제를 마련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 분석을 직접 청취, 정책결정에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국책 연구기관 외에도 민간 전문가 그룹에게 정책연구 용역을 제공하여, 다양한 정책 건의를 종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중국사회가 다원화되어가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 역시 중국 공산당과 정부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여론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중국정치의 가장 변화된 현상 중 하나로 중국정부 정책에 여론을 반영하는 사례가 왕왕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가까운 예로 박근혜 정부의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종말고고도지역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외교적 대응에서 중국 정부의 반대 입장도 있었지만, 중국 여론의 반한 감정 확대 역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때문에 다양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의 다양한 정책 네트워크 그룹 중 유효한 정책 네트워크 거점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할 것이다.

중국의 정책 네트워크는 매우 다양하고, 그 범위 또한 넓다. 중국은 그 규모만큼이나 다수의 정책 싱크탱크와 대학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역시 많다. 중앙정부에는 각 부처와 국책 싱크탱크들

통일연구원, 2012); 王存刚. 当今中国的外交政策: 谁在制定? 谁在影响. 基于国内行为体的视角. 2012(3).

이 있지만, 지방정부 역시 전문 부처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규모를 가진 싱크탱크를 보유하고 있다. 대학 및 전문기관 역시 매우 많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통일 외교를 수행할 대상 역시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결국 영향력이 큰 전략거점을 선정해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 네트워크는 지역별로는 크게 베이징, 상하이, 동북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나머지 지역 역시 중요하나 전문가 풀이 상대적으로 적고, 한반도 통일 문제에 직접적인 관심이 적기 때문에 전략 거점에서는 제외하였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 지역의 정책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수월한 정책 네트워크를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의 분석이 친관방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상하이는 중국의 최대 경제 도시로서 베이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분석과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적 영향력이 베이징만큼 큰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동북지역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북한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교류를 진행해왔고, 물적, 인적정보가 다양하다. 한반도 지역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관련 정책 결정에 실질적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 문제와 같은 거시적 담론보다는 경제협력, 사회교류 등과 같은 미시적 문제에 방점이 찍혀 있으며, 한국보다는 북한에 우호적 정서를 가지고 있어 객관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각 단위의 성격에 따라 국책 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와 언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대부터 중국의 주요 정책을 기획, 설계, 평가, 자문하는 역할을 전통적으

로 수행해왔다. 때문에 정부 부처와의 정책 네트워크가 가장 활발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 역시 중국의 유명 대학은 국가에서 운영해왔기 때문에 정책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책 연구기관에 비해 학문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크고,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정책지향성 보다는 심도 있는 학문적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니 정책적 구심력은 국책 연구기관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 사회에 대한 파급력, 후속세대 양성 등 정책적 원심력은 그 어느 기관보다 크며, 최근에 주요 대학의 한반도 연구자들이 중국정부의 정책결정의 다원화, 전문화 추세 속에서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음은 민간단체와 언론이다.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큰 당국가 체제에서 국가의 민간영역에 대한 제약이 클 수밖에 없고, 전통적으로 중국의 민간단체 역시도 자금 운영에 있어 국가 투자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점차 사회의 다원화, 민주화 추세에 따라 사회영역의 자율성이 제고되는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전문가들은 주로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대학에 소속을 두고 있는 국제정치학자, 전략연구자, 한반도 전문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국제정치학 혹은 전략연구를 하는 전문가 그룹은 주로 동북아 국제질서, 중국의 외교정책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한다. 북핵 문제가 심화되고 국제화되면서 중국 내 국제정치/전략 연구자들이 한반도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정책적 영향력 역시 확대되었다. 중국의 전통적 한반도 전문가 그룹은 북한에서 유학 경험이 있는 동북지역 출신의 전문가들이나, 조선족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한반도 연구학계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후속세대 양성에 기여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개인적인 역사적·문화적 경험으로 인해 한반도

통일 문제에 있어 국제정치/전략 전문가 그룹에 비해 친북정서를 왕왕 나타내고는 한다. 차세대 그룹 역시 존재하는데, 이미 한국 학계에 잘 알려진 소장 전문가 그룹도 있으며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한반도 정책 전문가 그룹도 있다.

나. 주요 기관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 중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주요 전략거점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중국 내에는 외교, 안보, 공공외교 등의 각 분야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류 담론을 형성하는 기관, 단체들이 포진해 있다. 아래에서는 한반도 통일 관련한 중국 내 주요 전략 거점인 1 트랙, 즉 당정부기관에 대한 소개를 생략한다. 이미 정부 간 공식 외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상수로서 주요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단, 중국은 공산당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정부부처인 외교부, 상무부, 국방부 외에도 공산당 대외연락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주요 전략거점으로 1.5 트랙의 국책 연구기관, 2 트랙인 대학, 민간단체를 소개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연구 및 한국 혹은 북한과의 교류가 많은 주요 단위들에 중점을 두었다.[12] 위에서 밝혔듯이 중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가 매우 다양하고 전국적으로 포진되어 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 문제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실질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들은 주로 베이징, 상하이, 중국의 동북지방에 집중되어

12) 이미 전병곤, 양갑용 (2012)의 연구에서 중국의 1.5 트랙의 주요 한반도 관련 연구기관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이하에서는 최근 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최신자료를 업데이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있다. 물론 여기서 소개하는 지역의 기관 외에도 중국 내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싱크탱크들이 많이 있으며, 추후에도 새로운 전략 거점의 발굴 및 지속적 관리는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전문 인력 규모와 자원 가동 능력을 감안한다면 가능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거점 선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1) 국책 연구기관

(가) 중국개혁개방논단(中国改革开放论坛)[13]

개혁개방논단은 중국 공산당의 간부 훈련기관인 중앙당교(中央党校) 산하의 연구기관이다. 국가전략부터 중국 개혁개방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와 교류를 통해서 정책 제안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개혁개방논단은 1994년 중국 베이징에 설립되었으며, 지난 20년간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인도, 한국, 싱가포르 등 20여 개국의 연구기관과 교류를 진행해왔다. 특히 기관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개혁개방의 경험에 대한 연구, 홍보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동 기관의 파급력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다. 북한과의 공식적 교류에 대한 정보 공개가 미진한 상황이지만, 북한 측 관련 기관과 전문 인력들이 간헐적으로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 관련 교류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북중관계의 해빙 무드를 타고 개혁개방 관련 교류가 확대된다면 특히 이 기관의 기존 명성과 향후 영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 기관장은 중앙당교 상무 부교장인 허이팅(何毅亭) 이사장이 맡고 있으며, 학자와 고급관료로 구성된 6명의 부이사장과 17명의 자문위원을 둔다. 개혁개방논단은 산하에 전략연구센터, 동아시아연

13) "중국개혁개방논단," 〈www.crf.org.cn〉 (검색일: 2018.10.17.).

구센터, 경제·사회연구센터를 운영한다. 특히 한반도 통일 문제는 동아시아 연구센터 산하의 한반도 평화 연구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연구센터의 주임인 위메이화(于美华)는 북한 유학 경험이 있는 친북 성향 인사로 한국어에 상당히 능통하며, 한반도 관련 업무의 총책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 중이다. 이 기관의 특징은 위 주임의 경험과 네트워크에 의지한다는 점이고, 필요시에 다양한 분야의 중량급 객원 연구진과 당 관련 인사 동원력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이다. 객원 연구진으로는 왕바오푸(王宝付, 국방대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 왕이성(王宜胜,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연구원), 류쟝용(刘江永, 청화대학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 류젠페이(刘建飞,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 리쥐첸(李居迁, 중국정법대 국제공법연구소 소장), 팡중잉(庞中英,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위샤오화(虞少华,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쉬웨이디(徐纬地, 국방대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 등이 있다.

(나)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지역·글로벌 전략연구원(中国社会科学院亚太与全球战略研究)[14]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 사회과학연구의 최고 학술기구이자 종합연구센터이다. 1977년 5월 설립된 중국사회과학원은 현재 6개 전공 학부와 43개의 세부 연구센터를 조직·운영하며, 총 3,200여 명의 연구원 및 전문가들이 소속한 연구기관이다. 중국사회과학(中国社会科学), 역사연구(历史研究) 등 82종의 학술잡지를 발간하며 중국 인문·사회과학연구의 최신 성과와 학술 정보를 주도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15] 한반도 통일관련 연구는 산하의 아태·글로벌전략연

14)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지역·글로벌 전략연구원," 〈http://niis.cssn.cn〉 (검색일: 2018.10.17.).

15) "중국사회과학원," 〈http://cass.cssn.cn〉 (검색일: 2018.10.17.).

구원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다. 아태지역·글로벌 전략연구원의 주요 연구 분야는 동북아, 동남아, 남아시아, 남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제관계, 사회문화 등으로 그 범위가 넓다. 산하에 아태지역 정치연구실, 아태지역 안보 및 외교 연구실, 아태지역 사회문화연구실, 대국관계연구실 등 10개의 연구실을 두고 있다. 현 소장은 리샹양(李向阳)이며, 한펑(韩锋), 리원(李文) 등 2인의 부소장이 활동 중이다. 연구원 내 장인링(张蕴岭), 동샹룽(董向荣), 진잉지(金英姬), 파오광지(朴光姬), 왕샤오링(王晓玲) 등이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들이다. 이들 전문가 그룹은 다수가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반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방면에 대한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며, 한국 및 북한의 연구기관과도 다양한 학술 교류를 진행한다. 최근에는 동샹룽, 왕쥔성 등의 젊은 학자군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 분석 및 논평을 통해 중국 언론에 다수 출현한다. 한반도 분석을 자주 다루는 주요 간행물로 월간 당대아태(当代亚太)을 발간한다.

(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中国国际问题研究院)[16]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은 중국외교부 산하 전문 연구기관이다. 주로 국제정치와 세계경제 분야의 전략연구를 수행하면서 외교부에 직접적인 정책 건의 및 자문을 제공한다. 동 연구원은 1956년 중국과학원 국제관계연구소로 설립되었다가 2014년 6월에 현 명칭으로 개정하였다. 산하에는 국제전략연구소, 세계경제발전연구소, 미국연구소, 아태연구소, 유럽연구소, 발전중국연구소 등 6개 연구소가 운영 중이고, 연구원 22명, 특별연구원 4명, 부연구원 26명 등이 근무한다. 대표적인 한반도 관련 연구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중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각종 정책 분석 및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한반

16) "중국국제문제연구원," 〈www.ciis.org.cn〉 (검색일: 20018.10.18.).

도 정세 변화 분석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 외교부 산하의 연구기관이라는 특성상, 한국과 다층적 다면적으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국립외교원과 정기적인 학술 정책교류를 진행한다. 한반도 연구자로는 위샤오화, 양시위 등이 유명하며, 루안종저(院宗泽) 부원장이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한반도 관련 분석을 자주 내놓는다. 양시위는 동북아 안보 전문가로, 국가 외교정책 결정에 다양한 자문역할을 한다. 특히 양 연구원은 2004년 외교부 한반도 판공실 주임을 역임하고, 북핵 관련 6자회담 진행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 경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위샤오화는 한국과 북한 모두에서 외교업무 경험이 있고 한국어에 매우 능통한 것으로 유명하다.

(라)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中国现代国际关系研究院)[17]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국제문제 전문 연구기관으로 1980년 중국현대관계연구소란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2003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하였다. 미국, 유럽, 라틴아메리카, 동북아 등 세계 각 지역의 문제를 연구하며, 중국의 안보기관인 국가안전부와 긴밀한 연계를 맺고 정책 자문 등을 통해 정부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원장은 러시아 전문가인 지즈예(季志业), 부원장으로는 푸멍즈(博梦孜), 핑중핑(冯仲平), 위엔펑(袁鹏) 3명이 맡는다. 동 기관은 중국 내 어떤 연구기관보다 다수의 한반도 연구 전문 인력을 보유한다. 리쥔(李军) 한반도 연구실 주임을 비롯한 내부 연구진들이 모두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과 북한에서 유학을 한 경험이 있다. 특히 리쥔 주임은 최근 한반도 관련 전략가로 부상하고 있으며 실제 정부의 다양한 정책채널에서 한반도 정세 관련 자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양한 전문 인력 풀을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 한국과 북한의

17)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www.cicir.ac.cn〉 (검색일: 2018.10.18.).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등 다방면의 종합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한국, 북한의 연구기관, 학계 그리고 민간단체 등과 매우 활발한 교류를 진행한다. 한국의 통일연구원, 세종연구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과는 정례적인 전략 대화 및 세미나를 진행하며, 한국의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과도 정기적인 정보를 교류한다. 특히 통일연구원의 경우 1년에 2번 상호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한반도 통일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마)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上海国际问题研究院)[18]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은 1960년에 설립되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이며, 주로 상하이 시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 있는 자문을 한다. 중국의 전반적 경제, 외교 문제를 다양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지방정부 연구기관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맨파워를 확보한다. 특히 현 공산당 정치국원인 양제츠(杨洁篪)의 동생 양제민(杨洁勉)이 연구원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재원과 관심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연구원 원장은 천동샤오(陈东晓), 부원장은 양지엔(杨剑), 엔안린(严安林)이 맡고 있으며 산하에 7개의 연구소와 6개의 연구센터가 있다. 한반도 연구와 관련해서는 연구원 차원의 관심보다는 개별 학자 중심으로 한국과의 교류 및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주목 받는 학자는 공커위(龚克瑜)이다. 영어와 한국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학계에서 환영을 받으며, 연구원에서 북핵 연구프로그램 책임을 맡기도 하였다.

---

18)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www.siis.org.cn〉 (검색일: 2018.10.18.).

(바) 지린성 사회과학원(吉林省社会科学院)[19]

지린성 사회과학원은 중국공산당 지린성 성위원회 직속기관으로 철학, 사회과학 관련 종합 연구기관이다. 전신은 1958년 중국과학원 길림 분원과 1962년 동북문사연구소이고, 1978년에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현 원장은 사오한밍(邵汉明), 부원장은 리유신쥔(刘信君), 양징보(杨静波), 궈리엔창(郭连强)이 맡고 있으며, 48명의 연구원과 65명의 부연구원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산하에는 14개의 연구소와 3개의 연구센터를 운영한다. 한반도 관련연구는 조선한국연구소와 동북아연구센터에서 주로 한다. 조선한국연구소는 한국독립운동, 한국정당정치, 한국산업화 및 역사, 북한 자립공업경제건설의 이론과 실천, 북한 핵문제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동북아연구센터의 현 센터장은 진메이화(金美花)인데 소장학자로 최근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주 연구 분야는 동북아지역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이다. 특히 동 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두만강지역 국제협력 학술 활동 및 노하우는 향후 남·북·중·러 협력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주요한 협력 대상이다. 동 센터에는 과거 한국어 및 한국 역사 문화에 능통한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자들의 노령화, 원활치 못한 세대교체 등의 이유로 한국 및 북한과의 학술교류가 다소 미진한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젊은 한반도 학자 인재풀로 세대교체가 진행되면서 기관의 역동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최근까지도 북한과의 학술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한반도 연구에 있어 미래가 주목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19) "지린성 사회과학원," 〈www.jlass.org.cn〉 (검색일: 2018.10.18.).

(사) 랴오닝성 사회과학원(辽宁省社会科学院)[20], 헤이롱장성 사회과학원(黑龙江省社会科学院)[21]

랴오닝성 사회과학원과 헤이롱장성 사회과학원은 지린성 사회과학원과 함께 북한과 접경 지역인 중국의 동북 3성에 속해 있는 종합연구기관으로 한반도 통일 관련 주요 네트워크 협력 대상이다. 성 정부의 사회과학원인 만큼 두 기관 모두 인문, 사회과학 전반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며, 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에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반도 연구 관련해서는 랴오닝성 사회과학원이 헤이롱장성 사회과학원 보다 관심과 투자가 많은 편이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의 경우 한반도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뤼차오(呂超), 경제협력에서는 진저(金哲)라는 저명한 한반도 학자를 보유하고 있다. 뤼차오의 경우는 최근 한반도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언론활동을 통해 중국 관방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진저는 북중 경제협력 등에 상당한 정보와 축적된 연구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연구센터는 북한 영사관이 소재하는 선양과 북중 무역의 관문인 단둥에 위치하고 있어서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하며 북한 내부 정보에도 밝아 이에 관한 연구가 특화되어 있다고 평가된다.[22]

헤이롱장성 사회과학원은 성 내에서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이 높은 종합 연구기관이기는 하지만, 지리적 입지상 한반도 본연의 문제보다는 러시아 및 동북아 지역 협력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다. 단즈강(笪志刚), 진메이즈(金美子) 등의 한반도 연구자들이 있으나, 한국과의 교류 등에 있어서는 성과가 많지 않은 편이다. 향후 남북중러 초국경 협력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20)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www.lass.net.cn〉 (검색일: 2018.10.17.).
21) "헤이롱장성 사회과학원," 〈www.hljsk.gov.cn〉 (검색일: 2018.10.17.).
22) 전병곤, 양갑용(2012), p. 63.

점차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에너지 및 삼림 개발 등에 대한 협력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대학

(가) 베이징대학 국제전략연구원(北京大学国际战略研究院)[23]

베이징대학 국제전략연구원은 2007년 5월 북경대학교 국제전략연구센터로 출발하여 2013년 확대·개편되었다. 세계정치, 국제안보, 국가 전략 등 영역의 학술정책 연구소이다. 현 원장은 중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왕지스(王缉思)이고, 부원장은 위엔밍(袁明), 관귀하이(关贵海), 위티에쥔(于铁军) 등 3명이 맡고 있다. 연구원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10명의 연구자와 2명의 방문학자가 있다. 간행물로는 〈국제전략연구보고〉와 매년 발간되는 〈중국국제전략평론〉(중영문판) 등이 있다. 한반도 관련 연구는 주펑(朱锋)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최근 주 교수가 난징대로 소속을 옮겨 한반도 문제 분석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그러나 저명한 국제정치 이론가인 왕이저우(王逸舟) 교수가 새롭게 합류하였고, 동북아 국제 정세 및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및 한국 학계에 지명도가 높은 쟈칭궈(贾庆国)와 쟝사오밍(张小明) 국제관계학원 교수 등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나) 베이징대 한국학연구센터(北京大学韩国学研究中心)[24]

베이징대 한국학연구센터는 한국학 종합 학술기구로 북경대 조선역사문화연구소에서 출발하였다. 센터는 한국역사, 문화, 정치, 경

23) "베이징대학 국제전략연구원," 〈www.iiss.pku.edu.cn/〉 (검색일: 2018.10.18.).
24) "베이징대 한국학연구센터," 〈baike.baidu.com/item/〉 (검색일: 2018.10.18.).

제와 언어, 문학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관련 전문가들과의 학술교류를 통해 한중 양국의 우호적인 문화교류에 이바지하고 있다. 간행물로는 한국학 논문집이 있고, 현재 26명의 연구원이 있는데, 14명은 교내 연구원이고 12명은 겸임 연구원이다. 다수의 연구원들이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반도의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한반도 지역 전문가들이다. 센터에는 한반도 역사에 정통하고, 한반도 통일에 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오랫동안 제공하고, 국내 언론에서도 매우 유명한 조선족 출신의 진징이(金景一) 교수의 영향력이 크며, 한국어·영어에 매우 능통한 리팅팅(李婷婷) 교수가 차세대 한반도 전문가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진징이 교수의 제자 그룹들이 중국 전역의 연구기관, 대학에 포진하면서 향후 한반도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중이다.

(다) 칭화대학 국제관계연구원(清华大学国际关系研究院)[25]

칭화대학 국제관계연구원은 1997년 성립된 국제문제연구소, 2008년 국제관계학과, 2009년 정치학과가 기초가 되어 2015년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산하에는 미중관계연구센터, 유럽·아시아 전략연구센터, 중국대외정책연구센터, 공공외교연구센터, 경제외교연구센터 등 10개의 연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아쉽게도 칭화대학의 중국 내 영향력과 유명세에 비해 한반도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위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화대학이 중국의 저명한 정치, 국제정치학자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공과대학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사회과학계열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하는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향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칭화대학과의 네트워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 원장인 저명 국제정치학자인 옌쉐퉁(阎学通)

25) "칭화대학 국제관계연구원," 〈www.imir.tsinghua.edu.cn〉 (검색일: 2018.10.17.).

을 비롯해서 동 대학의 추수롱(楚树龙) 교수 등이 한반도 및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하고 있다. 또한 연구원 차원에서 공공외교 분야에 상당한 관심과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와 관련한 협력 역시 가능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상하이 푸단대 한국학연구센터(上海复旦大学韩国朝鲜研究中心)[26]

푸단대 한국학연구센터는 1992년에 성립되었고, 1994년에 정식으로 각종 활동을 시작하였다. 현재 정지용(郑继永)교수가 주임을 맡고 있으며, 싱리쥐(邢丽菊)교수가 부주임을 맡고 있다. 센터에는 교수 5명, 겸임 연구원 60여명이 연구를 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반도 문제 및 동북아 국제관계, 현대 한국연구(정치·경제·외교·안보 등), 한국독립운동 및 근대 한중관계 연구 등이다. 연구센터의 간행물로는 〈한국연구논총〉이 있으며, 국제교류재단, 학술진흥재단 등의 한국기관과 중국 중앙 및 상하이시 정부의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 하버드대, 영국 런던대, 한국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중국 베이징대 등 12개 세계 유명대학의 한국학 연구기관과 세계한국학연합회 활동을 조직하고 있다. 동 센터는 중국 지방 차원에서 가장 다수의 한국학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본 센터의 정지용 주임을 비롯하여, 스웬화(石源华), 팡시우위(方秀玉) 차이젠(蔡建) 교수 등이 매우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

26) "상하이 푸단대 한국학연구센터," 〈www.iis.fudan.edu.cn〉 (검색일: 2018.10.17.).

(마) 지린대 동북아연구원(吉林大学东北亚研究院)[27]

지린대 동북아연구원은 지린대의 기존, 북한한국연구소, 일본연구소, 러시아연구소, 두만강개발 연구소 등을 통합하여 1994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중국의 국가사업인 211 공정의 일환인 〈동북아 역내 정치·경제·역사와 사회발전에 관한 연구〉 등 국가급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1999년 중국 15대 인문사회과학 중점 연구기지로 선정된 이래 우수 연구 기지의 지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국가급 연구기지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국제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으며,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역내 주변국 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정례적 학술회의, 유학생 교류, 공동연구 등을 하고 있다. 연구원은 현재 83명의 교수 및 지원 인력과 61명의 전문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정치, 지역 경제 등 분야에서 다수의 석·박사생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지린대가 북한과 접경지역인 지린성의 대표 대학이라는 점에서 연구원만의 특징인 두만강국제개발연구센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센터는 중국의 동북진흥과 창지투 발전계획의 중심지역인 지린성 정부의 발전전략에 상당한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향후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동쪽 라인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의 접목 과정에서 정책 연구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장후이즈(张慧智) 부원장을 필두로 해서 연구원의 한반도 전문가 그룹의 활약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 외교부, 통일부 및 각종 국책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북한 관료 및 학생들에 대한 지식교류 사업에 노하우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발전이 기대되는 전략거점이라고 할 수 있다.

27) "지린대 동북아연구원," 〈nasa.jlu.edu.cn/index.htm〉 (검색일: 2018.10.17.).

(바) 옌벤대 한반도연구센터(延边大学朝鲜韩国研究中心)[28]

옌벤대 한반도연구센터는 1979년 조선문제 연구소에서 출발하였다. 2001년 중조한일문화 비교연구센터로 개칭되었다가 2012년 현재의 한반도연구센터로 확대 개편되었다. 조선족 자치주의 민족교육기관으로서 옌벤대는 다수의 교원 및 학생이 조선족이며, 한반도와 역사, 문화, 언어적 전통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반도의 역사·문화·정치·사회·경제 등에 대한 전방위적 연구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민족대학이라는 엔밴대의 특성상 한국 및 북한과의 교류가 전통적으로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며, 정례적으로 한국 및 북한과의 학술회의, 포럼 등 국제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학술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특히 언어적 유사성 때문에 북한에서 다수의 연구인력과 학생 등이 옌벤대 및 한반도연구센터가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 및 중국과 한반도 관계에 정통한 다수의 연구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어떤 중국 내 연구기관보다 북한 내부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3) 민간단체와 언론

(가) 차아얼학회(察哈尔学会)[29]

차아얼학회는 2009년 민간자본으로 성립되었으며 중국정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독립 싱크탱크를 표방하고 있다. 본사는 중국 허베이성에 위치하고 있으나, 최근 베이징과 광저우 등에 사무실을 내는 등 전국형 정책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에는 중앙정부의 외교정책에 정책건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28) "옌벤대 한반도연구센터," 〈cnsk.ybu.edu.cn〉 (검색일: 2018.10.17.).
29) "차아얼학회," 〈www.charhar.org.cn〉 (검색일: 2018.10.18.).

확대되었다. 학회 회장은 한방밍(韩方明)로 국제관계 및 공공외교 전문가이다. 현재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 180명의 전문가들이 학회 연구원으로 소속되어 연구 활동을 진행 중이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다양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한반도 정세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간행물로는 〈차하얼속보〉, 〈공공외교계간〉, 〈차하얼공공외교총서〉 등이 있으며, 중국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前) 중국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 부편집장 덩위원이 학회의 연구원으로 맹활약 중이다.

(나) 중국국제우호연락회(中国国际友好联络会)[30]

중국국제우호연락회는 1984년 베이징에서 설립되었다. 국제 민간 우호 교류를 촉진하고, 경제무역협력 및 문화 교류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70여개가 넘는 국가와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을 하고 있으며, 사실상 중국 공공외교의 선봉에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연락회는 전통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고위직을 역임한 인물들이 주도하였다. 최근까지도 전 중국 외교부장인 리자오싱(李肇星)이 조직의 수장 역할을 수행하였고, 현재는 중국 공산당 혁명원로인 천윈(陈云)의 장자이자 전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인 천위안(陈元)이 협회 회장이다. 협회 구성원들의 영향력만큼이나 중국 공공외교의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요한 전략거점이다. 협회의 한반도 관련 부서 직원들은 모두 한국이나 북한에 유학경험이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이며, 한국어 구사능력 역시 수준급이다. 리자오싱 회장 시절에는 통일부 및 통일연구원 등과 통일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교류협력을 진행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약한 편이다.

---

30) "중국국제우호연락회," 〈www.caifc.org.cn〉 (검색일: 2018.10.18.).

(다) 중한우호협회(中韩友好协会)[31]

중한우호협회는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1993년 성립되었다.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관련정부 산하단체, 기업, 사업, 사회단체 그리고 한중우호사업 관련 각계명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전국형 민간단체이다. 협회는 한국과 중국의 각계 교류를 확대하는 중요한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협회는 기본적으로 한중 양국의 상호이해를 돕고자,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체육, 위생, 여행 등 각 방면의 교류와 협력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한국의 각 기관과 교류하고 있는데, 한국한중우호협회, 한중친선협회,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한국문화교류재단 등과 정례 교류를 하고 있다. 협회의 주요 프로그램은 한국과의 교류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 전문가 초청 강연회, 중국어(한국어) 말하기 대회, 각종 문화 교류(미술 전시회, 음악 공연), 청소년 우호 사절단 교류, 한중 여성 대표단 교류 등이 있다. 특히 협회는 중국의 각 성과 도시들이 한국의 지역 자치 단체와 자매결연을 희망할 경우 제반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소식과 동정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32] 이는 협회가 중국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네트워크와 프로그램을 활용, 한반도 통일 관련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홍보한다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외교전략 수행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라) 중국인민외교학회(中国人民外交学会)[33]

중국인민외교학회는 저우언라이(周恩来) 전 중국 총리의 주도로

31) "중한우호협회," 〈www.china-korea.org〉 (검색일: 2018.10.17.).
32) 이기현 외, 『중국의 对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p. 93~94.
33) "중국인민외교학회," 〈www.cpifa.org〉 (검색일: 2018.10.17.).

1949년 12월에 성립된 중국 외교 역사의 산실이자 중화인민공화국 최초의 전문 공공외교 기관이다. 저우 총리가 생전에 이 학회의 명예회장을 지냈으며, 전직 외교부장 등 고위급 관료들이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 학회장은 중국 외교부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한 우하이롱(吴海龙)이 맡고 있다. 학회는 중국과 세계 각국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를 위한 각종 외교정책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각국 정치 활동가 및 사회저명 인사 및 각국 연구기관, 사회단체와의 좌담회, 연구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간행물로는 〈외교〉가 분기별로 출판되고 있다. 한국과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에도 주중한국대사관과 한반도, 한중관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마) 판구연구소(盘古智库)[34]

판구연구소는 중국 싱크탱크 중 가장 최근인 2013년에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저명 전문가들의 지식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중국의 공공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다. 연구소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지식 프로젝트 및 일대일로 프로젝트 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세계 싱크탱크 순위에도 최근 상위권에 링크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연구소는 약 200여명의 국내외 학자들로 구성되었으며, 학계 외에도 정계, 기업계 등의 주요 전문가를 정책고문으로 두고 있다. 본부는 현재 베이징 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창사(长沙) 등에도 지부를 두고 있다. 본부 소속 직원은 약 50여명이다. 한국 언론에는 2016년 8월 당시 한국의 야당 정치인 6명이 이 연구소를

34) "판구연구소," 〈baike.baidu.com/item/%E7%9B%98%E5%8F%A4%E6%99%BA%E5%BA%93〉 (검색일: 2018.10.17.).

방문하여 사드(THAAD) 관련 토론회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중국사회과학원의 리난, 왕쥔성 등의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바) 중국 언론

중국 언론의 대표적 주자는 인민일보(人民日报)이다. 이 신문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로 중국 정부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가장 파급력이 큰 매체이다. 인민일보는 정치성을 띈 기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주요 당국자들의 발언, 중국 공산당의 정책 홍보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특히 사설은 중국 공산당의 입장과 시각을 대내외에 표명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때문에 기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인민일보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언론은 환구시보(环球时报)이다. 주로 국제 뉴스를 전문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인민일보가 출자하여 1993년 창간하였기 때문에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알려져 있다. 세계 9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350여 명의 특파원을 파견하는 등 세계 각국의 소식을 전하는 글로벌 매체로서 발행 부수가 하루 평균 200만 부가 넘을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 환구시보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칼럼이나 사설을 통해 중국 정부 및 중국 대중들의 인식과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한국이나 북한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환구시보의 상업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독자를 늘리기 위한 자극적인 기사를 생산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신문 자체가 중국 내 어떤 매체보다 한반도 관련 기사를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공략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다. 주요 전문가

한반도 통일과 관련 있는 중국의 주요 전문가는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다. 지대박물의 대국답게 넓은 국토와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만큼이나 인재풀도 많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중국 내 모든 한반도 전문가들을 이 짧은 지면에 다 소개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여기서는 한반도 통일문제와 연관하여 정책 분야에서 정부에 다양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 전문가들을 몇몇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 전문가는 중국내 주요 정책 싱크탱크와 대학에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고, 한국 및 북한과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요 허브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다.

인적정보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생활 보호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되도록 소개하는 전문가들의 개인적 내용 최대한 배제하고 주로 중국 포털이나 각 기관 홈페이지에 소개된 공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하에서는 중국의 한반도 통일 전문가들을 크게 3그룹으로 나누었다. 우선, 국제정치 혹은 동북아 전략의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분석하는 그룹이다. 이들은 영어에 능하고, 한반도 외 지역과의 정책 네트워크가 넓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들은 한반도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한반도 전문가 그룹이다. 이들은 한국이나 북한에서 유학 혹은 근무를 한 경험이 있고, 한국어에 매우 능통하고, 지역 전문가로서 중국 내 위상이 독보적인 인물들이다. 마지막으로는 차세대 전문가 그룹이다. 이들은 주로 40대의 소장학자들이며, 이미 학계 및 언론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실질적 정책 영향력은 노장그룹에 비해 약할 수 있지만, 최근 한반도 정세를 가장 영민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중국내 대중 정서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룹이다. 인물의 소개 순서는 이름의 중국어 발음의 가나다순에 따랐다.

(1) 국제정치·전략 그룹

■ 루안종저(阮宗择)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상무 부원장 겸 부당서기이다. 스촨외국어대를 졸업하고, 중국인민대학과 외교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교부 공공외교 자문위원회 위원이고, 중국 CCTV의 특별고문이다.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질서, 미중 관계 등 국제정치질서와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한 전문가이나, 최근 국제정치 시각에서 한반도/북핵 문제에 대한 분석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다. 루안 부원장은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연구원 내 고속 승진을 한 인물이고, 특히 중국 내 언론에서 영향력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 션리(沈丁立)

푸단대 교수이다. 푸단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프린스턴대학 박사 후 과정을 거쳤다. 션 교수는 물리학자 출신으로 군축 및 핵 문제를 연구하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중국 내 주요 학회의 보직을 두루 역임하였고, 능통한 영어로 미국 내 대학에서 강연 및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의 외교 및 안보 전략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주로 연구하며, 기존 중국 관방의 의견과는 색다른 분석들을 생산하고 있어, 중국 학자그룹의 다양성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인물이다.

■ 수하오(苏浩)

중국외교학원 교수이다. 베이징사범대 학·석사, 외교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교학원의 대표 국제문제 전문가로 명성이 나 있으며, 현재 외교학원 전략과 충돌관리센터 주임, 한중지식네트워크 중국 측 대표 등을 맡고 있다. 아태지역 안보협력 이사회 중앙위원,

중국아태지역학회 이사, 중국군축협회 이사, 중국-아프리카 발전교류협회 상무이사, 중국-아세안협회 이사 등을 역임한 전형적 외교학자이다. 외교학원의 대표 교수 중 1인답게 국제문제와 관련 왕성한 학술, 언론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 지식계와의 교류 역시 활발하다.

■ 스인훙(时殷弘)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미국연구센터 주임, 교수이자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이다. 난징대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받고, 난징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관계이론, 역사, 사상, 중국외교정책 등이며, 중국미국사연구회 이사장, 중국유럽학회이사, 중국미중관계 연구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중국 국제정치학계에서 기이한 발상을 자주 제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저작들이 〈전략20강〉, 〈전략30편〉 등 주로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거침없는 입담을 과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한중 전략 대화 등에서 중국학자로는 드물게 중국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스 교수의 스승인 왕성주(王绳祖) 선생은 중국의 국제관계사의 대부로 불리는 유명학자로 그의 제자들이 중국 국제정치학계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왕지스(王缉思)

베이징대 교수이자,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왕 교수는 중국을 대표하는 저명 국제정치학자로, 중국 최고 정책 결정 그룹에 직접 자문을 할 정도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왕 교수는 영국 옥스퍼드대, 미국 하버드, 캘리포니아, 미시간 대 등

영미권 주요 대학들과 교류를 하면서 강한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종 아태지역 안보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및 고문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미국학회 회장, 중국개혁개방논단 부이사장, 중국국제관계학회 부회장, 중국국제경제학회 부회장 등 중국 국제정치학계의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하였고, 미중관계, 국제정치이론과 관련된 수많은 역작을 집필하였다. 특히 왕 교수는 중국외교의 대전략과 방향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2012년 미국의 포린어페어(Foreign Affairs)지는 세계 100대 사상가 중 1명으로 왕 교수를 선정한 바 있다. 왕 교수는 직접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지는 않지만, 동아시아 질서와 중국의 향후 외교 대전략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린다는 점에서 그의 영향력은 매우 높다.

■ **왕판(王帆)**

중국외교학원 부원장으로 법학박사이자, 교수이다. 교수 이전 중국 주영국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중국외교학회 이사, 대외우호협회미주관계 위원회 이사, 중국군축협회 이사, 중국국제관계학회 부비서장 등을 역임하였고, 외교관련 저작이 50여 편에 이르는 전형적인 외교학자이다. 왕 부원장은 주로 미중관계, 중국의 외교전략을 연구하는 학자이나, 중국 외교학원이 중국의 외교관을 양성하는 산실로서 역사적으로 외교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왔다는 점에서 왕 부원장에 대한 정책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

■ **양시위(杨希雨)**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으로 전직 외교관이다. 랴오닝 사범대 영어과를 졸업했고, 국제관계학원 석사학위를,

미국 스탠퍼드대학 정치학과에서 방문학자로 있었다. 양 연구원은 외교부 근무시절 한반도 사무 판공실 주임을 역임하면서 북핵 관련 분석 및 6자회담 진행 과정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정책적 영향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되며,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된 중국정부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 인식된다. 외교부 은퇴 이후 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핵 문제 외에도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 논문을 집필하는 등 적극적인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양제멘(杨洁勉)**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원장으로 국제정치경제학자이다. 상하이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미국플레쳐대학 석사, 상하이 외국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상하이 정협위원, 중국국제관계학회 부회장, 중국 공공관계협회 부회장, 중국미국학회 부회장 등 정책 실무 및 학술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주요 직위를 역임하였다. 양 원장은 소위 G2를 미국이 국제질서를 왜곡하기 위해 만든 개념으로 비판한 것으로 유명하다. 상하이시 최고 전문가라는 칭호를 받기도 하였으며, 현재 중국의 외교 관료로 최고 직위에 오른 양제츠 정치국원의 친동생이다. 그의 학술, 정책적 능력이나 개인적 배경을 감안하였을 때, 그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 **옌쉐퉁(阎学通)**

칭화대학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이자, 교수이다. 저명한 국제정치학자로 중국 국제정치학계의 과학적 방법론과 국제형세 예측이론의 선도자로 알려져 있다. 헤이롱장대학을 졸업하고, 국제관계학원 석사,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취득 후 중국 국책 싱크탱크인 현대국제관계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8년간 근

무하면서 대외정책연구센터 주임을 역임한 바 있다. 칭화대 교수로 이직한 이후에는 〈세계와 평화 논단〉 비서장, 국제저명 학술지인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편집장, 〈국제정치과학〉 편집장, 중국국제정치학회부회장, 중국미국학회 부회장, 〈세계경제와 정치〉, 〈유럽연구〉, 〈당대아태〉, 〈동남아연구〉, 〈당대세계〉, 〈국제안보연구〉,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등의 주요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과의 학술교류도 왕성한데 The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Asian Journal of Peace Building라는 한국 내 학술잡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옌 교수는 2013년 출판된 본인의 저서 〈역사의 관성: 미래 10년의 중국과 세계〉에서 중국이 비동맹정책을 포기하고 한국과도 동맹을 고려할 수 있다는 소위 한중동맹론이라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였다.

■ **쟈칭궈(贾庆国)**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이자, 교수이다. 베이징 외국어대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저명한 국제정치학자로 외교 전문가인 동시에 중국의 주요 정치기구의 하나인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을 3차례 역임한 정치인이다. 최근 정협 상무위원으로 선임될 정도로 정치력이 강하다. 쟈 교수는 정협 외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국 외교정책 일선에서 실질적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 미중관계, 중국외교·전략 등이다. 쟈 교수는 한국 내 한반도 관련 주요 학술행사 초청 대상에 자주 거론되는 영향력이 높은 인물이며, 국제안보·정치의 시각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장을 객관적 혹은 우호적으로 이해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 진찬롱(金灿荣)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교수로 저명한 미국문제 전문가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석사학위를 받고, 동학원 미국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10여년 근무하면서,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미국정치제도, 외교, 미중관계, 중국 외교정책 등이다. 진 교수는 중국국제관계학회 부회장,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연구실 특임연구원, 중국 평화와 발전 센터 특임연구원, 중국 개혁개방 논단 상무이사, 중국국제공공관계협회 이사 등 외교정책 일선과 국제정치학계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다. 그는 국제현실주의자이자, 역사유물론을 지지하며, 중화 문명권을 소위 젓가락 문명 혹은 유교 문명권으로 정의하고 현 지구상에서 북유럽과 북미의 신교문명권과 동아시아 중화문명만이 유일하게 초공업화 사회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 추수롱(楚树龙)

칭화대 공공관리학원 교수이자, 국제전략 및 발전연구소 소장이다. 국제관계 및 미국, 타이완 문제 연구로 유명한 국제정치학자로 다렌 외국어대를 졸업하고, 국제관계학원 석사,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국국제관계학원 겸임교수, 상하이 푸단대학 미국연구센터 겸임연구원, 중국 CCTV 국제보도 자문위원, 미중협회 이사, 아태안보협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칭화대 교수 이전, 동 대학의 옌쉐퉁 교수처럼 중국현대국제관계학원에서 연구원으로 11년간 근무하였고, 미국연구센터 주임 등의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다. 추수롱 교수는 특히 중국의 양안 통일 문제 연구에 있어 '한 개의 국가 두 개의 정부(一国两府)'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반도 문제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측 학자

들과 다양한 형태의 학술교류, 공동 연구 등을 진행하여 왔고,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핵보유가 사실상 중국에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솔직한 입장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정치 이론을 비판하고 중국적 국제정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는 학자이다.

(2) 한반도 전문가 그룹

■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변강연구소 소장이자, 연구원이다. 중국 동북지역을 대표하는 한반도 전문가 중 1인으로 오랫동안 한반도 문제를 연구한다. 특히 랴오닝성이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관계로 고구려 역사 문제로 논란이 된 동북공정 문제, 동북 3성 발전 전략인 동북진흥과 북한과의 연계 문제, 탈북자 문제 등에 관한 연구프로젝트에 관여해왔다. 이 밖에도 북한의 사회, 경제, 역사와 관련된 다수의 논문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국내외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관방학자로 알려져 있다.

■ 만하이펑(滿海峰)

북중 무역의 핵심 기지인 단동시의 유일 대학인 랴오동 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소장이자, 교수이다. 중국 소수민족인 만주족 출신으로 랴오닝성 재경 전문대 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5년부터 랴오동 학원 한반도연구센터를 책임지고 있다. 단동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북한 관련 정보가 많고, 북중무역 및 북중 접경 개발 프로젝트 관련 각종 자문을 수행한다. 한국의 통일연구원, 성균중국연구소 등과 학술교류를 진행한 바 있으며, 특히 한국기업들과 교류가 많다. 한국의 단국대학 등에서 객좌교수를 역임하였다.

■ 스웬화(石源华)

상하이 푸단대학 교수이자, 한국연구센터 주임을 역임한 저명한 한반도 역사학자이다. 푸단대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푸단대 역사학과 교수, 일본 도쿄대학 객좌교수, 일본국제교류기금회연구원, 한국 경남대학 객좌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중국조선사연구회 부회장, 상하이시역사학회 이사, 상하이시국제관계학회 이사 등의 주요 직위를 거쳤으며, 대표저작으로 〈냉전이후의 한반도문제〉가 있다. 푸단대의 한국연구센터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술성과를 내고 있는데, 다수의 학자들의 스 교수의 지도하에 성장하였을 만큼 그의 영향력이 크다. 특히 그가 활동하는 중국조선사연구회는 1979년 설립된 전통 있는 학술단체로 회원 수가 200여명에 달하며, 현재까지 중국의 유일한 전국 단위의 한반도 문제 전문 연구단체이다.

■ 왕이성(王宜胜)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연구부 연구원이다. 현직 군인으로 오랜 기간 동북아 군사안보 문제를 연구하였다. 중국한국사연구회 이사, 베이징 국제우호연락회 이사, 중국 한반도연구회 특임연구원,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한반도 연구센터 특임연구원, 개혁개방 논단 연구원, 한중 전략 대화 주요 참여자로 활동하였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한반도 문제 관련 시각을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군부 출신 연구원이다. 그의 저서 〈한반도 충돌위기관리 연구〉는 한반도 위기 시 중국의 군사전략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유명세를 치렀다.

■ 위샤오화(虞少华)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소소장, 연구원으로 동 연구원 내 최고의 한반도 전문가로 통한다. 옌벤대를 졸업하

고, 한국 고려대에서 한국어 연수, 중국 주북한대사관 근무 등 한국과 북한을 동시에 경험한 몇 안 되는 전문가이다. 한족 출신이지만 능숙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장점으로 한국과 북한 내 다양한 정책그룹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주로 한반도 정치, 외교 전반에 걸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주요 한중 전략 대화, 학술 행사 프로그램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였다.

■ **자오후지(赵虎吉)**

중국공산당교 교수이다. 조선족으로 중국 공산당 최고위급 간부를 교육하는 위치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베이징대에서 학·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중국정치학회 이사, 중국 한반도문제 연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청년시절 농촌 개혁운동에 참가하면서 지역 생산대 반장, 대대장, 당서기, 부부장 등 공산당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였다. 주로 중국 정부체제 및 제도 등을 연구하였으나, 조선족 학자의 특수성을 살려, 한국의 정부 주도형 발전 모델 및 한국의 정치체제를 중국 공산당 간부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북한에는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전파하고, 한국의 학계 및 연구기관과도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다양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 **장롄구이(张琏瑰)**

중국공산당교 교수이다. 북한 김일성대학에 유학 경험이 있는 중국 한족출신의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이다. 현재는 은퇴하였으나, 여전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왕성한 저술활동을 진행한다. 지린성 국경관리 공안부대 출신으로 지린성 사회과학원 조선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시작하였다. 베이징대 한국학연구센터 특임연구원,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아시아발전연구소 연구원, 중국 아시아발전협회 상무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국제정치 속에서의 한반도와 중국〉 등의 유명

저작을 저술하였으며, 최근까지도 중국과 한국의 주요 언론에서 한반도 통일,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장 교수의 분석은 단골손님이다.

■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한국언어문화학부 교수이자, 한반도문제연구센터 부주임을 맡고 있다. 중국 옌벤대를 졸업하고, 베이징대에서 국제관계학 석사와 국제정치 박사를 취득하였다. 일본 게이오대학교 지역연구소 객원교수, 한국중앙연구원 방문 연구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방문 연구원, 북경대 조선문화연구소 소장 등으로 동북아 3국을 넘나드는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쳐 왔다. 이 밖에도 중한교류협회 이사, 중국 아시아발전 교류협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고, 주요 저서로 〈중국 조선족 문화론(1995)〉, 〈중국의 한국 전쟁 참전 기원(2005)〉, 〈한류와 한풍의 상호 역동 관계(2009)〉 등이 있다.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탁월한 분석력과 식견을 보여주며, 한국 및 중국내 언론에 다양한 칼럼과 분석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조선족 출신의 강점으로 한국과 북한과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한반도연구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중국 내에서 한반도 연구의 활성화 및 전문가 후진 양성에 기여한다.

■ 진창이(金强一)

옌벤대 국제정치학과 교수이자 한반도연구원 국제정치연구소 소장이다. 조선족으로 옌벤대를 대표하는 한반도 전문가이다. 한국, 북한 연구기관과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였으며, 한국 경희대, 동북아 역사재단 등에서 객좌 연구원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국가급 프로젝트 책임자로 활동하였는데, 대표적으로 한반도문제와 중국의 책략,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과 한반도, 한반도

정세변화와 중국의 정책적 선택 등 특히 중국의 한반도 전략을 구상하는 데 탁월한 공헌을 하였다.

■ **차이젠(蔡建)**

상하이 푸단대학 교수이다. 장수성 수저우 대학을 졸업하고 난징대 석사, 푸단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 연세대에서 어학연수 경험이 있지만, 한국어보다는 영어에 능통한 한반도 전문가이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방문학자를 한 특이한 이력이 있으며, 정책 네트워크보다는 학술 논문 집필에 주력하는 연구자이다.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제약〉, 〈한국전쟁 그리고 중국과 한반도〉, 〈동북아안보기제와 6자회담〉 등 한반도 안보문제에 관련된 전문적이고 분석적인 다수의 논문을 생산하였다. 최근에는 중국 외교정책 결정에 다양한 건의 채널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중국의 한반도 정책 관련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팡시우위(方秀玉)**

상하이 푸단대학 교수이다. 조선족 출신 여성학자로 푸단대의 한국학 연구를 선두 지휘한 전문가이다. 한국 경남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이후 푸단대 한국연구센터에서 연구와 후학들을 양성하였다. 상하이시 내 다수의 대학에 그녀의 제자들이 한국학 관련 교수로 진출해 한국학 전파에 중요한 공헌을 한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근면 성실한 캐릭터로 한국과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한국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부회장, 인천대 중국학연구소 자문위원,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전임연구원, 중앙대 객좌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좌연구원 등의 왕성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연구 분야는 주로 한중관계, 한반도 안보 및 동북아 국제질서 등 한반도 문제

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최근에는 동서양 정치사상 관련 연구에 주력한다.

■ **피아오젠이(朴键一)**

중국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센터 주임, 한반도문제연구센터 소장으로 동북아, 한반도 문제 전문가이다. 옌벤대를 졸업하고, 러시아 모스크바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수백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하였고, 러시아어, 한국어, 영어 등 다국어에 능통하다.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의 최고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주요 연구센터의 책임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주요 거점 확보에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 한국 및 북한과도 다양하고, 다층적인 학술교류를 현재까지 진행한다.

■ **한센동(韩献栋)**

중국 정법대 교수이다. 중국 인민대에서 석사, 한국경남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족 출신으로 한국에서 유학 후 중국 주요 대학에서 한반도 전문가로 활동하는 초창기 멤버라는 상징성이 있다. 한 교수는 그의 저작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중국학계에 알리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저작 〈한반도의 안보구조〉에서 그는 한반도의 안보문제가 국제정치학자들의 주요 연구대상이며, 미국의 한반도 정책,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과정, 남북한 대립의 역사 등 중요하고도 다양한 주제가 배치되어 있음을 후학들에게 알린다. 이 밖에도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동맹체제, 미·일·중·러의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역학관계를 세심하게 소개한다.

(3) 차세대 그룹

■ **공커위(龚克瑜)**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으로, 동 연구원의 북핵, 한반도 프로젝트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학자이다. 상하이 출신으로 중국 인민대를 졸업하고, 국제문제연구원과 상하이 사회과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제정치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주로 다루며, 영어에 능통하고, 세련된 분석으로 한국 학계의 러브콜을 받는다.

■ **동샹롱(董向荣)**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원 연구원으로 동 연구원 정치실 주임이다.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한족 출신의 여성학자이다. 연구방향은 주로 한반도 역사 및 사회 문화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최근 연구원 내 지위 및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 및 프로젝트에 관여한다. 특히 한중 간 전략대화에 단골손님으로 초대되면서 그녀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식견과 분석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중국 내 언론에서도 한반도 전문가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 **리난(李枏)**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이다. 중국 인민대에서 국제관계학 학·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로 미국 및 외교전략 연구를 하나,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서울대 연수 경험으로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안다. 왕쥔성과 함께 판구연구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요 한중 전략대화에 차세대 일원으로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 **리자청(李家成)**

랴오동 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이다. 중국 동북지역 한반도 전문가들의 노령화 추세와 세대교체가 더딘 상황에서 리 교수와 같은 소장학자들의 등장은 희소식이다. 동 대학의 한반도 경제전문가인 장동밍(张东明) 교수와 지린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의 진메이화 주임과 함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전문가이다. 리 교수는 국제안보의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최근 북미관계 등에 대한 왕성한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랴오닝 대학의 아태지역센터와 한반도 연구센터에서 실무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랴오닝성에 대한 네트워크 확대에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리쥔(李军)**

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한반도연구실 주임이다. 양보장, 치바오량 등 동 연구원의 걸출한 한반도 전문가들의 은퇴 이후 중국 주요 국책연구원의 한반도 연구 업무의 실질적 수장 역할을 수행한다. 북한 김일성종합대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매우 능숙한 한국어를 구사한다. 주요 연구영역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문제이나, 북한의 정치, 사회발전상 등 북한 내부 문제에도 조예가 깊다. 리쥔이 속해 있는 한반도 연구실에는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유학경험이 있는 천샹향, 리우텐총 등 차세대 한반도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 추후 이들의 활약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먼홍화(门洪华)**

상하이 통지대 중국전략연구원 원장이다.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및 전략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정책통으로 향후 상하이를 무대로 한 그의 활약이 기대가 된다. 산둥대를 졸업하고 베이징대에서

석·박사를 거쳐, 칭화대에서 박사 후 과정을 마쳤다. 중국 정부의 국가급 만인 인재 배양 계획의 사회과학분야 인재, 중국공산당 선전부 문화 인재에 선발된 이력이 있는 전문가이다. 주요 저서인 〈중국 대전략 설계〉, 〈패권의 날개〉 등에서 나타나듯이 명실상부한 차세대 중국 외교전략 전문가다. 중국국제관계학회 상무이사, 전국고등국제정치연구회 상무이사, 중국개혁개방논단 이사 등 중국 국제정치 학술계에서 주요한 실무 역할을 담당한다.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도 〈한중관계의 불확실성과 전략대응〉, 〈한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역사, 현황, 미래〉 등 중국의 대한국 외교정책 및 전략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공산당교 교수 시절, 한국 내 주요 연구기관들과 정례 교류를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보인다.

■ **왕쥔성(王俊生)**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원 연구원이다. 1980년생으로 한반도 전문가로는 매우 젊은 축에 속한다. 중국 인민대에서 국제관계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환구시보가 선정하는 희망 인재 프로젝트에 선정되는 등 차세대 청년학자로 중국 내에서 주목받는 인재이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의 한중 청년 학자 포럼의 중국 측 매니저 역할을 한 바 있으며, 사드(THAAD) 문제가 불거진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중국의 강경한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한국 학계 및 언론에 주목을 받았다. 주로 국제정치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분석하고, 영어에 능통하다. 최근 급부상하는 중국판구연구소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 **장후이즈(张慧智)**

지린대 동북아연구원 부원장이자 교수이다. 한족 출신으로 한국어에 능통하며 북한 경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여성 경제학자이다. 최근 동북아연구원의 실무 책임을 맡으면서 한국 및 북한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연구영역 역시 북한 경제에서 한반도 문제 전반으로 확대해 가는 한반도 전문가이다. 특히 지린대 내 다수의 조선족 출신 한반도 전문가 인력풀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있으며, 그 어느 연구기관보다 북한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 풍부한 북한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 **정지용(郑继永)**

푸단대 한국연구센터 주임이자, 교수이다. 한족 출신이나 한국어에 능통하고, 최근까지 한반도 문제로 가장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학자 중 하나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한반도 분석업무를 담당했었고, 푸단대에서 박사학위를, 한국경남대·서울대·북한 김일성종합대에서 박사 후 과정을 거쳤다. 한국과 북한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능통한 한국어가 그의 최대 장점이다. 한반도 외교문제뿐 아니라 한국과 북한의 국내정치 관련 연구도 상당한 명실상부한 한반도 지역 전문가이다. 한국, 북한의 연구기관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청년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중국 내 한반도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SNS 활용에 능해 중국내 청년 그룹과 대중들과의 소통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다.

■ **피아오동쉰(朴东勋)**

옌벤대 한국연구센터 부주임이자 교수이다. 옌벤대를 졸업하고, 한국 전남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조선족 출신으로 한반도

문제 및 동북아 국제정치 전반 영역 연구에 능한 한반도 전문가이다. 〈중국 개혁개방 경험에 대한 북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등 북중관계 관련 분야에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조선족 자치주에 속한 옌벤대의 특성상 한반도 관련 연구 인프라 및 인력이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지역 내 차세대 한반도 전문가로 한국과 북한의 다수 연구기관과 다층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또한 북한 국내 정세와 관련 그 어느 지역의 전문가보다 풍부한 정보를 보유하며,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이 확대되는 미래에 박 교수의 중추적 역할이 더욱 기대가 된다.

3. 일본

배정호(통일연구원) · 이기태(통일연구원)

가. 일본 네트워크의 특징 및 평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일본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전략적 거점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일본 네트워크의 특징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중요하다.

(1) 정부주도형 발전국가의 관료와 싱크탱크

전후일본은『통산성과 일본의 기적』이라는 저서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듯이, 관주도에 의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즉, 일본은 전형적인 정부주도형 발전국가로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35]

이는 관료들의 능력이 매우 우수하고 아울러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들의 영향력이 집권여당보다 강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는 고도경제성장하의 일본사회에서 싱크탱크의 영향력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미약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1970년대까지의 일본사회에서 정부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을 제외하고, 주목할 만한 민간 싱크탱크는 일본경제연구센터(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JCER) 이외에 그다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에서 싱크탱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80년대 이후이다.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정책공간이 매우 커지고, 고도경제성장의 영향으로 대중교육과 대중소비의 고도화가 이루지면서 일본사회에 신중간대중의 등장 등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즉, 일

35) チャルマーズ·ジョンソン(着), 矢野俊比古(翻訳),『通産省と日本の奇迹』(东京: ティビーエス·ブリタニカ, 1982), pp. 1~394.

본사회의 변화, 국제환경의 변화, 경제대국으로의 성장 등으로 관료들만의 정책능력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정당들도 '정책지향형 정당'을 추구해야 했고, 싱크탱크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국제적으로 알려진 평화·안전보장연구소(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Security, RIPS)가 1970년대 후반에 발족하였고, 세계평화연구소(IIPS, 현재 '나카소네 야스히로 세계평화연구소'로 개칭: Nakasone Yasuhiro Peace Institute, NPI), 일본국제포럼(the Japan Forum on International Relations, JFIR) 등은 1980년대 후반에 출범하였으며, 캐넌글로벌전략연구소(Canan Institute for Global Studies, CIGS)는 2000년대 접어들어 창설되었다.

일본정부 산하의 국책기관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the Japan Institute of National Affairs, JIIA)도 1960년에 발족하였지만 1980년대에 접어들어 활동 영역이 확대되었고, 2012년에 비로소 공익재단법인이 되었다. 1954년에 출범한 방위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NIDS) 역시 1985년 4월에 정책연구 및 개발을 위한 체제를 정비하면서 방위청 방위연구소로 개칭되었고 그 규모도 증대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정부주도형 발전국가로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관료들의 영향력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매우 강했기 때문에 싱크탱크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다. 21세기 일본의 정책공간이 매우 커졌다고 해도 여전히 매우 우수한 인재들이 관료로 충원되고 있으므로, 그만큼 싱크탱크들의 역할과 영향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사회에는 관계·학계·산업계의 폭넓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관계·학계·산업계의 네트워크 조직의 싱크탱크가 발전해 갈 것이다.

(2) 일본 연구기관 또는 싱크탱크의 전문가 네트워크 및 아웃소싱

일본사회는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네트워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일본 연구기관 또는 싱크탱크의 경우에도,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전략적이고 조직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 연구기관 또는 싱크탱크의 경우, 상근 전문가의 숫자가 적지만, 아웃소싱(outsourcing)으로 고급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꾀하는 연구기관 또는 싱크탱크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연구기관 또는 싱크탱크가 일본경제연구센터, 평화·안전보장연구소, 나카소네 야스히로 세계평화연구소(NPI), 일본국제포럼 등인데, 상당수의 연구기관 또는 싱크탱크가 폭넓은 외부전문가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웃소싱으로 외부전문가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일본 연구기관 또는 싱크탱크의 특징이다.

(3) 한국관련 연구기관

일본 내 한국을 전문으로 조사 연구하는 연구기관이나 싱크탱크는 없다. 즉, 한국을 전문으로 조사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 싱크탱크가 없다는 뜻이다. 한반도 정세가 일본의 평화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강대국(Great power)이 아닌 중견국(Middle power) 한국을 조사 연구하는 연구기관이나 싱크탱크가 창설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 싱크탱크의 내부 조직에도 한국을 전문으로 조사연구를 하는 부서가 없다. 대체로 아시아 조사연구 부서에서 한국을 조사·연구하는 수준이다.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에 '한국', '코리아' 등 명칭을 붙인 연구센터가 존재한다. 예컨대, 동경대 한국학연구센터, 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 와세다대 한국학연구소, 규슈대 한국연구센터, 도시샤대 코리아연구센터, 리츠메이칸대 코리아연구센터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대체로 대학의 부설 한국연구센터는 재정문제로 인해 연구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은 규슈대 한국연구센터를 비롯하여 대부분 대학의 부설 한국연구센터는 세미나 개최, 인적 교류 등의 수준이다. 대학의 부설 한국연구센터가 한반도 관련 정책의 결정, 한일관계의 개선 등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대학의 부설 한국연구센터는 기관차원이 아니라, 소장이나 센터장 등 관계하는 전문가의 개인 역량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운영되는 수준이다.

(4) 한반도 전문가들의 세대교체와 한반도에 대한 인식변화

70대 이상의 일본 정치가나 지식인들은 대체로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식민통치 사실에 기인하는 죄책감을 바탕으로 한국에 다소 우호적이었다. 게다가 냉전시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등의 영향으로 한·미·일 공조관계 및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한일 정계 및 경제계의 막후 채널이 가동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치가나 지식인들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 성향은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탈냉전시대에 접어들어 일본 정계의 세대교체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막후 채널 인사들이 사라지면서 한일관계도 건조해지고, 특히 일본의 한국 전문가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성향은 매우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소장 한반도 전문가들의 성향은 한반도에 죄책감을 가졌던 선배들과 달리 냉정하게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강해

지고 있다. 특히 2004년 이후, 역사문제, 영유권 갈등 등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되면서 일본 내 소장 한반도 전문가들의 한반도에 대한 냉정한 시각은 더욱 악화되는 추세이다.

게다가 일본 내 신진 한반도 전문가들이 양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일관계의 냉각화가 일본 내의 한국연구에 미친 영향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예전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신진 한반도 전문가들의 숫자도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전문가들의 세대교체와 더불어 한반도에 대한 인식이 냉정하게 변화하고 있고, 신진 한반도 전문가들의 숫자도 감소하고 있다.

(5) 한국의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

한국과 일본의 연구기관 교류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의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과 일본의 국제문제연구소, 한국의 국방연구원과 일본의 방위연구소 등 일부 국책연구기관간의 정례적인 상호 교류가 있다. 즉, 파트너십으로 매년 정책대화, 정책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반면, 민간 싱크탱크 수준의 상호 교류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일 민간 싱크탱크 간의 교류 보다 아직은 소속 개인 연구자 간에 한일 공동 프로젝트에서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는 형편이다.

나. 주요 기관

(1) 정부·국회

(가) 참의원 국제경제·외교에 관한 조사회

참의원 국제경제·외교에 관한 조사회(이하 '조사회')는 참의원에

국제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조사회는 국제경제 및 외교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 및 북일 관계와 관련된 현안 발생 시에도 관련된 전문가를 불러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갖는다. 예를 들어 제193회 국회에서는 고하리 스스무(小针进, 시즈오카현립대), 이영화(李英和, 간사이대), 히라이와 슌지(平岩俊司, 난잔대) 등 3명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한일·북일관계'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36]

(나)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는 참의원에만 설치된 상임위원회이다. 외교방위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된 것은 2001년 1월 31일에 소집된 제151회 국회였다. 외교방위위원회는 참의원 규칙에 따라 소관이 정해져 있으며, 외무성, 방위성,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이에 해당된다.

외교방위위원회는 외교, 안보문제 관련 청원을 접수하여 내각 관계자들에게 질의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같은 현안에 질의를 하거나, 북한에 대해 항의결의를 채택하기도 한다.

위원장은 미야케 신고(叁宅伸吾, 자민당)이며,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자민당), 후쿠야마 테츠로(福山哲郎, 입헌민주당),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曽根弘文, 자민당)와 같이 한국과 관련이 있거나, 안토니오 이노키(アントニオ猪木, 무소속)처럼 북한과 빈번한 접촉이 있는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37]

---

36) "참의원 국제경제·외교에 관한 조사회," 〈http://kokkai.ndl.go.jp/SENTAKU/sangiin/193/0188/19304260188006c.html〉 (검색일: 2018.9.25.).

37)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http://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ko

(2) 정부산하 싱크탱크

(가)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38]

영국왕립국제문제연구소를 모델로 한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는 1959년 12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의 주도로 창립되었고, 1960년 9월에 외무성 산하의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였다. 이후,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2012년 3월에 총리의 인정을 받은 '공익재단법인'이 되었고, 2014년 4월에 일반재단법인 '세계경제조사회'를 합병하였다.

또,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1981년부터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 일본위원회[39]의 사무국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1994년부터는 아시아태평양안전보장협력회의(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CSCAP)[40]의 사무국으로서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정책연구 및 개발을 위한 연구부 이외 '군축·불확산센터' '영토·역사센터'를 두고 있다. 연구부에는 상근연구원뿐 아니라, 다나카 아키히코(田中明彦) 정책연구대학원대학장, 다카하라 아키오(高塬明生) 동경대 교수, 기쿠치 츠토무(菊池努) 아오야마카쿠인대 교수 등 일본 국내의 수많은 저명한 학자, 전문가들이 비상근 객원연구원으로 포진되어 있다. 외부 전문가들의 포진 및 활용은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주요 특징이다.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의 「세계 싱크탱크 조사」 발표에 따르면,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2008년에 아시아 2위로 평가를 받았고, 2014년부터는 현재까지 아시아 1위이다.

이와 같은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법적 성격은 총리의 인정을 받

---

nkokkai/ current/plist/p0066.htm〉(검색일: 2018.9.25.).

38) "일본국제문제연구소," 〈http://www2.jiia.or.jp/〉(검색일: 2018.9.25.).

39) 1980년에 설립된 PECC일본위원회에는 80명 이상의 산·관·학의 대표들이 소속되어 있다.

40) 1993년에 설립되었다.

은 '공익재단법인'이며, 외교·안보분야의 종합적인 정책연구 및 개발을 위한 외무성 산하의 싱크탱크이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주요 사업 및 활동분야는 〈표 II-8〉과 같은데, 1960년에 월간지 『국제문제』를 창간한 후 지금까지 『국제문제』를 매월 발간하고 있으며, 외교·안보분야의 정책연구 및 개발, 정책제언, 정책대화, 정보 분석, 심포지엄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최근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주요 연구프로젝트는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의 강인성', '국제경제질서를 흔드는 위기요인', '불확실성시대의 안보정책', '인도태평양시대의 해양안보와 일본의 외교', '인도태평양시대의 일본외교' 등에 역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의 강인성-미국, 중국, 유럽을 둘러싼 정세와 충격'을 주제로 「트럼프정권의 대외정책과 미일관계」, 「중국의 대외정책과 다른 국가들의 대중국 정책」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안보정책의 bottom up Review'를 주제로 「불확실성 시대의 한반도와 일본의 외교·안전보장」, 「포스트푸틴의 러시아 전망」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반(反) 글로벌리즘'을 주제로 '국제경제질서를 흔드는 위기요인'에 대한 연구로서 「중동정세·에너지」, 「포퓰리즘·인구이동문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그리고,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한반도 관련 연구는 내부의 '조선반도연구회'가 북한문제 분석, 한반도 시나리오별 연구, 한반도 정세와 안전보장 등을 연구하고, 최근 「불확실성 시대의 한반도와 일본의 외교·안전보장」에 관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한국의 정치·경제·외교 동향」, 「북한의 위협 실태와 대응방안」, 「북한경제제재의 실효성과 과제」 등을 분석한다.

〈표 II-8〉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주요 사업 및 활동분야

(1) 국제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제언 (2) 국제문제에 관한 국내외 대학, 연구소, 연구단체 등과의 대화, 교류 (3)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등에 관한 사업 (4) 국제문제에 관한 서적·잡지 등의 간행 및 출판, 전자매체, 강좌, 강연 등에 의한 지식의 보급, 국내외 정보 발신

(나) 방위연구소(NIDS)[41]

방위연구소는 일본 방위성 산하의 싱크탱크로서 안전보장정책의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연구교육기관이다. 방위연구소는 1952년 8월 보안청 보안연수소로 발족한 뒤, 1954년 7월에 방위청 산하 기관으로서 방위연수소로 개칭·출범되었고, 1985년 4월에 정책연구 및 개발을 위한 체제를 정비하면서 방위청 방위연구소로 개칭되었다. 방위연구소는 안전보장에 관한 정책연구 및 개발뿐 아니라, 국방대학 수준의 교육기능도 담당하고 있으며 전사편찬 작업도 담당한다. 즉, 방위연구소는 안전보장정책을 위한 연구기관인 동시에 일본자위대 간부들의 안보정책·전사 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이며, 전사편찬 기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방위연구소의 주요 조직은 정책연구부, 이론연구부, 지역연구부, 교육부, 전사연구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교류·정책시뮬레이션 담당 등을 위한 특별연구관 제도도 운영한다.

방위연구소의 소장은 방위성 출신의 문관(방위성 국장급)이 맡지만, 부소장은 자위대 장성(陆将补, 한국군 소장에 해당)이 맡는다. 이는 방위연구소가 방위성의 내국 및 자위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조사연구기관 및 고등교육 기관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41) "방위연구소," 〈http://www.nids.mod.go.jp/〉 (검색일: 2018.9.25.).

현재 방위연구소의 주요 연구과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 환경, 글로벌 안전보장 과제, 현대의 분쟁과 군사력의 역할, 자위대의 관리·운영 등이다(〈표 II-9〉 참조).

〈표 II-9〉 방위연구소의 주요 연구과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 환경	일본의 안전보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 환경에 관하여 조사 연구함. – 군사, 외교, 경제, 내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분석 – 미일동맹, 다층적 안보협력 등 연구
글로벌 안전보장 과제	국제사회는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확산, 국제테러리즘, 해적 행위 등의 위협이 직면하고 있고, 아울러 해양, 우주, 사이버 공간 등 소위 글로벌 코먼즈(global commons)의 안정적 이용에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글로벌 안전보장 과제에 대한 대응과 군사력의 역할 등에 관해 조사 연구함.
현대의 분쟁과 군사력의 역할	현대의 분쟁은 점점 다양화해지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군사력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음. – 현대 분쟁의 원인과 형태에 대해 분석하고, 나아가 분쟁의 예방, 대응, 분쟁 후의 부응지원 등 다양하게 연구
자위대의 관리·운영	방위전략, 안전보장법제, 방위력정비, 위기관리, 미일동맹 및 국방조직, 외국과의 방위교류 및 장비교류 등 자위대의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를 방위성 또는 자위대와 연대하여 연구 조사함.

한반도 문제는 지역연구부의 '아시아·아프리카 연구실'이 연구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한반도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2018년도 주요 보고서를 보면 「한반도 비핵화와 냉전기 NATO: 한국의 전술핵 배치론」(2018.1.31.), 「한국전쟁시의 기뢰전으로 일본이 받은 영향」(2018.2.23.),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2018.5.18.), 「북한과의 전통적 우의로 복귀를 선택한 중국」(2018.5.23.) 등이 있다.

그리고 방위연구소는 한국의 국방연구원(KIDA), 국방대학교와 정기적으로 교류를 한다. 즉, 방위연구소는 국방연구원을 기본 파트너로 하면서 국방대학교 등에 매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3) 민간 싱크탱크

(가) 나카소네 야스히로 세계평화연구소(NPI)[42]

나카소네 야스히로 세계평화연구소(Nakasone Yasuhiro Institute, NPI)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1988년 6월에 설립한 보수성향의 국제문제 싱크탱크이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세계평화연구소는 '세계평화연구소(Institute for International Peace Studies, IIPS)'라는 명칭으로 출범하여 안전보장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외교·경제 등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개발과 제언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2018년 1월에 설립자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의 이름을 앞에 붙여 나카소네 야스히로 세계평화연구소(NPI)로 개칭되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세계평화연구소는 민간 싱크탱크이지만, 총리부, 외무성, 방우성, 재무성, 통상산업성, 경제기획청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공익재단법인'이고, 주무관청의 장관뿐 아니라 내각 전체의 이해를 구하는 각의요해(阁议了解)를 거쳐 설립된 만큼 저명한 민간 전문가들은 물론, 현역 고위관료들도 참가한다.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국가안보국(NSC) 국장이 나카소네 야스히로 세계평화연구소의 부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것이 주목할 부분이다.

이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세계평화연구소가 자민당의 외교안보분

42) "나카소네 야스히로 세계평화연구소," 〈http://www.iips.org/index.html〉 (검색일: 2018.9.25.).

야 정책결정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뿐 아니라, 국가안보국(NSC) 등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나카소네 야스히로 세계평화연구소는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叁) 정권의 출범 이후,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일본판 국가안전보자회의(NSC) 창설' 등을 제안하여 정책에 그대로 반영했다[43].

나카소네 야스히로 세계평화연구소는 주요 정책개발뿐 아니라, '한미일 트랙1.5 심포지엄', '미중일 고위급 트랙1.5 국제회의' 등을 공동개최하며 국제교류를 위한 활동도 전개한다.

(나) 평화·안전보장연구소(RIPS)[44]

평화안전보장연구소(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Security, RIPS)는 일본의 평화와 안보에 관한 정책적 기여를 위해 설립된 종합조사연구기관이다. 평화안전보장연구소는 1978년 10월에 '일반재단법인'으로 설립된 민간 싱크탱크이며, 방위성과 외무성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평화안전보장연구소는 외교안보정책에 관한 조사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위대 출신의 군사전문가들뿐 아니라, 저명한 민간전문가들과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예컨대, 다나카 아키히코 정책연구대학원대 학장, 아오이 치유키(青井千由纪) 도쿄대 교수, 아사다 마사히코(浅田正彦) 교토대 교수,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 게이오대 교수, 이즈미 하지메(伊豆见元) 도쿄국제대 교수, 와마 요코(岩间阳子) 정책연구대학원대 교수, 기쿠치 츠토무 아오야마카쿠인대 교수, 고조 요시코(古城佳子) 도쿄대 교수, 하카마다 시게키(袴田茂树)

43) 〈https://news.joins.com/article/print/16735929〉 (검색일: 2018.9.25.).
44) "평화·안전보장연구소," 〈http://www.rips.or.jp/〉 (검색일: 2018.9.25.).

니카타대 교수, 츠치야마 지츠오(土山実男) 아오야마카쿠인대 교수, 무라이 도모히데(村井友秀) 도쿄국제대 교수, 야마구치 노보루(山口昇) 국제대 부학장 등이 비상근 연구위원으로 참가한다.

평화안전보장연구소의 주요 사업은 안보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개발 및 제언, 군비관리 등 안전보장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제언,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지식 보급, 평화와 안전보장의 해외 전문 연구기관과의 연대 등이고, 구체적인 조사·연구 분야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 환경 분석,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와 안전보장, 러시아의 군사전략·군사체제의 동향과 전망, 한반도에 관한 미일공동연구, 위기관리에 관한 다양한 문제, 미일동맹의 재활성화, 미국의 신군사전략 및 군사체제의 향후 동향, 한반도의 장래와 일본의 안전보장, 동아시아지역의 집단안전보장체제의 구축 문제, 동아시아지역의 핵위협 감소 연구, 미얀마·캄보디아의 역내 협조전략, 국제관계의 변화와 미래전쟁 등이다. 그리고 평화안전보장연구소는 조사연구의 성과를 정부정책에 관한 제언, 특별보고서의 발행 및 배부, Policy Perspective의 발행 및 배부, 연보(年报)『아시아의 안전보장』의 발행 등으로 나타내고 있다.

평화안전보장연구소의 정부정책 제언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구축하라', '향후 한반도의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가 일본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한미동맹 및 한미일의 연대를 강화하라', '중국의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변경을 억제하라' '북한의 탄보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반격능력을 보유하고 억지력을 보유하라' 등이 있다.

또, 평화안전보장연구소는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지식 보급을 위해 매년 봄, 가을, 겨울에 도쿄와 오사카에서 안전보장세미나를 공개적으로 개최하고, 격년제로 오키나와에서 오키나와 안전보장세

미나를 공개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국제교류사업으로 「일본·캐나다 회의」, 「한일 전략협력 대화」, 「미국·일본·베트남 3국 국제전략회의」 등을 운영한다.

(다) 캐넌글로벌전략연구소(CIGS)[45]

캐넌글로벌전략연구소(The Canon Institute for Global Studies, CIGS)는 2008년 12월 캐논주식회사의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일반재단법인'으로 설립된 비영리 싱크탱크이다.

캐넌글로벌전략연구소의 설립 취지는 21세기 글로벌화의 진전과 더불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직면하는 통치구조의 변화, 소자고령화(少子高齢化), 사회보장문제 등 정책과제들, 발전도상국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식량문제, 환경문제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곤란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캐넌글로벌전략연구소의 주요 연구영역은 거시경제, 재정·사회보장, 자원·에너지 환경, 외교안전보장, 일본의 국력 및 경쟁력, 해외정보·네트워크 등이다. 캐넌글로벌전략연구소의 연구영역이 주로 경제·자원·에너지, 재정·사회보장 등이 중심 영역이지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위해 외교안전보장 분야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연구를 한다.

캐넌글로벌전략연구소의 주요 연구성과는 대체로 단행본으로 출간되고 있는데, 정치·외교·안보 분야의 단행본은 『국제평화협력입문』, 『평화구축의 모색』, 『대국으로서의 중국-어떻게 대두하고 어디로 향할 것인가』, 『재정과 민주주의』, 『동남아시아의 분쟁예방과 인간안전보장』, 『세계사의 대전환』, 『일본의 안전보장-글로벌 코몬즈』, 『The New US Strategy towards Asia: Adapting to the American』,

45) "캐넌글로벌전략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canon-igs.org/〉 (검색일: 2018.9.25.).

『China's Power and Asian Security』, 『시진핑정권의 언론통제』, 『글로벌화·변혁주체·NGO』, 『UN과 군축』 등이다.

2018년도 북한 등 한반도 문제의 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한중일 협력과 북한」, 「한반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반도 유사 리스크」 등의 연구보고서가 있다.

(라) 일본경제연구센터(JCER)[46]

일본경제연구센터(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JCER)는 일본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63년 12월에 설립된 '공익사단법인'의 민간 싱크탱크이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이지만, 학계·관계·산업계와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34개의 기업·단체를 회원으로 한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단기 경제예측을 비롯하여 중장기 경제예측, 아시아경제 예측, 국내외 경제문제 등에 대해 조사연구를 하고 정책제언을 하며 기업 연수생들을 위한 세미나 교육도 담당한다. 아울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출판활동, 연구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특히,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산·관·학 교류의 장(场)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정책결정에 깊이 관여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정책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경영자, 이코노미스트, 정책당국자 등을 초빙하는 '이코노미스트간담회'를 매년 연말에 개최한다.

일본경제연구센터의 한반도 문제의 조사연구는 이쥬인 아츠시(伊集院敦) 수석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외부 전문가로는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를 비롯하여 이즈미 하지메 도쿄국제대 교수, 미치시다 나루시게(道下德成) 정책연구대학원대 교수 등이 관여한다.

---

46) "일본경제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s://www.jcer.or.jp/index.html〉 (검색일: 2018.9.25.).

(마) 일본국제포럼(JFIR)[47]

일본국제포럼(The Japan Forum on International Relations, JFIR)은 1987년 3월, 국제문제 및 외교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와 정책제언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즉, 일본국제포럼은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로 출범하였고, 2011년 4월에 '공익재단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일본국제포럼의 주요 전문 분야는 국제정치·외교·안전보장, 국제경제·무역·금융·개발협력, 환경·인구·에너지·식량·방재·글로벌 건강 등 지구적 차원의 문제, 미국·러시아·중국·아시아·유럽 등의 지역연구,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구축에 관한 문제, 해양·사이버·우주 등의 새로운 문제 등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전문분야의 활동을 위해 일본국제포럼에는 재계의 중량급 인사들로 구성된 '재계 정책위원'이 조직되고, 아울러 정치·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식자 정책위원'이 조직된다. '유식자정책위원'은 '정치·안전보장 부회'와 '경제·사회·문화 부회'로 조직되어 있는 있는데 양 부회에는 일본의 저명한 전문가들뿐 아니라, 전 현직 국회의원들도 포진하고 있다.

일본국제포럼은 전문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펼친다. 즉, 정책위원회의 정책제언, 공개토론회, 외부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연구프로젝트의 기획·조직·운영, 연구프로젝트 성과의 '연구보고' 발표, 각종 국제회의·심포지엄 개최 및 전문가 파견, 국제정경간담회 개최, 계간『일본국제포럼회보』발간, 간행물 출판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최근 일본국제포럼의 활동을 보면『적극적 평화주의와 일본의 진로』,『글로벌시대 일본의 에너지 전략』,『팽창하는 중국과 일본의 대응』,

47) "일본국제포럼," 〈https://www.jfir.or.jp/j/〉 (검색일: 2018.9.25.).

『글로벌 테러와 일본의 대응』, 『러시아 국가의 본질과 일본의 대러 전략』, 『인도의 약진과 일본의 대응』, 『국제에너지안전보장체제의 구축』, 『새로운 위협과 일본의 안전보장』, 『새로운 세계질서와 미일 동맹의 장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구상과 일본의 역할』, 『동아시아 안전보장체제의 구축』, 『새로운 국제주의: 집단적 인간안전보장을 지향하여』, 『정보혁명시대 세계와 일본』, 『발전도상국 지원의 신방향 탐구』, 『WTO체제와 일본』 등의 정책제언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정치경제 정세', '북한문제의 틈을 타서 전개되는 중국의 해양 전략', '변용하는 미일중의 트라이앵글', '미체험 지대에 접어드는 동아시아 정세와 일본의 대응', '진화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질서와 TPP의 미래', '국제적 금융경제 정세와 금융정책 운영', '북한 핵위기와 문재인 정권' 등을 주제로 하는 국제정경간담회가 개최되었다.

(4) 대학 연구기관

(가) 도쿄대 한국학연구센터[48]

도쿄대 한국학연구센터는 2010년 한국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강상중 교수를 초대 센터장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교수가 2015년에 센터장으로 취임하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한국학연구부문'이라는 조직을 출범시켰다. 따라서 도쿄대 내 혼고 캠퍼스의 '현대한국연구센터'와 고마바 캠퍼스의 '한국학연구부문'이라는 두 개의 한국연구기관이 존재하였으나, 2017년 조직개편을 통해 '한국학연구센터'로 통합되었다.

'한국학연구센터'는 한일관계가 갈등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능력'을 갖춘 한국학 연구자를 양성하는 등 일

48) "도쿄대 한국학연구센터," 〈http://www.cks.c.u-tokyo.ac.jp/index.html〉 (검색일: 2018.9.25.).

본의 한국학 연구 발전을 목표로 한다.

2018년 9월 현재 센터장은 도노무라 마사루(外村大) 도쿄대 교수이며, 기미야 교수를 사업단장으로 하는 7명으로 구성된 '해외한국학중핵대학사업단(海外韩国学中核大学事业团)'이 연구활동을 진행한다.

(나) 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49]

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는 2009년 2월 한국국제교류재단,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연구 프로젝트, 심포지엄, 세미나, 연구회를 개최하고 있다. 설립목적은 일본에서의 한반도 연구 거점의 하나를 형성하고, 한일 간 학술연구교류를 위한 지적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다.

초대 오코노기 마사오(2009년)를 시작으로 소에야 요시히데(2011년)를 거쳐 2016년부터 니시노 준야(西野纯也)가 센터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게이오대의 특징인 동아시아 지역 연구에서 강점을 보인다.

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의 특징 및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연구의 전통이다. 1858년 설립 이후 게이오대는 한반도 유학생을 다수 받아들이는 등 한반도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한반도와 중국 등 동아시아 연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둘째, 학술적 관심은 물론 현재 한반도가 안고 있는 다양한 현대적 과정에 대한 높은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국내외 연구자가 참가하는 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환기 동아시아와 북한 문제', '한국의 소자고령화와 격차사회', '한일정치제도비교' 등의 학술서적을 출판하였다. 셋째, 주요연구영역으로 정치외교, 국제관계, 경제경영, 사회문화 등 사회과학적

49) "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 〈http://korea.kieas.keio.ac.jp/〉 (검색일: 2018.9.25.).

방법에 따른 연구를 진행한다. 넷째, 한반도가 '분단국가', '정전협정체제'에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치 및 사회체제 연구에도 대응하며, 현재는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해명에 힘을 쏟는다. 다섯째, 한반도 연구의 '개방된 거점'이다. 게이오대뿐만 아니라 국내외 연구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다) 와세다대 한국학연구소[50]

와세다대 한국연구소는 2013년 10월 1일 이종원 교수(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국제정치 전공)를 초대 소장으로 개설되었다. 한국학연구소는 '전환기 일본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대한 넓은 시야와 균형 감각을 갖춘 연구자 및 오피니언 리더를 양성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51]

한국학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특색 있는 연구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지역연구(area studies)에서 광역연구(region studies)를 지향한다. 글로벌화에 따라 지역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지역' 그 자체가 크게 변용하고 일국 단위의 틀을 벗어나 지역화, 지역통합의 문맥에서 분석할 필요에 따라 한국학연구도 동아시아 지역 형성으로 지평을 넓히고, 그 현상과 과제 해명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대한국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종합적 어프로치의 모색이다. 한국학연구의 다양화·다면화 상황을 파악하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어프로치를 지향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발신에 중점을 둔 정책연구의 모색이다. 와세다대의 전통인 사회적인 발신력을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연구·교육을 지향한다. 한일

50) "와세다대 한국학연구소," 〈https://www.waseda.jp/inst/cro/other/2018/03/31/3199/〉 (검색일: 2018.9.25.).

51) 『중앙일보』 2013.10.1.

관계의 기반구축이라는 시점에서 양국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책실무가, 저널리스트 등 전문가의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둔다.[52]

(라) 규슈대 한국연구센터[53]

규슈대 한국연구센터는 1998년 11월 당시 김종필 총리가 규슈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것을 계기로 한국정부로부터 5년간 거액의 연구비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일본의 국공립대학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시설로 12월 17일에 개설되었다. 현재 센터장은 2018년 4월부터 후카가와 히로시(深川博史) 교수가 맡고 있다.

규슈대는 제국대학 시절부터 한반도와 학술적으로 깊은 관계를 갖고 있고, 한반도와 가까운 지리적 특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한국연구센터는 한일 관계를 주축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근현대사, 나아가서는 현안 과제에 관한 연구를 착실히 진행한다.

특히 연구분야에서는 역사연구에서 강점을 나타내고 있지만 다른 분야로도 연구 활동을 넓혀나가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지원으로 '아시아태평양카렛지(アジア太平洋カレッジ)'를 통해 한일 젊은이들의 국제협동교육과 인턴십 등을 통한 단기유학 파견 등을 담당한다.

---

52) "와세다대 한국학연구소," 〈 https://www.waseda.jp/inst/cro/other/2018/03/31/3199/〉 (검색일: 2018.9.25.).

53) "규슈대 한국연구센터," 〈http://rcks.kyushu-u.ac.jp/about〉 (검색일: 2018.9.25.).

(마) 교토 코리아학 컨소시엄(Kyoto Consortium for Korean Studies, KCKS)

교토 지역을 거점으로 차세대 한국학 연구자의 육성을 모색하고자 교토 지역 내 4개 대학의 코리아학 조직이 연계하여 결성한 네트워크이다. KCKS는 도시샤대 코리아연구센터, 리츠메이칸대 코리아연구센터, 교토대 조선한국학 교육연구 네트워크, 붓쿄대 한국조선학연구자 네트워크 등 4개 대학이며 현재 도시샤대 코리아연구센터가 사무국을 담당한다.

KCKS는 다음과 같은 4개 주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정례연구회를 4월~7월, 10월~1월의 첫 번째 금요일에 개최한다. 둘째, 젊은 연구자와 중견 연구자가 여름 방학을 이용, 합숙하면서 토론하는 '차세대연구자포럼'을 개최한다. 셋째, 한반도 문제 관련 심포지엄, 강연회, 영화상영회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이루어진 공개행사를 실시한다. 넷째, 코리아학 컨소시엄 과목을 설치하면서 예를 들어 도시샤대에서는 2013년부터 학부교양과목을 설치하였고, '대학 컨소시엄 교토'의 과목도 제공한다.[54]

다. 주요 전문가

(1) 동아시아국제정치 전문가

■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기타오카 교수는 도쿄대의 학·석·박사이다. 그는 일본의 정치외교가 전문분야인데, 『일본육군과 대륙정책』, 『일본정치사-외교와 권력』, 『미일관계의 현실주의』, 『외교적 사고』, 『일본정치와 미일관계』, 『UN의

54) "도시샤대 코리아연구센터," 〈http://do-cks.net/wp-content/uploads/2014/03/leaflet_kr.pdf〉 (검색일: 2018.9.25.).

정치역학』 등이 있고, 이외 『전쟁과 강화』(공저), 『전쟁·부흥·발전』(공저), 『전후일본의 외교논쟁』(편저) 등 수많은 저서가 있다.

기타오카는 릿교대 교수를 거쳐 도쿄대 교수가 되었고, 이후 UN 차석대사·대사, 국제대 학장을 역임한 후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이사장으로도 활동하였다.

그의 경력이 나타내듯이, 기타오카는 일본 정치·외교 분야의 저명한 학자일 뿐 아니라, 학자출신으로서는 드물게 UN차석대사·대사로 국제외교무대에서도 활약을 한 외교관이기도 하다. 이는 기타오카가 외교안보정책분야에서 정책제언 등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전문가임을 시사한다. 즉, 기타오카는 한반도 지역 전문가는 아니지만, 외교안보정책의 전문가로서 자민당과 일본정부에게 정책자문 및 정책제언 등을 통하여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명한 학자이다.

■ 다나카 아키히코(田中明彦)

다나카 교수는 동아시아 국제정치, 안보문제 등에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자이다. 그는 도쿄대를 졸업하고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다나카는 박사학위 취득 후, 도쿄대 교수로 재임하며 도쿄대 부총장을 역임하였고,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이사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정책대학원대학 학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다나카는 동아시아국제정치, 일본외교안보정책 등의 분야에 많은 논문과 저서를 출판하였고, 아울러 일본의 저명한 외교안보분야의 싱크탱크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평화·안전보장연구소(RIPS)

등에 관계하면서 왕성한 정책제언 활동을 펼친다. 즉, 다나카는 한반도 지역 전문가는 아니지만, 동아시아국제정치, 안보정책의 전문가로서 일본정부에게 한반도 문제와 관련 정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명한 학자이다.

다나카의 주요 저서로는『전후일본의 안보정책』,『세계시스템』,『중일과계』,『새로운 중세』 등이 있는데,『전후일본의 안보정책』과『새로운 중세』는 한국에서도 번역·출판되었다.

■ **이노구치 다카시(猪口孝)**

이노구치 교수는 일본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저명한 학자인데, 도쿄대를 졸업하고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그는 귀국 후, 도쿄대 교수로 오랫동안 재임하였다. 도쿄대 교수 재임 중에 유엔대학 부학장, 아시아태평양대학교류기구(UMAP) 사무차장, 일본국제정치학회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이후 니가타대 총장을 역임하였다.

이노구치는 국제관계론, 국제안전보장, 동아시아국제정치, 일본정치외교 등 분야에 수많은 논문과 저서를 출판하였고, 외교안보분야의 자문을 통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도 관계하였다.

이노구치의 주요 저서를 살펴보면,『외교형태의 비교연구』,『국제정치경제의 구도』,『현대일본정치경제의 구도』,『국가와 사회』,『아시아태평양의 전후정치』,『아시아태평양세계』,『현대국제정치와 일본』,『교섭·동맹·전쟁–동아시아국제정치』,『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 및 역할』(공저) 등이 있다.

이노구치는 한반도 지역 전문가는 아니지만, 동아시아국제정치 전문가로서 자민당과 일본정부에게 정책자문을 통하여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명한 학자이다.

(2) 한반도 지역 전문가

(가) 원로 학자

■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오코노기 교수(1945~)는 게이오대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1969) 이후 대학원 시절에 연세대에 유학하였고(1972~1974), 법학박사학위 취득 후 게이오대 교수로 근무하였고, 2005년~2007년에는 법학부장을 역임하였다.

북한의 정치체제에 관한 연구 활동을 시작으로 현재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일본의 대표적인 연구자 중 한 명이다. 언론, 정부기관 등에 영향력이 있으며, 고이즈미 정부 시절에는 사적 자문기관인 '대외 태스크포스' 위원, 후쿠다 수상의 전문가회의인 '외교정책공부회'의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문하생으로 구라타 히데야(仓田秀也), 히라이와 슌지(平岩俊司),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등 일본의 신진 한반도 전문가와 최희식(국민대), 최경원(규슈대) 등 한국 유학생 출신 전문가 등이 있다.

■ 와다 하루키(和田春树)

와다 교수(1938~)는 도쿄대 법학부 졸업(1960) 이후 도쿄대 교수(~1998)로 재직하였다. 연구 분야는 다양한데 러시아·소련 근현대사였지만 한반도 근현대사에도 전문성을 갖고 있다.

와다 교수는 일본의 양심 및 국제적인 시민활동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재일한국인에 대한 사회처우 향상과 적극적인 전후보상 요구, 위안부 문제에서도 일본 정부에 일관해서 비판적이고,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일병합무효론과 함께 독도 문제에서도 식민지 지배의 반성의 표현으로 일본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즈미 하지메(伊豆见元)

이즈미 교수(1950~)는 국제관계론, 동북아시아 안전보장, 한반도 정치외교를 전공으로 하는 국제정치학자이다. 죠치대(上智大)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를 역임하고, 2016년 3월 정년퇴임 이후에는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객원교수, 도쿄국제대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시즈오카현립대 현대한국조선연구센터 초대 센터장을 역임하였다.

이즈미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와 미일 협력, 동북아시아 안전보장과 일본에 대한 연구를 주요 분야로 한다. 한일협력위원회와 일한문화협회의 이사를 맡으면서 한국과 밀접한 활동을 활발히 한다. 또한 일본 매체에 북한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히라이 슌지와 함께 출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본의 납치문제대책본부의 대북 라디오 방송 '고향의 바람' 및 조선어 방송 '일본의 바람'에서 뉴스 해설을 담당한다.

(나) 중견 학자

■ 기미야 타다시(木宮正史)

기미야 교수(1960~)는 일본의 국제정치학자이며 현재 도쿄대대학원정보학환 교수를 역임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한반도 정치 및 국제관계이다. 1983년 도쿄대 법학부 졸업 후 한국으로 유학 와서 1992년 고려대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호세이대 법학부 조교수, 1996년부터 도쿄대에서 교수로 있다. 강상중 교수 후임으로 도쿄대대학원 정보학환 현대한국연구센터장을 역임하였고, 2015년 4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 아래 도쿄대에 한국학연구부문이라는 조직을 설립하고 부문장에 취임하였다.

주요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 및 동아시아 역사를 1차 사료에 근거해서 실증적으로 연구한다. 구체적으로는 박정희 정부

의 정치체제, 경제정책,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한반도 냉전사 재해석,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의 과정에 대한 연구 등이다.

■ **히라이와 슌지(平岩俊司)**

히라이와 교수(1960~)는 일본의 국제정치학자이며 주요 전공 분야는 국제정치학, 국제관계론, 북한 정치이다.

1987년 도쿄외국어대 조선어학과를 졸업한 후 2001년 게이오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마쓰자카대 정치경제학부, 시즈오카현립대 국제관계학연구과, 간세이학원대 국제학부 교수를 거쳐 2017년부터 난잔대 종합정책학부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현재 일본 내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 중 한 명이며, 단순히 북한 문제만이 아닌 북중 관계와 같은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북한을 분석한다.

(다) 소장 학자

■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니시노 교수(1973~)는 일본의 국제정치학자이며 현재 게이오대 법학부 교수 및 동대 현대한국연구센터장을 역임한다. 니시노 교수는 1996년 게이오대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게이오대대학원 법학연구과 정치학 전공 박사과정 재학 중 연세대에 유학하였고, 2005년 연세대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문정인 교수를 지도교수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전공 분야는 현대한국조선정치, 동아시아 국제정치, 한일관계 등이며, 현대한국조선학회 등에서 활발히 활동한다. 게이오대 스승인 오코노기 교수의 후계자로 알려져 있으며, 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장도 초대 오코노기 교수, 2대 소에야 요시히데 교수의 뒤를 이어 역임한다.

■ **미야모토 사토루(宮本悟)**

미야모토 교수(1970~)는 일본의 정치학자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북한 정치 및 외교, 정군관계론, 안전보장론, 국제정치학이다. 도시샤대 법학부 졸업 후 서울대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고베대 법학연구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고베대에서 일본 국제정치학 및 외교사 분야의 거두인 이오키베 마코토(五百籏头真) 교수 밑에서 지도를 받았으며, 현재는 세이가쿠인대 정치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일본 내에서 특히 북한의 정군관계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향후 북한 군사 및 외교 분야, 한반도 관련 안전보장 전문가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되는 학자이다.

(라) 언론계 전문가

■ **이와무라 가즈야(磐村和哉, 교도통신)**

이와무라는 도쿄외국어대 조선어학과를 졸업한 후 1984년에 교도통신에 입사하였다. 이후 후쿠시마 지국, 요코하마 지국, 사회부, 외신부를 거쳐 1998년부터 서울 지국, 중국 총국(베이징), 평양 지국장, 외신부 담당 부장을 지낸 후 현재는 편집위원 겸 논설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남북관계와 스포츠'(『연감·아시아의 안전보장 2017년~2018년』), '일본의 대북정책'(2017년 7월, 통일연구원·와세다대 한국학연구소 주최 제10회 일한정책포럼 발표) 등 한반도 문제 및 일본의 대북정책에서 전문적 식견을 보여주는 대표적 언론인으로 활동 중이다.

■ **하코다 데츠야(箱田哲也, 아사히신문)**

하코다는 1988년 리츠메이칸대 문학부를 졸업한 후 아사히 신문

사에 입사하였다. 입사 이후 연세대 한국어학당 유학 경험을 가졌고, 서울 지국원, 외보부 차장(한반도 담당), 서울 지국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아사이 신문 국제담당 논설위원이다.

■ **기타**

위에 언급된 언론인 이외에도 교도통신의 평양지국장을 역임한 히라이 히사시(平井久志), NHK의 츠카모토 소이치(塚本壮一), 이데이시 다다시(出石直), 요미우리 신문의 모리 치하루(森千春),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우치야마 기요유키(内山清行), 마이니치 신문의 사와다 가츠미(泽田克己), 요네무라 고이치(米村耕一) 기자 등도 한국 특파원 및 지국장 경험을 가지면서 한반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언론인으로 분류 가능하며, 향후 지속적인 네트워크 교류 협력을 필요로 한다.

4. 러시아

우평균(한국학중앙연구원)

가. 러시아 네트워크의 특징 및 평가

러시아의 정부 및 민간 네트워크를 파악함에 있어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하거나 혹은 정부가 지원하는 그룹의 활동이 현저하게 압도적이며, 순수한 민간영역 내 기관은 과거에 비해 수적으로 많이 증가했지만 사회적인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내 시민사회의 영역이 확대함에 따라 민간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커지는 추세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시민사회가 차지하는 영역은 크지 않으며, 여론도 마찬가지로 부차적인 요소다.

본 장에서는 러시아 내 영향력 있는 네트워크 집단으로 정부와 일부 민간의 싱크탱크 및 언론 매체로 설정하여 연구 집단(싱크탱크, think tank), 언론 및 공공외교기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싱크탱크의 중추적인 세력은 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전문가들이지만 기관을 움직이는 상층부에는 정·재계 및 고위 관료층 등 러시아 사회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대거 포진해있기 때문에 순수한 연구기관으로만 간주하기 어렵다. 특히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연구기관들이 제시하는 정책이나 제언은 러시아 국내 상황에 대한 시각은 물론이고 러시아의 대외전략 개념과 글로벌 질서에 대한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러시아의 언론 역시 러시아 정부의 견해 및 정책 방향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뿐 아니라, 정보 파악 및 정부에 대한 신뢰

등에 있어 러시아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도를 감안할 때,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절대적인 기관이다. 대부분의 러시아 국민들은 TV와 인터넷, 라디오와 신문 등을 통해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등 거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며, 정보의 매개체인 언론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은 편이다. 러시아 정부는 외국에 러시아 뉴스와 정책을 홍보하는 언론사를 창설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사회단체는 러시아의 수많은 단체를 모두 서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공외교를 목적으로 하는 몇 개의 주요 단체 위주로 본장에서 제시할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외교 전문 기관을 신설하여 러시아 언어와 문화 및 러시아 정부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전파·홍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인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배양함으로써 지금까지 관심을 두기 어려웠던 러시아 국력의 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우군을 확장하려는 전략을 구사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싱크탱크, 언론, 공익단체 등 러시아 정부가 지원하는 기관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러시아의 국익과 소프트 파워 확장을 위해 힘을 다한다.

러시아의 인적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의미를 부여함에 있어 민간기관보다는 국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과 인사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같은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 동시에 명망이 있거나 잠재력 있는 민간 싱크탱크 및 기타 기관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 주요 기관

(1) 싱크탱크 현황 및 특성

러시아의 싱크탱크는 소련 시대의 관주도적 성격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주요 연구소들이 과학아카데미(Russian Academy of Science, RAS) 산하의 기관으로 전통을 이어 왔기 때문에 이 같은 경향이 아직까지 현저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0년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기존의 국가 연구소들에 더해 정부 산하에 전략 및 안보정책을 전담하는 싱크탱크가 생기고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대통령 행정실 산하의 주요 싱크탱크들은 러시아의 전략 개념과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보다 최근에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계획을 설계하는 등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55]

러시아는 정부 차원에서 2016년 7월 1일 베를린에서 설립된 DOC(The World Public Forum's Dialogue of Civilizations Research Institute)처럼, 전직관료, 경제인 등 푸틴 대통령의 지인들이 베를린이나 런던 등 유럽의 주요 도시에 러시아에 우호적인 싱크탱크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왔다.[56] 2천 년대에 들어와서 몇몇 민간 연구기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은 국제관계에 관한 서구의 이론을 섭렵하여 분석 시각에 적용하는 등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

55) "Report: Russian Think Tank Made Plan to Sway 2016 U.S. Election," 〈https://www.thedailybeast.com/report-russian-think-tank-made-plan-to-sway-2016-us-election〉 (Accessed July 5, 2018).

56) "Putin associate opens Russia-friendly think tank in Berlin," 〈https://www.dw.com/en/putin-associate-opens-russia-friendly-think-tank-in-berlin/a-19372110〉 (Accessed July 5, 2018).

러시아 정부의 시각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민간 기관 및 연구자들은 대체로 두 부류로 나뉜다.

첫째, 모스크바 카네기센터(Moscow Carnegie Center)처럼 서구의 연구재단 사무실이 모스크바 등지에 지부를 개소하여 연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며, 이들은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갖고 서구와 러시아 사이에서 대체로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단, 러시아 국내 정치 문제나 인권 관련 사안에서는 러시아 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표명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에 도입된 서구의 사회과학 이론과 국제관계의 시각을 습득한 젊은 연구자들이 등장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개진한다.

이와 더불어, 현대러시아연구소(Institute of Modern Russia)처럼 시민사회 발전과 법의 지배 확립 및 외국과의 관계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등, 서구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간 싱크탱크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또한, 전략기술분석센터(Center for Analysis of Strategies and Technologies, CAST)처럼 정부 산하의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담당해 온 군사문제 분석이나 무기산업체계 등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민간연구기관들도 생겨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의 싱크탱크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2018년 미국의 펜실베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가 공개한 2017년 동유럽 지역 싱크탱크 순위를 보면, 카네기모스크바센터(Carnegie Moscow Center)가 2위,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MEMO)가 3위, CEFIR (Center for Economic and Financial Research)가 10위, 국립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교(Moscow St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MGIMO)가 12위를 기록하였다.[57] 러시아에는 총 122개의 싱크탱크가 있으며, 이중에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카네기모스크바 센터는 세계 랭킹에서 23위, 비미국 지역의 싱크탱크 순위로는 18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기관에 의한 러시아의 싱크탱크 순위는 수년째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58]

〈표 II-10〉 러시아 싱크탱크 순위(2016)

순위	명칭
1	Carnegie Moscow Center
2	IMEMO
3	CEFIR(Center for Economic and Financial Research)
4	MGIMO
5	IISP(Independent Institute for Social Policy)
6	ISKRAN(Institute for the U.S. and Canadian Studies)
7	Gaidar Institute for Economic policy, FKA Institute for the Economy in transition
8	St. Petersburg Center for Humanities and Political Studies
9	EEG(Economic Expert Group)
10	IUE(Institute for Urban Economics)
11	Analytical Center for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12	RIAC(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13	Institute for Applied Economic Studies
14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Regional Policy

57) James G. McGann, "2016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 〈http://www.iris-france.org/wp-content/uploads/2017/01/2016GlobalGoToIndexReport.pdf〉 (Accessed July 5, 2018).

58) "Public Policy Research Think Tanks 2017: Eastern Europe," 〈https:// guides.library.upenn.edu/c.php?g=476482&p=3254048〉 (Accessed July 6, 2018); "В Топ-90 think tanks Центральной и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 попало 13 россий ских и 8 украинских центров," February 3, 2017, 〈https://thinktanks.by〉 (Accessed July 6, 2018).

펜실베니아대학교의 조사 결과는 싱크탱크 본연의 연구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실적과 학술 행사 실적 등에 근거하여 평가한 것으로 연구 수행 능력 순위다.[59] 러시아의 경우, 연구 능력이 영향력과 직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 요소를 감안하여 러시아 내 주요 싱크탱크를 제시하면 〈표 Ⅱ-11〉과 같다.

〈표 Ⅱ-11〉 주요 싱크탱크 현황

명칭	목적 및 대상	특성
카네기모스크바센터 Carnegie Moscow Center-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와 유라시아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 수행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지부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RIAC Российский совет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РСМД	국제문제 전문가 및 정책에 유리한 환경 조성	대외관계 및 안보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싱크탱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설립
발다이클럽 Valdai Club	국제문제 전문가 및 정책에 유리한 환경 간접적으로 조성	RIAC, 국립고등경제대학교,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MGIMO), 외교방위정책위원회(CFDP) 등이 공동설립, 매년 대통령이 발다이 회의에 참석
외교방위정책위원회 Council for Foreign and Defense Policy, CFDP Совет по внешней и оборонной политике, СВОП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 및 정책결정자들	정부 기관 내 관료들과 언론인들이 1992년 설립

59) 미국 인디아나 대학이 연구실적과 출판물 등에 의해 선별한 지정학 및 외교정책 분야의 약 40여 곳의 러시아 연구소와 싱크탱크 목록은 "Libraries: Research Institutes and Think Tanks," 〈https://libraries.indiana.edu/research-institutes-and-think-tanks〉 (Accessed July 6, 2018) 참조.

명칭	목적 및 대상	특성
고르바초프펀드 Gorbachev Fund Фонд Горбачева	시민사회 대상 공공외교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2010년 설립. 러시아 외무부와 밀접하게 관련
러시아전략연구소 Russi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RISS Российский институт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РИСИ	각지에 분포한 센터를 통해 적극적 국제 활동	푸틴이 설립. 대통령 행정실이 재정지원
리싱킹러시아 Rethinking Russia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 및 정책결정자들	ISEPR 재단 주도로 설립. "국제분석센터(Rethinking Russia International Analytical Centre)"로 불림
시민대화 Dialogue of Civilizations(DOC)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 및 정책결정자들	푸틴대통령과 가까운 블라디미르 야쿠닌(Vladimir Yakunin) 전 철도장관이 설립
민주주의와 협력연구소 Institute of Democracy and Cooperation(IDC)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 및 정책결정자들	EU의 러시아 내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와 뉴욕에 설립
정보보안문제연구소 Institute for Information Security Issues, IISI Институт проблем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ПИБ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과 정보보안 정책에 유리한 환경조성	모스크바국립대 소재 연구소

러시아의 주요 싱크탱크를 살펴 볼 때, 외교 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는 싱크탱크를 이끌고 있는 인사들이 관료 및 정치인, 학자, 언론인들이 유기적으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러시아 싱크탱크의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실제로 측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지만, 최근에는 특정 영역, 예를 들어 북극(the

Artic)에 대한 러시아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싱크탱크의 영향력 같은 연구를 통해 IMEMO나 RIAC 같은 주요 싱크탱크들이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60]

러시아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대상은 나토(NATO)의 확장에 따른 유럽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과제이며, 이에 더해 러시아의 영향권이라 할 수 있는 구소련공화국들을 계승하고 있는 인근국가들(near abroad)과 관계를 최우선 시 한다. 그 밖에 미국과의 관계, 중국, 일본, 한반도 등 아태지역 정책 역시 중요한 범주 내에 포함된다. 러시아의 주요 싱크탱크들은 이를 반영하여 연구와 정책 방향성 제시에 집중하고 있으며, 외교·안보 엘리트 및 전문가 역시 유럽 전문가들과 CIS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관민을 아우르는 러시아 싱크탱크 및 연구자들의 분석은 대단히 예리하고 정확하며, 이에 근거하여 러시아 국가이익을 설정하고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혹은 러시아에서 대외정책의 대상으로 부르고 있는 '아태지역'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정책 제언을 하는 싱크탱크들은 다음과 같다.

〈표 II-12〉 한반도 관련 싱크탱크

명칭	연혁	특성
러시아 아태안보협력위원회(정식명: 아시아 태평양 지역안보협력위원회 러시아 국가위원회)	CSCAP은 1993년 아시아지역포럼(Asian Regional Forum)의 "제2 트랙"으로 설립 CSCAP Russia는 1994년	'루스키 미르' 재단 후원으로 설립 외교관들이 전문가와 함께 개인 자격으로 아태지역문제를 토론하기

60) Filip Kucera, "The Influence of Russian Think Tanks on Russia's Foreign Policy in the Arctic," 〈https://openaccess.leidenuniv.nl/handle/1887/60436〉 (Accessed July 6, 2018).

명칭	연혁	특성
THE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CSCAP)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Й СОВЕ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МИТЕТ	“Unity for Russia” 재단의 지휘하에 설립. 2009년부터 저명한 정치학자들과 정치인, 루스키 미르 재단 사무총장 등이 주도함	위해 조직한 지역 비정부 포럼 외교관들이 MGIMO, 외교 아카데미, 모스크바 국립 대학, 동방학연구소, 극동연구소, 극동연방대학교 등의 저명학자들과 함께 활동 전개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 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IMEMO)	1956년 설립, 1925년 설립된 세계경제와 국제문제연구소를 계승	국제문제 분석과 정책지향 연구 러시아에서 선도적 단위 연구소와 학자 수에서 최고 수준(315명)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	러시아 대통령령 (2012.2.2.)으로 구성	국제분쟁 및 위기 조정을 위한 비영리 외교 및 평화안보 문제 자문기구 이고르 이바노프 전외무장관, 주요 연구소의 소장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 크렘린, 외교부 등에 외교안보 정책 제언
극동연구소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Russian Academy of Sciences (IFES)	1966년 설립	중국, 일본, 한반도, 구소련공화국 등 연구

아태지역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는 싱크탱크들 역시 대상 지역은 제한되어 있지만, 분석과 대안제시에 있어 대단히 예리하고 정확한 의견을 개진해왔다.

러시아의 전문가들 중에 상당수는 한국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분석하지만, 도출된 결론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경

우가 많다. 이는 러시아의 국익과 대국으로서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상당수 관변 싱크탱크에서 개진하고 있는 공식 견해 및 이를 반영하는 러시아 정부의 정책이나 태도 표명을 분석하면 상당히 기회주의적, 이중적 태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들의 말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를 반영하듯 일각에서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훼방을 놓지 않도록 한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가 국내에서 제기되기도 한다. 결국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 우리가 계속 러시아에 경도되고 상황논리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측면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견해로 보인다.[61] 이를 바꿔 말하면, 외교적으로 러시아와 상대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며, 러시아의 전략적 판단과 목표 및 실행수단을 파악하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러시아를 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러시아 싱크탱크 및 정부 관료들은 안보문제에서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하며, 대국의 자존심을 많이 내세운다. 역사적으로 국제관계에서 강대국의 입장을 경험하지 못한 한국으로서는 헤아리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지만, 러시아의 시각과 견해를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이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싱크탱크 및 전문가들의 견해 역시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인다.

한국이 러시아의 정확한 입장을 파악하고 한국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가 대단히 중요하다. 대러 공공외교는 단기적인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장기 계획의 일환

61) "러시아는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러시아와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고 협력해야 하는가,"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연세대 EU 장모네센터 공동주최 하계학술대회 대토론회 자료집』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화상회의실, 2018.6.16.), pp. 28~29.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싱크탱크 별 조직과 특성

(가) 카네기모스크바센터(Carnegie Moscow Center)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는 1993년에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러시아 지부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명성이 있는 독립적인 연구소가 되었다.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지역에서 최상위권의 싱크탱크로 인정을 받는다. 은행가, 자유주의 계열의 야당 정치인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이 센터의 권위를 뒷받침한다. 논문과 논평, 간행물 등 대부분의 출판물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러시아 외교정책과 코카서스(the Caucasus) 정책 전문가로 유명한 중견 정치학자인 드미트리 트레닌(Dmitri Trenin)이 2008년 12월 최초의 러시아인 소장이 된 이후 2018년 현재 계속 소장을 맡고 있다.

〈표 II-13〉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 조직

구분	성명
논평 (Commentary Editors)	드미트리 트레닌(Dmitri Trenin) 알렉산더 바우노프(Alexander Baunov) 막심 사모르루코프(Maxim Samorukov)
카네기 전문가 (Carnegie Experts)	알렉산드르 가부예프(Alexander Gabuev)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Andrei Kolesnikov) 안드레이 모브치안(Andrey Movchan)
전문가 기고 (Commentary Contributors)	파라드 알리예프(Farhad Aliyev) 알렉세이 아르바토프(Alexey Arbatov) 안드레이 아르칸겔스키 (Andrey Arkhangelskiy) 마라트 아트나쉐프(Marat Atnashev) 유리 바르민(Yury Barmin)

구분	성명
	드미트리 바체예프(Dimitri Bechev) 글렙 부구쉬(Gleb Bogush) 페트르 볼로고프(Petr Bologov)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 올레그 부클레미쉐프 (Oleg Buklemishev) 이리나 부수기나(Irina Busygina) 세르게이 차프닌(Sergei Chapnin) 아나스타시아 다가예바 (Anastasia Dagaeva)

(나)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IMEMO)

1956년 세계경제와 정치 연구소(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Politics)의 후신으로 설립되었다. 펜실베니아대학교 조사에 따르면 동유럽 지역의 싱크탱크 Top 25 가운데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명성을 갖고 있다. IMEMO는 방대한 연구 인력이 글로벌 현안 문제, 국제관계 이론과 국제정치 등을 연구한다. 국제정치 분과에서는 국제정치에 미치는 세계화의 영향, UN과 다른 국제기구들, 세계정치의 통합과정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다. 최근에 2035년의 세계정세를 전망하는 *The World of 2035, Global Outlook*를 발간했다.

〈표 II-14〉 IMEMO 조직

부서	책임자
과학·혁신부 Department of Science and Innovation	나탈리야 이바노바 (Natalya Ivanova)
경제이론부 Department of Economic Theory	세르게이 아폰체예프 (Sergey Afontsev)
글로벌 경제문제 및 경제외교정책부 Department of Global Economic Problems and Foreign Economic Policy	루드밀라 쿠두아코바 (Ludmila Khudyakova)

부서	책임자
비교사회경제및정치연구센터 Center for Comparative Socio-Economic and Political Studies	이리나 세메넨코 (Irina Semenenko)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국제안보센터	알렉세이 아르바토프 (Alexey Arbatov)
유럽연구센터 Center for European Studies	알렉세이 쿠즈네초프 (Alexey Kuznetsov)
북미연구센터 Center for North American Studies	엘레나 키리첸코 (Elina Kirichenko)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Center for Asia Pacific Studies	바실리 미헤예프 (Vasily Mikheev)
에너지연구센터 Center for Energy Research	
발전과 현대화연구센터 Center for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Studies	블라디미르 코로스 (Vladimir Khoros)
산업 및 투자연구센터 Center for Industrial and Investment Studies	블라디미르 콘드라티예프 (Vladimir Kondratiev)
전환기경제연구센터 Center for Research in Transitional Economies	세르게이 아우쿠치오네크 (Sergey Aukutsionek)
포스트 소비에트 연구센터 Center for post-Soviet studies	알렉산드르 크룰로프 (Alexander Krylov)
상황분석센터 Center for Situational Analysis	이리나 코브린스카야 (Irina Kobrinskaya)
국제자본시장부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야코프 미르킨 (Yakov Mirkin)
국제정치문제부 Department of International Political Problems	니콜라이 코솔라포프 (Nikolay Kosolapov)
유럽정치연구부 Department for European Political Studies	나제즈다 아르바토바 (Nadezhda Arbatova)
세계경제예측섹션 World Economy Forecasting Section	기비 마차바리아니 (Givi Machavariani)
정치이론섹션 Section for Political Theory	에두아르드 솔로비예프 (Eduard Soloviev)
경제모델섹션 Section of Economic Modeling	유리 루카신 (Yury Lukashin)
가격형성, 인플레와 과세 분석 그룹 Group for Analysis of Price formation, Inflation and Taxation	엘레나 글라조바 (Elena Glazova)

(다)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RIAC)

2010년 2월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된 외교 전문 싱크탱크이다. RIAC의 임무는 주요한 국제관계 이슈들에 대해 러시아의 연구기관과 외국의 분석 센터들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공동체와 러시아가 평화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IAC의 재정 중 절반은 정부에서 담당하며, 나머지 절반은 대기업과 지역에서 충당한다. 공적인 논의에서 RIAC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RIAC는 35명의 직원들이 수백 명의 전문가들을 동원하는 구조이다. 제기되는 이슈 별로 각기 다른 학계의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이 권력의 핵심에 접근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실제 RIAC의 상임위원회에는 의장인 이고르 이바노프(Igor Ivanov) 전 외무장관과 RIAC 사무국장인 안드레이 코르투노프(Andrei Kortunov), '발다이 클럽(Valdai Club)'을 이끌고 있는 표도르 루키아노프(Fyodor Lukyanov), 러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가 중의 하나인 표트르 아벤(Petr Aven) 알파뱅크(Alfa bank) 회장, 알렉세이 메쉬코프(Aleksei Meshkov) 외무차관,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i Peskov) 대통령 행정실 부실장 등이 참여한다.

RIAC 멤버들의 활동은 서구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과거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개혁 프로그램(2009~2010)에 참여했고 알렉세이 쿠드린(Alexei Kudrin) 전 재무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전략 수립에도 관여하기 때문이다. RIAC는 특정 정책에 대한 선호를 표명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영향력이 있거나 혹은 과거의 거물 정치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RIAC의 영향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를 통해 RIAC는 국내 러시아인들에게 다가갈 뿐 아니라, 러시아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국제사회에 확산하는데 관심을 기울인다.

〈표 II-15〉 RIAC 조직

구분	단위	참여인사 및 세부사업
경영(RIAC Management)	① RIAC Members General Meeting ② Board of Trustees ③ Presidium ④ Scientific Council	②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외무장관, 레오니드 아다체프스키(Leonid Adachevsky) 고르바초프 재단 사무총장, 알렉산드르 둔킨(Aleksandr Dynkin) IMEMO 원장, 게르만 그레프(Herman Gref) 스베르방크 이사회 이사장, 미하일 코미사르(Mikhail Komissar) 인테르팍스 그룹 총회장, 미하일 마르겔로프(Mikhail Margelov) 트랜스네프트 부회장, 세르게이 프리호드코(Sergei Prikhodko) 전 부총리 등
프로젝트(RIAC Projects)	① Research Projects ② Educationsl Projects ③ Publishing Projects ④ Contests ⑤ Internship	① 양자관계, 지역 및 다자관계, 연구 분야 별 프로젝트 ② 「Globalization 2.0」, 「러시아대학의 디지털 국제화」등 ④ 국제관계 온라인 코스 콘테스트, 젊은 국제문제 언론인들을 위한 전러시아 콘테스트

(라) 외교방위정책위원회(Council for Foreign and Defense Policy, CFDP)

외교방위정책위원회(CFDP)는 1992년 비정부기구(NGO)로 설립되었다. 창립인사들은 국방부와 정보기관 같은 권력부서, 방위산업체, 학자 집단, 언론 매체 뿐 아니라 관료와 기업인도 포함하였다. 소연방 해체 이후 러시아에 유사한 조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CFDP는 급속하게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했다. CFDP는 안보정책 분야에서 정책과 전략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나, 유사한 영역에서 경쟁적인 기관들이 등장

하면서 영향력 일부를 상실하기도 했으나 새로운 기관, 예를 들어 RIAC와도 구성원들이 상당히 중복되기에 아직 건재한 상태이다. 누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으나, 발다이 클럽, 학술지 Russia in Global Affairs, 신문 Voennopro-myshlennyi Kurer(VOK), Rossiiskaia gazeta(RG)와 뉴스 기관 RIA Novosti 등이 위원회와 협력관계라고 알려져 있다. VPK는 러시아 방위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RG와 RIA는 모두 정부가 통제하는 뉴스 미디어이다. CFDP의 웹사이트와 페이스북이 모두 러시아어로만 되어 있어 CFDP의 홍보 대상이 러시아 대중과 국내 전문가 집단 등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62]

(마) 고르바초프펀드(Gorbachev Fund)

고르바초프 펀드는 공공외교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2010년 설립되었다. 재정은 국가와 밝혀지지 않은 후원자들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펀드의 주요 업무는 러시아 국내외의 NGO들을 후원하는 일이다. 공모 절차를 통해 기금이 배분된다. 매년 20개의 세부 분야별로 260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다른 나라, 지역 및 주제 별로 다이알로그 프로젝트(dialogue project)가 운영되며, 학술 및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전문가들과 학생들에게 유학과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63]

62) "외교방위정책위원회," 〈http://svop.ru〉 (검색일: 2018.7.6.).
63) "고르바초프 펀드," 〈http://www.gorby.ru〉 (검색일: 2018.7.6.).

〈표 II-16〉 고르바초프 펀드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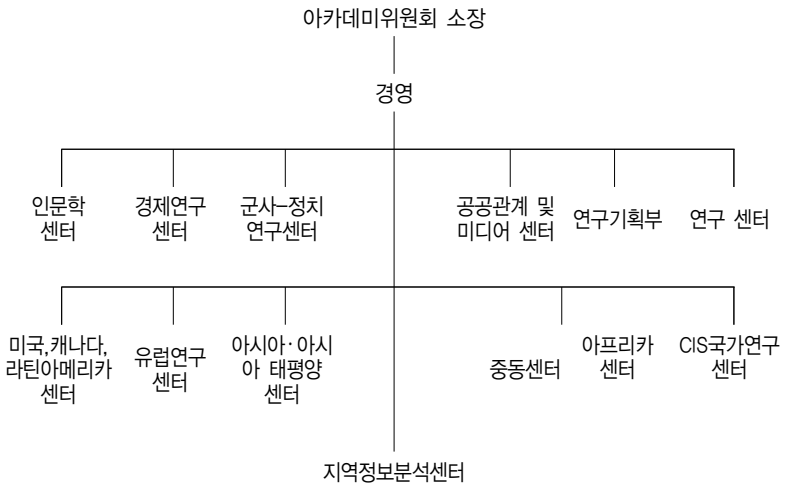
구분	인물
집행위원회	이사장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 부이사장 이리나 비르간스카야(Irina Virganskaya) 사무총장 올레그 즈드라보무슬로바(Olga Zdravomyslova)
스태프	출판국장 파벨 팔라즈첸코(Pavel Palazhchenko) 출판부국장 카렌 카라게주안(Karen Karagezyan) 도서관 및 전시센터 부장 알렉세이 리트빈(Alexei Litvin) 연구원 블라덴 로기노프(Vladlen Loginov) 연구원 게오르기 오스트로우모프(Georgy Ostroumov) 연구원 안드레이 루아보프(Andrei Ryabov) 자문위원 보리스 슬라빈(Boris Slavin) 비서국장 이리나 바기나(Irina Vagina)
협력기관	국제그린크로스(Green Cross International) 라이사 고르바초프 재단(Raisa Gorbachev Foundation) 노벨상 수상자 위원회(Nobel Peace Laureates Summits) 뻬제르부르그 대화(Petersburger Dialog) 노바야 가제타(Novaya gazeta)

(바) 러시아전략연구소(Russi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RISS)

러시아전략연구소는 1992년 2월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되었다. 1992년부터 2009년 까지 RISS는 대외정보국(FIS) 산하의 연구소였으며 이후에는 대통령 행정실에 분석 보고서를 제출한다. RISS의 예산은 전적으로 국가 출연이며, 소장은 대통령령에 의해 선임된다. 자금은 대통령 행정실을 통해 전달되며 국가안보에 관한 전략적 결정을 위해 분석 정보를 권력기관에 제공한다. RISS의 분석 보고서가 대통령실, 안보위원회와 정부 내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러시아 외교정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RISS의 우크라이나에 관한 분석 및 제언은 실제 러시아 외교정책과 일치하였다. 레쉐트니코

프(Reshetnikov) 소장 재임 당시에는 러시아 정교회와 러시아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산하에 수많은 연구센터들이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의 '근외지역(the near abroad)', 경제, 유럽-대서양, 아시아, 중동 및 방위 문제 등을 다룬다. 이주와 인구문제 등 국내 문제를 다루는 복합 문제 연구 센터(Center for Research on Complex Problems)도 있다.[64]

〈그림 Ⅱ-1〉 RISS 조직



(사) 리싱킹러시아(Rethinking Russia)

리싱킹러시아는 사회경제 및 정치연구소(Institute of Social-Economic and Political Research, ISEPR)에 뿌리를 두고 있다. ISEPR은 주로 러시아 국내정치 문제를 다루며 '전러시아인민전선(All-Russia People's Front, ONE)와 깊이 연관된다. 국가두마 의

64) "러시아전략연구소," 〈https://en.riss.ru/〉 (검색일: 2018.7.6.).

장인 비아체슬라츠 볼로딘(Viacheslav Volodin)은 ONE의 창설을 주도했으며 당시 그는 대통령 행정실 부실장으로서 러시아 국내 정치를 총괄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ISEPR 소장인 드미트리 바도프스키(Dmitri Badovskii)는 러시아 정치에서 영향력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야당의 반대를 희석시키는 정당을 결성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2013년에 ISEPR를 대통령실의 지원을 받는 재단 중의 하나로 지정했다.

리싱킹러시아는 발다이 클럽에 대한 대안으로 창설되었다. 설립 목적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하여 국내정치를 특화시키는데 있었다. 이를 통해 국내외에 러시아의 정치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항하여 푸틴 집권 초기 주창되었던 이른바 '주권민주주의(sovereign democracy)' 개념을 재전파하려는 의도였다. 모스크바와 브뤼셀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리싱킹러시아에 따르면 서구에서 러시아에 대해 갖고 있는 '좋지 않은' 이미지가 러시아의 정책과 정치적 행동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에 의해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65] 리싱킹러시아의 의장인 드미트리 바도프스키는 푸틴이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리싱킹러시아가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역설하기도 했다.[66] 러시아 정부 역시 '외교정책 개념(Foreign Policy Concept)'을 통해 러시아 외교정책의 방향성 중의 하나로 규정한다.[67]

---

65) "리싱킹 러시아," 〈http://rethinkingrussia.ru/〉 (검색일: 2018.7.6.).

66) Dmitry Badovsky, "Vladimir Putin Succeeding in Creating a Direct Democracy Mechanism," *Rethinking Russia Special Issue*, no. 3, Summary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Rethinking Russia", pp. 5~6, 〈http://rethinkingrussia.ru/en/wp-content/uploads/2016/05/Journal_Eng.pdf〉 (Accessed July 6, 2018).

67) "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 November 30, 2016, 〈http://www.mid.ru〉 (Accessed July 6, 2018).

(아) 시민대화(Dialogue of Civilizations, DOC)

시민대화 연구소(DOC)는 2016년 여름 베를린에서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DOC의 재원은 스위스에 소재한 세계 공공포럼 '시민대화'(the world Public Forum "Dialogue of Civilizations, WPF DoC)의 지원과 회비 및 기타 후원을 통해 유지된다고 밝힌다. WPF DoC는 2013년 러시아의 전 철도청장이었던 블라디미르 야쿠닌(Vladimir Yakunin)이 등록하였다. 야쿠닌은 푸틴과 가까운 지인들 중 한 사람으로 권력 네트워크의 핵심부에 위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아내 나탈리아 야쿠니나(Natalia Yakunina)는 WPF DoC의 회장이며 동 재단은 "대화와 역사적 전통에 입각하여 중국몽(中国梦), 유라시아 횡단벨트 개발과 세계질서 같은 세계질서의 대안적 개념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UNESCO의 '화해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가 전개해온 정신에 따라 문화 간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한다.[68]

DOC는 글로벌 정책결정자들과 주요 다문화기관들에 다음과 같은 6개의 주제에 대한 실제적인 충고와 결론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힌다.

- 동과 서: 탈근대의 정체성 갭을 메꿈
- 인류를 위한 생활 공간: 인간 존재의 인간성을 보호
- 글로벌 발전을 위한 정책, 제도와 진보
- 사회적 야만주의의 위협에 대처하는 문명
- 글로벌 발전의 중추로서의 인프라 구조
- 포스트-모더니티의 경제학: 전통 모델의 붕괴[69]

---

68) DofC, "WPF 'Dialogue of Civilizations' today," 〈http://dofc-foundation.org/programmes〉 (Accessed July 6, 2018).

69) 〈https://doc-research.org/about-us/mission/〉 (Accessed July 6, 2018).

DOC는 UN과의 협력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협력 양상은 뚜렷하지 않다. DOC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정부의 시각을 홍보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를 주최하는 등 자체의 연구 기능보다는 러시아의 정책을 홍보하고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지양하고 다중심적인(multi-centric) 국제질서의 창출이라는 대안을 설정하는데 주력한다.

〈표 II-17〉 DOC 주요 인사들

구분	인물
DOC 연구팀	연구부장 알렉세이 말라센코(Alexey Malashenko) 연구실장 안드레이 필리포프(Andrey Filippov) 경제학·정치학 부장 블라디미르 포포프(Vladimir Popov) 수석연구위원 니키타 코노팔체프(Nikita Konopaltsev) 수석연구위원 바그로즈 갈레기(Bagrooz Gharleghi) 수석연구위원 위르겐 그로테(Jűrgen Grote) 연구위원 디아나 오를로바(Diana Orlova) 연구위원 엘레나 술리모바(Elena Sulimova) 연구위원 마테오 보노미(Matteo Bonomi) 연구위원 마야 야니크(Maya Janik) 부연구위원 헤서 브라운(Heather Brown)
외부 전문가들	Adrian Pabst, Alexander Rahr, Aymeric Chauprade, Beatriz Bissio, Charly Gabriel Mbock, Christine De Vollmer, Christopher Black, David Hoile, Fred Dallmayr, Fred Harrison, Hans Koechler, Jens Wendland, John Laughland, Kees van der Pijl 등

(자) 민주주의와 협력연구소(Institute of Democracy and Cooperation)

민주주의와 협력연구소(Institute of Democracy and Cooperation, IDC)는 2008년 파리에서 설립되었고 초대 소장은 전 국가두마 부의장 나탈리아 나로치니츠카야(Natalia Narochnitskaya)가 맡았다. 당시 파리와 거의 동시에 뉴욕에서도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두 곳 모두 러시아의 정치 지도부에서 지원을 했으며, 서구에 영향을 미치

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파리와 뉴욕 사무소 개설은 러시아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했던 정치학자 안드라니크 미그라니안(Andranik Migranyan)이 이끌었던 뉴욕 사무소는 2015년 12월 폐쇄되었다. 그 이유는 주로 재정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러시아의 기업가들로부터 재정을 충당해왔으나 2014~2015년 서방의 제재와 석유가격 하락으로 인해 그들의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파리 사무소는 실제로 소장인 나로치니트스카야와 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존 래프랜드(John Laughland), 두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기 연구소의 설립목적은 유럽의 인권 상황을 조사 및 연구하는 것이었지만,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나로치니트스카야와 래프랜드 두 사람이 전문가로서 거의 다양한 주제 영역에 걸쳐 자신의 의견을 회의석상에서 발표하거나 인터뷰를 한다. 동 연구소는 재정상의 문제와 연구소에서 산출한 결과물의 부족 등으로 인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70]

(차) 정보보안문제연구소(Information Security Institute, IISI)

정보보안문제연구소(Information Security Institute, IISI)는 2003년 설립되었으며, 모스크바국립대학교 내 독립된 조직으로 발족했다. 주 목적은 연구이며 연구소에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는다. 재정에 관해 공개된 내용은 없지만 파트너들의 명단은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소의 업무가 대통령 행정실, 내각 및 정부 기관과 정보기관을 위한 임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IISI는 대통령 행정실의 일부인 러시아국가안보위원회(Russian

70) Carolina Vendil Pallin and Susanne Oxenstierna, *Russia Think Tanks and Soft Power* (Stockholm: Swedish Defence Research Agency, 2017), pp. 36~37.

Security Council)의 기구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IISI의 소장과 부소장 4명 중 3명이 국가안보위원회의 기구 출신이다. 블라디슬라프 쉐르스티우크(Vladislav Sherstiuk)는 소련 KGB에서 일했으며, 국가안보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IISI는 외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국가안보위원회의 채널들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국제적으로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에 관한 러시아의 견해를 전파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IISI는 매년 정보보안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2017년까지 14회의 회의가 열렸으며, 주로 독일에서 진행되었다. 회의를 통해 러시아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의 주권을 강화하는 의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러시아는 UN과 함께 정보보안 협약 초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며, IISI는 이를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71]

〈표 II-18〉 IISI 조직

구분	인물
소장	블라디슬라프 쉐르스티우크(Vladislav Sherstyuk)
수석 부소장	발레리 야첸코(Varery Yaschenko)
부소장	블라디미르 소콜로프(Vladimir Sokolov)
연구실장	알렉세이 살미코프(Alexey Sal'nikov)
정보보안 분과 수학연구	실장 올레그 로가체프(Oleg Logachev) 교수 블라디미르 아나신(Vladimir Anashin) 박사 올레그 카자린(Oleg Kazarin) 박사 파벨 필루긴(Pavel Piluygin) 연구원 니콜라이 바르노프스키(Nikolay Varnovskiy)
컴퓨터 시스템 섹션 정보보안	실장 발레리 바세닌(Valreiy Vasenin)
정보보안 섹션인문연구	
문서지식 및 승인센터	
국제보안협력 및 반테러연구 센터	

71) "정보보안문제연구소," 〈http://www.iisi.msu.ru/〉 (검색일: 2018.7.6.).

(파) 러시아 아태안보협력위원회(CSCAP Russia)

러시아 아태안보협력위원회의 정식명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위원회(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Russian National Committee, CSCAP Russia) 러시아 국가위원회'로서 '루스키 미르(Russki Mir)' 재단 후원으로 설립되었다. CSCAP는 외교관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개인자격으로 아태지역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지역 비정부 포럼이다. CSCAP 러시아에서 러시아 외교관들과 더불어 MGIMO, 외교 아카데미,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동방학연구소, 극동연구소, 극동연방대학교 등 아태지역연구 관련 저명 학자들이 함께 활동을 한다. 이들은 필요시 주제별로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공동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중에는 한반도 관련 보고서도 포함된다. 작성된 연구보고서는 크렘린, 외교부 등에 정책 제언 형식으로 제출되며 한반도 정책 수립에 기여한다.

(카) 극동연구소(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Russian Academy of Sciences)

극동연구소는 동방학연구소와 더불어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을 중심으로 보려는 시각이 강한 대표적인 연구기관이다. 연구소의 고위층 및 중진 학자들이 과거 소련 시대부터 북한에 파견근무를 했거나 북한과 교류를 많이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최근에 연구자 세대교체가 되면서 이 같은 경향이 약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극동연구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외교정책 이슈와 경제 통합 및 중국, 일본, 한국의 외교정책, 역사, 경제 발전 문제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극동연구소는 제정러시아 시대부터 시작되어 200년 이상 축적된 러시아의 동아시아 연구를 계승하는 기관으로 자부심을 갖으며, 특히 중국 연구는 역사가

가장 깊다. 현재 1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연구하며, 연구소 산하에 10개의 연구 센터가 있으며, 극동지역의 치타(Chita)와 제2도시 쌍트 뻬제르부르그(St. Petersburg) 지역의 국립대학 내에 연구소의 분소를 둔다.[72]

〈표 II-19〉 극동연구소 조직

구분	인물
소장	세르게이 루슈아닌(Sergey G. Lusyanin)
연구센터	러시아-중국관계 연구센터 중국 경제와 사회 연구센터 중국정치 연구센터 동북아문명비교 연구센터 현대중국역사 연구센터 동북아전략이슈 및 상하이협력기구 연구센터 한국 연구센터 일본 연구센터 베트남 및 아세안 연구센터 과학정보와 문서 센터
부속 기관	출판부 대외협력부 정보기술부 대학원 및 박사코스
분소	치타국립대학교 내 분소(2004 설립) 쌍트 뻬쩨르부르그대학교 동방학과 내 분소(2009 설립)

(3) 언론 매체

(가) 주요 언론 현황

소비에트 시대부터 현재까지 러시아의 언론은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 언론은 국내 문제 뿐 아니라 대외정책 형성과정에

72) "극동연구소," 〈http://www.ifes-ras.ru〉 (검색일: 2018.7.6.).

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2014년 이후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정부가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이 크게 주목을 받았다. 푸틴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언론을 러시아 외교정책의 의제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이용한다. 주 메시지는 서구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불신감을 전달하면서 러시아의 국제정치에서의 역할을 고양시키는데 의미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러시아의 미디어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네트워크 대상으로써 러시아 미디어를 제시하는 것은 앞서 밝힌 대로, 러시아의 외교정책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주요 언론 현황은 〈표 Ⅱ-2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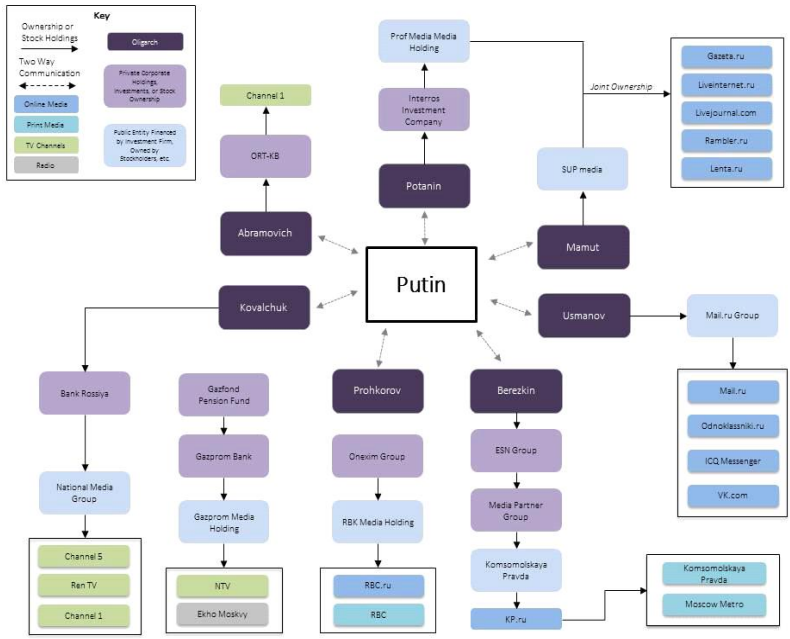
〈표 Ⅱ-20〉 주요 언론 현황

유형	명칭
통신사	• ITAR-TASS: http://www.itar-tass.com • Interfax: http://www.interfax.ru • RIA-Novosti: http://en.rian.ru
일간지	• Izvestiya: http://www.izvestia.ru • Kommersant: http://www.kommersant.ru • Nezavisimaya Gazeta: http://www.ng.ru • Vremya Novosti: http://www.vremya.ru • Rossiskaya gazeta: http://www.rg.ru • Komsonolskaya Pravda: http://www.kp.ru • Moskoski Komsonolets: http://www.mk.ru • TRUD: http://www.trud.ru • Tribuna: http://www.tribuna.ru • Krasnaya Zvezda: http://www.redstar.ru • Vedomost: http://www.vedomost.ru • Novaya Gazeta: http://www.novayagazeta.ru
주간지 및 월간지	• Itogi: http://www.itogi.ru • Ogoniok: http://www.ogoniok.com • Kommersant-Vlast: http://www.kommersant.ru

유형	명칭
	• Profile: http://www.profile.ru • Argumeet i fakti: http://www.aif.ru • Palamentskaya Gazeta: http://www.lgz.ru • Kultura: http://www.kulturagz.ru • Expert: http://www.expert.ru • Kino-Park: http://www.kino-park.ru
TV	• Russia1: http://www.rutv.ru • 제1채널: http://www.1tv.ru • NTV: http://www.ntv.ru • TV Center: http://www.tvc.ru • Ren-TV: http://www.ren-tv.com • STS: http://www.ctc-tv.ru • TNT: http://www.tnt-tv.ru
라디오	• Mayak: http://www.radiomayak.ru • Echo Moscow: http://www.echo.msk.ru • Govorit Moskva: http://www.govoritmoskva.ru

여러 언론 매체 중에서 러시아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정보 매체는 텔레비전이며, 그 뒤를 인터넷, 라디오와 인쇄 매체가 잇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국영 미디어를 직접적으로 통제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민간 언론에도 공식·비공식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올리가르히(Oligarchs)'로 불리는 러시아의 부유한 기업가들은 자신의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푸틴 대통령과 연계를 갖고 있다.

〈그림 Ⅱ-2〉 올리가르히와 그들의 소유 미디어



출처: Vera Zakem, Paul Saunders, Umida Hashimova and P. Kathleen Hammerberg, *Mapping Russian Media Network: Media's Role in Russian Foreign Policy and Decision-making* (Washington D.C: International Affairs Group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2018), p. 11.

푸틴 집권기 러시아의 언론은 러시아의 외부 세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중요한 전초기지로 운영되고 있다. 러시아의 미디어 전략과 메시지 전달에 있어 대통령 행정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푸틴대통령이 세 번째로 집권한 2012년 이후 이 같은 현상이 뚜렷해졌다. 특히 외부로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푸틴 대통령 자신은 미디어에서의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도의 부담이 있는 위기 상황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상황을 통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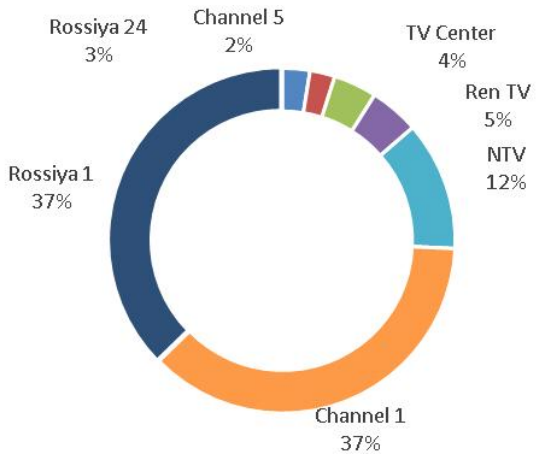
(나) 주요 언론

러시아의 주요 언론 매체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텔레비전

러시아인들이 가장 즐겨보는 일간 및 주간 뉴스 프로그램 10개를 손꼽을 때 이를 방영하는 채널은 7개로써 Channel 1, Rossiya 1, NTV, TV Center, Ren TV, Rossiya 24, Channel 5가 해당된다.

〈그림 II-3〉 인기 TV 채널



출처: "Information on viewers for December 19–25, 2016," TNS, May 4, 2017, 〈http://tns-global.ru/services/media/media-audience/tv/national-and-regional/audience〉 (Accessed September 8, 2018).

■ 웹사이트

올리가르히 소유의 Mail.ru 그룹이 mail.ru 이메일 서비스, 소셜 미디어 Odnoklassniki와 Vkontakte,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이 서비스는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들로써 매달 1억 2천만 명 이

상이 방문한다. 그 다음 순위는 역시 올리가르히 람블러(Rambler)가 보유하고 있는 4개의 웹사이트들로써, LiveJournal.com and LiveInternet.ru: and news websites lenta.ru and gazeta.ru.가 해당된다.

■ **라디오**

러시아인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방송국은 상업 음악 방송인 *Yevropa Plyus, Avtoradio, Russkoye Radio, Dorozhnoye Radio, Retro FM, Radio Shanson* 등을 꼽을 수 있다. *Ekho Moskvy, Rario Mayak, and Vesti FM* 은 뉴스 보도와 국내외 문제 분석을 함께 하고 있다.

■ **인쇄 매체**

그리고리 베레즈킨(Grogoriy Berezkin)이 운영하고 있는 세 개의 신문 *Komsomolskaya Pravda, Metro Daily, and Metro Weekly*를 가장 많은 시민들이 구독하고 있으며 구독자 수는 약 6백만 명으로 추산된다. 국영인 러시스카야 가제타*(Rossiyskaya Gazeta)*를 제외한 모든 신문이 타블로이드판이며 현안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다.

(4) 공공외교기관

(가) 사회단체 현황

공공외교를 수행하기 위한 러시아의 주요 사회단체들은 〈표 Ⅱ-21〉과 같다. 앞서 싱크탱크 현황을 살펴보면서 고르바초프 펀드(재단)와 민주주의와 협력연구소에 대해서 제시한바 있지만, 기관의 성격 상 싱크탱크와 공공외교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여겨져 〈표 Ⅱ-21〉에서 함께 언급한다.

〈표 II-21〉 주요 사회단체 현황(공공외교 관련)

명칭	성격
고르바초프 재단 The Gorchakov Foundation	• 운영 프로그램 – Baltic Dialogue: 발틱 지역 내 러시아어 구사 청년 대상 – Caucasus Dialogue: 19세기 코카서스 전쟁의 역사적 기념 사업에 초점
루스키미르재단 Russkiy Mir Foundation	• 2007년 푸틴대통령의 대통령령으로 설립 • 전 세계에 러시아어를 보급하고 러시아의 세계(Russian world)를 범세계적으로 형성하려는 목적에서 정부 후원기관으로 설립됨 • 러시아정교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서구의 문화전통에 도전하는 가치 전파 • 영국문화원이나 괴테문화원과 같은 서유럽의 문화기관을 모델로 삼음
역사기억재단 Historical Memory Foundation	• 역사학자 알렉산더 듀코프(Alexander Dyukov)가 2008년에 설립 • 러시아와 20세기 동유럽역사의 주요 주제에 관한 편견없는 연구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민주주의와협력연구소 Institute for Democracy and Cooperation	• 러시아 내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설립 • 연구소의 성격을 싱크탱크로 규정 • 뉴욕과 파리에 사무실 개설
러시아재단 Positive Russia Foundation	• 2013년 런던에 개설 • New Century Media의 소유주인 레윈(Barob Tim Lewin)과 번사이드(David Burnside)가 재정지원 • 푸틴의 오랜 지기인 두마의원 바실리 쉐스타코프(Vasily Shestakov)가 이사장 • 영국 내 러시아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려는 목적에서 설립(영국의 대중들에게 러시아 정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인식시킴)

(나) 기관 별 조직

■ 루스키 미르 재단(Russkiy Mir Foundation)[73]

부서	참여자
재단 이사장	루드밀라 베르비츠카야(Ludmila Verbitskaya)
이사회	알렉산더 고골레프스키(Alexander Gogolevsky), 알렉산더 드자소코프(Alexander Dzasokhov), 올레그 도브로데예프(Oleg Dobrodeyev), 비탈리 이그나텐코(Vitaly Ignatenko), 그리고리 알페예프(Grigory Alfeev), 콘스탄틴 코사체프(Konstantin Kosachev), 비탈리 코스토마로프(Vitaly Kostomarov),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드미크리 리바노프(Dmitry Livanov), 블라디미르 메딘스키(Vladimir Medinsky), 나탈리아 나로치니크스카야(Natalia Narochnitskaya), 브야체슬라프 니코노프 (Vyacheslav Nikonov), 미하일 피오트로프스키(Mikhail Piotrovsky), 안드레이 루르센코(Andrei Fursenko), 블라디미르 야쿠닌(Vladimir Yakunin)
운영위원회	브야체슬라프 니코노프(위원장), 세르게이 보그다노프(Sergei Bogdanov), 알렉세이 자클루야즈민스키(Alexei Zaklyazminsky), 베니아민 카간노프(Veniamin Kaganov), 파벨 프로코피예프(Pavel Prokofiev), 브랄디미르 체르노프(Vladimir Chernov)
지회	뻬쩨르베르그 지부 극동지부

■ 역사기억재단[74]

부서	참여자
재단 이사장	알렉산드르 듀코프(Alexander Dyukov)
상임위원회	위원장 안드레이 아르찌조프(Андрей Артизов) 위원 예핌 삐조바르(Ефим Пивовар) 위원 콘스탄틴 프로발로프(Константин Провалов) 위원 발레리 티쉬코프(Валерий Тишков)
주요 업무	20세기 러시아와 동유럽의 역사적 주제 학술회의 및 라운드 테이블

73) "루스키 미르 재단," 〈http://russkiymir.ru/〉 (검색일: 2018.7.6.).

74) "역사기억재단," 〈https://web.archive.org/web/20120306193712/http://www.historyfoundation.ru/ru/council.php〉 (검색일: 2018.7.6.).

부서	참여자
	연구결과의 언론 발표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연방 및 지방당국과 협력 러시아 및 외국의 언론 매체 및 비정부기구와의 협력 외국의 연구기관과 교환 프로그램 출판, 교육, 강의 활동

■ 러시아재단

부서	참여자
재단 이사장	바실리 쉐스타코프(Vasily Shestakov)
조직	미공개(웹사이트 없음)
주요 업무	재단이 담당하는 지리적 영역(런던)은 한정되어 있지만, 재단의 주 기능은 러시아 외교정책과 국제관계 영역에서 협력하는 다른 NGO들과 일치함. 즉 정부 정책을 외국인들에게 설명하고 러시아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정보를 제공[75]

다. 주요 전문가

(1) 싱크탱크

(가)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

- 드미트리 트레닌(Dmitri Trenin): 55년 생, 국방부 군사연구소 박사, 대령 예편, 현실주의적 시각(러 국익 인정하지만 서구와 협력 추구 바람직)
- 알렉산더 바우노프(Alexander Baunov): 69년 생, 모스크바국립대 졸업, 외무부 근무, 언론인 활동, 러시아 민주주의 상황에 대해 비판적임

75) Greg Simons, "The Role of Russian NGOs in New Public Diplomacy," *Journal of Political Marketing*, vol. 17, no. 2 (2018), p. 155.

- 막심 사모르루코프(Maxim Samorukov):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 졸업, 외교전문 언론인 활동, 독립뉴스사이트slon.ru에서 근무, 현재 부편집인
- 알렉산드르 가부예프(Alexander Gabuev): 모스크바국립대 중국역사 전공, 고등경제대학 석사, 4개 국어 구사, 코메르산트-블라스트의 부주필 역임, 메드베데프 공보팀, 중국 및 중앙아시아 전문가, 현재의 러중협력을 러시아가 장기적 국익에 입각하기보다는 정권 차원의 생존을 추구한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이 유럽을 대체할 수 없다고 봄
-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Andrei Kolesnikov): 65년 생, 모스크바 국립대 법학부 졸업, 노바야 가제타 편집인, 이즈베스티야 부주필 등 역임, 추바이스 전기 저자, 러시아 국내 문제 담당, 중립적 시각 유지
- 안드레이 모브치안(Andrey Movchan): 68년 생, 모스크바 국립대 석사,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MBA, 사이프러스 중앙은행 이사 역임, 경제정책 담당, 러 정부와 야권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모두 비판적

(나)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

- 알렉산더 둔킨(Alexander Dynkin): 경제학박사, 경제성장, 기술혁신, 에너지 연구 분야 연구, IMEMO 소장
- 나탈리야 이바노바(Natalya Ivanova): 경제학박사(1979), 1976년부터 IMEMO 근무, 현재 IMEMO 과학·혁신부 부장 및 제1부소장, 글로벌 경제, 과학기술 발전 예측 등 담당, 두마 교육과학위원회 워킹그룹, 러시아 연방 과학기술부 OECD협력분과위원 등 정부 위원회 다수 참여

- 세르게이 아폰체예프(Sergey Afontsev): 1973년 생, 경제학박사, 현 IMEMO 경제이론부 부장, MGIMO 교수, 경제 이론 및 국제 경제 담당, Valdai Club, RIAC 등 다수 기관에 참여
- 루드밀라 쿠두아코바(Ludmila Khudyakova): 경제학박사, 1974년부터 IMEMO에서 근무, 글로벌 경제문제 및 경제외교정책부 부장, 세계경제, 국제금융, 러시아 금융 등 담당, 영어, 불어 구사
- 이리나 세메넨코(Irina Semenenko): 1957년 생, 정치학박사, IMEMO 비교사회경제 및 정치연구센터 센터장, 국립고등경제대학 교수 역임, EU, 이탈리아 및 비교정책분석 전공, 영어, 불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구사
- 알렉세이 아르바토프(Alexey Arbatov): 1951년 생, MGIMO 정치학박사, START Ⅰ 협상 참여, 전 국가두마 의원, (1993~2003), 자유주의적 성향의 러시아연합민주당(Yabloko) 부총재(2001~2008), 국제관계, 국제안보, 군비통제 및 군축 분야에서 러시아를 대표하는 가장 저명한 전문가로 뽑힘, 다수의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성향
- 알렉세이 쿠즈네초프(Alexey Kuznetsov): 경제학박사, IMEMO 유럽연구센터 센터장, 세계기업지도, 초국가주의이론, 유럽과 러시아 다국적기업의 대외 직접투자 등 연구, 영문 논문 및 저서 50편, 투자유치 등 한국 관련 논문 저술
- 엘리나 키리첸코(Elina Kirichenko): 경제학박사, IMEMO 북미연구센터 센터장, 세계화, WMD의 비확산, 수출통제정책 등 연구
- 바실리 미헤예프(Vasily Mikheev): 경제학박사, IMEMO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센터장 및 부소장, 북한주재 러시아대사관 1등 서기관(1981~1984), 리투아니아 주재 러시아대사관 정무

공사(1993~1996), 극동연구소 부소장 역임, 북한체제에 비판적이며 한국과의 협력 중시 정책 등 연구

- 블라디미르 코로스(Vladimir Khoros): 역사학박사, IMEMO 발전과현대화연구센터 센터장, 러시아사, 세계경제, 서구와의 관계 등 연구
- 블라디미르 콘드라티예프(Vladimir Kondratiev): 경제학박사, IMEMO 산업 및 투자연구센터 센터장, 세계화, 경제 현대화, 경제정책 등 연구
- 세르게이 아우쿠치오네크(Sergey Aukutsionek): 경제학박사, IMEMO 전환기경제연구센터 센터장, 경제정책, 비즈니스 메카니즘, 러시아 기업의 경쟁력 등 연구
- 알렉산드르 크룰로프(Alexander Krylov): 역사학박사, IMEMO 포스트 소비에트연구센터 센터장, 코카서스 지역 연구
- 이리나 코브린스카야(Irina Kobrinskaya): 역사학박사, IMEMO 상황분석센터 센터장, 국제정세 분석
- 야코프 미르킨(Yakov Mirkin): 경제학박사, IMEMO 국제자본시장부 부장, 거시경제 전공, 급속한 경제성장과 군비증강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푸틴의 노선에 반대(러시아경제에 대한 냉철한 분석자인 전 부총리 Kudrin의 견해와 동일)
- 니콜라이 코솔라포프(Nikolay Kosolapov): 역사학박사, IMEMO 국제정치문제부 부장, 구소련 말부터 경제개혁 주창하는 경제학자로 주목받음, 국제관계 전공, 미러관계 등 연구,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미국의 대러 정책 평가(미국은 러시아의 핵능력을 감퇴시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만들려 함)
- 나제즈다 아르바토바(Nadezhda Arbatova): 정치학박사, IMEMO 유럽정치연구부 부장, EU통합, EU-러시아 관계, 유럽안보 등

연구, 영어, 불어, 이태리어 구사, 알렉세이 아르바토프와 부부 관계

- 기비 마차바리아니(Givi Machavariani): IMEMO 세계경제예측 섹션 부장, 거시경제 전공
- 에두아르드 솔로비예프(Eduard Soloviev): 정치학자, IMEMO 정치이론섹션 부장, 러시아 외교정책, 미러관계 등 연구
- 유 루카신(Yu Lukashin): 경제학박사, IMEMO 경제모델섹션 부장, 회계분석, 펀드 마켓 등 연구
- 옐레나 글라조바(Elena Glazova): 경제학박사, IMEMO 가격형성, 플에와 과세 분석 그룹 부장, 가격, 이윤, 규제, WMD 비확산 전략 등 연구

(다)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 러시아전략연구소 등

- 알렉산드로 파노프(Alexander Panov): 1944년 생, MGIMO 졸업, 현 러한소사이어티 부회장, 주한국 대사(1992), 외무부 차관(1994), 주일본 대사(1996), 주노르웨이 대사(2004) 역임
- 아나톨리 토르쿠노프(Anatoly Torkunov): 1950년 생, MGIMO 졸업, 현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MGIMO) 총장, 러한소사이어티(러시아의 한국 전문가 모임) 회장, 아시아·태평양 및 동북아 지역 전문가, 서울 명예시민, 러시아 특명 전권대사
- 야로슬라브 쿠즈미노프(Yaroslav Kuzminov): 1957년 생, 경제학박사, 현 고등경제대학(Higher School of Economics, HSE) 총장, 예브게니 야신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관인 고등경제대학 설립,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
- 세르게이 카라가노프(Sergey Karaganov): 1952년 생, 모스크바대 졸업, 역사학박사, 고등경제대학 세계경제와 국제관계 대학

학장, 외교방위정책위원회(CFDP) 상임위원회 명예의장

- 표도르 루키아노프(Fyodor Lukyanov): 1967년 생, CFDP 기관지 Russia in Global Affairs의 주필, CFDP 상임위원회 의장, 발다이 클럽 연구실장
- 미하일 프라드코프(Mikhail Fradkov): 1950년 생, 모스크바 공작기계대 졸업, 대외경제관계성 근무, 러시아 연방 총리(2014~2017) 역임, 현 해외정보국 (FSB)국장 및 러시아전략연구소(RISS) 소장
- 이고르 보로브코(Igor Borovko): 러시아전략연구소(RISS) 부소장
- 콘스탄틴 코카레프(Konstantin Kokarev): 1948년 생, 군사외국어연구소 졸업, 역사학박사, 러시아전략연구소(RISS) 아태지역연구센터 실장, 중국전문가, 저서 40권
- 브야체슬라브 니코노프(Vyacheslav Nikonov): 1956년 생, 스탈린 집권기 외무장관이었던 브야체슬라브 몰로토프(Vyacheslav Molotov)의 손자, 모스크바대 역사학부 졸업, 콤소몰 지도자, 두마의원(1993~1995), 러시아 공공의회(2005~2007), 모스크바대 공공행정학부 학장(2011~)
- 게오르기 톨로라야(Georgy Toloraya): 1956년 생, MGIMO 졸업, 경제학박사,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1국 부국장, 시드니 주재 러시아대사관 총영사 역임, 현재 루스키 미르 재단 사무총장, 한국, 미국, 홍콩, 일본, EU 등에서 논문과 기사 등 150편 이상, 한국과 북한에 대해 중도적 입장
- 알렉산더 보론초프(Alexander Vorontsov):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과장, 북한주재 러시아대사관 2등서기관 역임, 한국외대, 브루킹스연구소 등에서 방문연구학자, 친북한 성향

- 알렉산더 제빈(Alexander Zhebin): MGIMO 졸업, 정치학박사, 언론인(타스통신 특파원)·외교관으로 북한 12년 체류, 고려대 아시아연구소, 통일연구원 방문학자,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국연구센터 센터장(2004~), 북한정치, 북러관계, 한반도 핵문제 등 연구, 친북한 성향
- 나탈리아 나로치니츠카야(Natalya Narochnitskaya): 1948년 생, MGIMO 졸업, 정치인, 역사학자, 외교관, UN 사무총장실 근무(1982~1989), 두마의원, 민주주의와 협력연구소 파리 사무실
- 안드라니크 미그라니안(Andranik Migranyan): 1949년 생, 정치학자, 옐친 대통령 자문, 대통령 위원회 위원, 두마 CIS 문제위원회 위원, 민주주의와 협력연구소 뉴욕사무실 소장(2008~1015)

(라) 고르바초프 재단

- 이리나 비르간스카야(Irina Virganskaya): 1957년 생, 고르바초프의 외동딸, 피고로프 의과대학 졸업, 의학박사, 현 고르바초프 재단 부이사장, 라이사 막시모브나 클럽 회장
- 파벨 팔라즈첸코(Pavel Palazhchenko): 49년 생, 국립언어대 졸업, 소련말 정상회담 통역, 현 고르바초프 재단 출판국장
- 블라덴 로기노프(Vladlen Loginov): 29년 생, 역사학박사, 소련공산당 맑스-레닌 역사연구소 근무, 현 고르바초프 재단 연구원
- 게오르기 오스트로우모프(Georgy Ostroumov): 법학박사, 현 고르바초프 재단 연구원
- 안드레이 루아보프(Andrei Ryabov): 56년 생, 역사학박사, 러시아 정치 연구, 현 고르바초프 재단 연구원
- 보리스 슬라빈(Boris Slavin): 41년 생, 전 언론인, 현 고르바초프 재단 자문위원

(마) DOC

- 알렉세이 말라센코(Alexey Malashenko): 51년 생, 역사학박사(동방학연구소), MGIMO 교수, 고등경제대학 교수 역임, 동방학연구소, 모스크바 카네기 센터 등 근무, 국제정치 및 이슬람 전문가, 러시아어, 영어, 불어, 아랍어 저서 20여 권, 현 DOC 연구부장
- 안드레이 필리포프(Andrey Filippov): 모스크바 통신정보기술대학 졸업, 제네바대학, 스탠퍼드대 이수, 글로벌 정책과 기구, 초국가적 인프라, 중국연구, 국제조직 경영, 디지털 경제, 공유 경제, 사회적 기업 등 연구, 현 DOC 연구실장
- 블라디미르 포포프(Vladimir Popov): 모스크바대 졸업, 경제학박사, 과학아카데미 중앙경제수학연구소 교수, 모스크바신경제스쿨 명예교수, UN 자문위원 역임, 세계경제와 발전 문제에 관한 다수의 저서 집필, 12개 국어로 번역 발간, 현 DOC 경제학·정치학 부장
- 니키타 코노팔체프(Nikita Konopaltsev): 모스크바대 철학부 졸업, 공공포럼 '문명대화'에서 근무, 글로벌 발전정책과 기구, 현대정치이론과 실제 등 연구, 현 DOC 수석연구위원
- 위르겐 그로테(Jűrgen Grote): 1936년 독일 출생, 베를린 Hertie School of Governance 선임연구위원 역임, 자본과 노동의 집단 행동,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유럽통합, 지역 정책 등 연구, 현 DOC 수석연구위원
- 디아나 오를로바(Diana Orlova): 예일대 정치학과 졸업, 런던정경대 석사, 공공포럼 '문명대화'에서 근무, 국제관계, 유럽통합, 글로벌 정책과 기구 연구, 현 DOC 연구위원
- 엘레나 술리모바(Elena Sulimova): MGIMO 졸업(유럽지역연

구), 공공포럼 '문명대화'에서 근무유럽통합, 지속가능한 발전, 현대세계의 디지털화에 관심, 현 DOC 연구위원

- 마테오 보노미(Matteo Bonomi): 이태리 Scuola Superiore Sant'Anna 정치학박사, EU 내 European Policy Centre (EPC)에서 근무, 글로벌 발전, 거시경제정책, 정치체제 등 연구, 현 DOC 연구위원
- 마야 야니크(Maya Janik): 런던정경대(LSE), 비엔나대 국제관계학 석사, 국제안보, 갈등 연구, 유럽 및 러시아 연구, DOC 베를린 근무, 현 DOC 연구위원
- 헤서 브라운(Heather Brown): 조지메이슨대 정치학석사, Pew Research Center 연구원 역임, 현재 DOC 부연구위원 및 편집인, 사회운동이론, 집단행동, 중동, 북아프리카, 비폭력 저항, 초국경 운동, 이주 등 연구, 현 DOC 부연구위원

(바) 정보보안문제연구소(IISI)

- 블라디슬라프 쉐르스티우크(Vladislav Sherstyuk): 모스크바대 물리학박사(1966), 러시아안보위원회 의장 자문위원, 현재 IISS 소장
- 올레그 로가체프(Oleg Logachev): 현 모스크바대 수학과 교수, 현재 IISS 정보보안분과 수학연구 실장
- 블라디미르 아나신(Vladimir Anashin): 현 모스크바대수학과 교수, 현재 IISS 정보보안분과 수학연구 교수

(사) 극동연구소

- 세르게이 루슈아닌(Sergey G. Lusyanin): 56년 생, 역사학박사, MGIMO, 고등경제대학 교수 역임,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 "러

시아-중국 대화" 위원장 역임, 현재 극동연구소 소장

- 마리아 오세트로바(Maria Osetrova): 모스크바대 한국학전공, 경북대 한국사 석사, 연세대 한국학과 박사(2011), 현대 한국 문화, 음식문화 전공, 북한이 내세우는 문화적 상징들이 작위적이고 가공(invented)되었다는 평가를 하는 논문 발표, 현재 한국연구센터 연구원

(2) 언론 및 공공외교기관

언론계를 이끌고 있는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76]

- 로만 아브라모비치(Roman Abramovich): 올리가르히로써 금속산업에 투자했으며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있는 TV 채널인 채널 원(Channel One)의 지분 24 퍼센트를 갖고 있다.
- 그리고리 베레즈킨(Grogoriy Berezkin): ESN 그룹의 총수이며 국영철도회사인 Russian Railways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인쇄 및 온라인 타블로이트인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Komsomolskaya Pravda)와 무가 일간지 및 주간 메트로 신문을 소유한다.
- 세르게이 벨로우소프(Sergey Belousov): 온라인 뉴스 매체 smi2.ru.를 소유한다.
- 올레그 도브로데프(Oleg Dobrodeev): 국영 TV와 라디오 방송국인 VGTRK의 CEO이다.
- 콘스탄틴 에른스트(Konstantin Ernst):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76) Vera Zakem, Paul Saunders, Umida Hashimova, and P. Kathleen Hammerberg, *Mapping Russian Media Network: Media's Role in Russian Foreign Policy and Decision-making* (Washington D.C: International Affairs Group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2018), pp. 65~66.

있는 TV 방송인 '채널 원'의 CEO이다.

- 알렉세이 그로모프(Aleksey Gromov): 2000~2008년 푸틴의 공고 비서관으로 대통령 대변인실에 근무했으며, 드미트리 페스코프(Dmirty Peskov)와 더불어 현재 대통령 행정실 부실장을 맡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Dmirty Peskov)와 더불어 러시아 언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정부 내 직위이다.
- 파벨 구세프(Pavel Gusev):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Moskovskiy Komsomolets)의 주필이자 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시민사회발전과 인권에 관한 대통령위원회(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nd Human Rights)' 위원이다.
- 세르게이 키리엔코(Sergey Kiriyenko): 2016년부터 대통령 행정실 제1 부실장을 맡는다. 그 전에는 로스탐 국영 원자력 회사(Rosatom State Atomic Energy Corporation)를 운영했으며, 옐친(Boris Yeltsin) 대통령 재임기에 짧은 기간 동안 총리를 역임했다.
- 게르만 클리멘코(German Klimenko): 2015년 12월부터 러시아대통령의 인터넷 자문
- 유리 콜바추크스(Yuriy Kovalchuks): 은행과 보험업에 투자하고 있는 올리가르히로써 러시아의 가장 큰 양대 미디어 회사인 '가스프롬 미디어 홀딩(Gazprom Media Holding, GMH)'과 '국립 미디어 그룹(National Media Group, NMG)'의 소유주로 추정된다.
-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직업 외교관으로 2004년부터 외무부 장관
- 알렉산드르 마무트(Aleksandr Mamut): 은행 부분에 투자하

는 올리가르히로써 블라디미르 포타닌과 함께 주요 온라인 미디어인 Rambler&Co.에 공동투자한다.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iy Medvedev): 전 러시아 대통령으로 현재 총리. 경제와 재정 뿐 아니라 국내 및 사회정책 전반에 관여한다.
- 니콜라이 니키포로프(Nikolay Nikiforov): 언론통신부 장관
- 디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언론을 지도하는 데 있어 점차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푸틴의 공보 비서로써 그와 알렉세이 그로모프가 러시아의 언론 상황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정부 관리이다.
- 블라디미르 포타닌(Vladimir Potanin): 금속업에 투자하는 올리가르히로써 주요 온라인 미디어 그룹인 Rambler & Co를 말렉산드르 마무트와 공동소유한다.
- 세르게이 프리호드코(Sergey Prihodko): 2000년대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푸틴의 외교 문제 측근으로 활동하며, 현재 부총리이다.
- 미하일 프로코로프(Mikhail Prokhorov): 민간 투자 그룹으로 rbc.ru.를 보유한 '오넥심' 그룹의 총수이다.
- 블라디슬라프 수르코프(Vladislav Surkov): 1998~1999년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있는 TV 채널인 '채널 원'의 커뮤니케이션 국장으로 재직했다. 1999년에 대통령 행정실의 장으로 푸틴을 보좌했으며 2013년 이후에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동한다.
- 나탈리아 티마코바(Natalia Timakova):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출마 당시 선거팀의 언론 자문이었으며 현재 총리실 대변인이다.
- 알리세르 우스마노프(Alisher Usmanov): 금속산업에 투자하

고 있는 올리가르히이다. 러시아 최대의 메일 서비스 회사 Mail.ru와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브콘닥테(VKontakte)'와 '오드노클라스니키(Odnoklassniki)'를 보유한다.

- 유리 우사코프(Yuriy Ushakov): 푸틴의 외교정책 측근으로 1998~2008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 역임
- 브야체슬라브 볼로딘(Vyacheslav Volodin): 현재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 의장
- 아르카디 볼로즈(Arkady Volozh): 러시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검색엔진인 얀덱스(Yandex)의 창설자이자 가장 지분이 많은 기업인이다. 푸틴으로부터 외국의 영향력에 종속적이라는 비판을 들은 후에 얀덱스의 CEO 자리를 떠났으며, 현재 얀덱스의 네덜란드 방계 회사의 CEO이다.
- 스베틀라나 미로눅(Svetlana Mironyuk): 1968년 생, 모스크바대 졸업, 현 스베르방크(Sberbank) 부회장, RT 초대 사장, RIA Novosti 주필 역임, 미디어 모스트 근무
- 마르가리타 시모누안(Margarita Simonyan): 1980년 생, 쿠반국립대 졸업, RT 및 Rossiya Segodnya 주필, 푸틴 최측근으로 유명

대표적인 공공외교기관 인사는 다음과 같다.

- 브야체슬라브 니코노프(Vyacheslav Nikonov): 1956년 생, 모스크바대 졸업, 정치학자, 국가두마 교육위원회 의장, 모스크바국립대 공공정책학부 학장, 브릭스조사국가위원회 의장, Russia's Staregy 발행인, 루스키미르 사무총장
- 알렉산드르 듀코프(Alexander Dyukov): 78년 생, 모스크바대 졸업, 이타르-타스 근무, 주간 Military and Technical

Cooperation 주필 역임, 20세기 러시아사 전공, 발틱 지역에서의 소련의 억압 연구, 현재 역사기억재단 이사장

- 바실리 쉐스타코프(Vasily Shestakov): 53년 생, 상트 페테르부르그 출생, 유도 선수 활동, 전 국가두마 의원, 푸틴 최측근, 현 러시아재단 이사장

Ⅲ

결론

지금까지 4대 주요국가 미·중·일·러의 싱크탱크 및 공공외교 대상 기관, 주요 인물 등 국제 네트워크 확산의 주요 전략적 거점을 발굴하고 분류해왔다. 결론에 갈음하여 이를 요약해 본다.

1. 미국

반기득권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한반도 문제 주류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되는 과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내 정책결정가들은 이들의 의견을 외면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의회는 여전히 한반도 주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특히 상하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기에 기존의 보수적인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의 대북 정책이 반 트럼프 정서와 함께 더욱 강경해졌다는 점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이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지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비핵화 출구전략으로서의 제재완화 및 해제과정에 대해 미국 의회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비핵화를 위한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의회내부의 의견이 일치를 보고 있으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의 수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제재완화의 시점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넘어서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체결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이에 관해서는 동북아 질서차원에서 미국의 정책결정 네트워크가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면 이것은 단순히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닌 미중관계에 대한 미국 내 네트워크의 입장으로 확장시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미국 내 유권자들과 싱크탱크, 의회 내 이념 분극화의 경향과 맞물릴 가능성이 크기에,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2. 중국

중국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유독 강조한다. 자주성의 강조는 외세의 개입 즉 미국이 영향력이 없는 통일을 의미하며, 평화성의 강조는 자국 주변부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무력 혹은 현상타파형 통일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식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중국에게는 한반도 통일 자체가 예측불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전쟁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현상유지적 현상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정책 그룹이나 일반 대중에게 한반도 통일은 먼 미래의 일이거나, 일어나지 않을 일인지도 모르며, 좀 더 솔직하게 말 한다면 중요하지도 관심이 가는 일도 아니다. 따라서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존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다행스럽게도 중국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은 중국의 정치인, 정책관료, 지식인, 대중들에게도 유사하게 공유된다. 때문에 중국의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전략적인 통일외교와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우리의 외교적 성과를 쉽게 생산해 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중국의 정책 네트워크는 매우 다양하고, 그 범위 또한 넓다. 중국은 그 규모만큼이나 다수의 정책 싱크탱크와 대학을 보유하며, 전문인력 역시 매우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 문제에 국한시

켜 본다면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몇 거점 단위와 인물 네트워크의 핵심 전문가들을 선별할 수 있었다.

우선, 지역별로는 크게 베이징, 상하이, 동북지역 주요 정책 거점 단위를 분류할 수 있었다. 나머지 지역 역시 중요하나 전문가 풀이 상대적으로 적고, 한반도 통일 문제에 직접적인 관심이 적기 때문에 전략 거점에서는 제외하였다. 베이징에는 중국공산당 당교 산하의 개혁개방논단, 중국의 전통적 정책 연구의 산실인 중국 사회과학원, 외교부 산하의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중국의 정보 부처인 국가 안전부와 연관이 깊은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등의 국책 연구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의 정치, 행정 중심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베이징, 칭화, 런민대 등의 주요 연구기관에서 한반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및 언론 역시도 본부를 베이징에 둔다.

상하이는 중국의 최대 경제 중심 도시로, 중앙의 외교정책 보다는 지방정부의 외교정책 혹은 경제정책 자문에 주로 관심을 둔다. 다만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정서가 있으며 한반도 문제 연구에 있어 자유롭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책 연구기관으로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상하이 최고 대학인 푸단대의 한국연구센터가 미래의 한반도 전문가 양성의 산실로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의 동북지역은 북한과 국경을 접한다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북한과 교류가 빈번하였고, 자연스럽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역이다. 한반도 지역과 경제협력 확대가 이 지역의 주요 관심사항이며, 한반도와 역사, 문화, 언어적 전통을 같이 하는 조선족 집단 거주지가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한반도 문제와 통일에 깊이 관여한다. 동북지역의 지린, 랴오닝, 헤이룽장 각 성 국책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에서는 한반도 연구의 전통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각 대학들 역시 한반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한국학 분야가 발달해 있으며, 특히 지린대와 옌벤대가 중요한 핵심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 네트워크 거점은 각 단위의 성격에 따라 국책 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와 언론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큰 당국가 체제에서 국가의 민간 영역에 대한 제약이 클 수밖에 없고, 전통적으로 중국의 대학이나 민간단체 역시도 자금 운영에 있어 국가 투자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하지만, 점차 사회의 다원화, 민주화 추세에 따라 사회영역의 자율성이 제고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이러한 분류 역시 가능하게 되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중국 공산당교의 개혁개방논단, 중국국제문제연구원,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 각성 사회과학원 등이 있으며, 대학으로는 베이징과 상하이, 동북지역의 대표적 대학들이 포진해 있다. 민간단체는 각종 학회와 외교부 퇴임 관료들이 주로 운영하는 각종 우호단체들이 있으며, 최근 민간 연구소로 급부상하는 판구 연구소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소개한 민간단체들 역시 표면상으로는 민간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중국정부 부처와 유기적 연계성을 유지하며, 자금 운영 등에 있어 아직까지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정책과 차별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 관련 전문가 그룹이다. 본문에서는 국제정치/전략 그룹, 한반도 전문가 그룹, 차세대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각 전문가들의 학문적 배경에 따른 구분으로, 한반도 지역 전문가는 아니지만, 동북아 국제정치, 중국의 외교전략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는 국제정치학자 그룹과 한국어에 능통하면서 한

국과 북한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방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 온 한반도 전문가 그룹,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미 주요 기관에서 핵심적 실무 역할을 담당하고, 주요 언론에서 주목하는 차세대 전문가들을 포함한다. 한반도 통일 관련 최고의 전문가 그룹을 소개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인물 정보 역시 한정적이고, 이들의 실질 정책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마련도 힘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본문에서 소개된 전문가 외에도 이미 실제 중국 외교정책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도 존재한다. 또한 저자의 무지와 실수 혹은 지면상의 한계, 각 기관별로 소개된 전문가들의 숫자 배치 균형 등으로 인해 여기서 소개 못한 매우 영향력이 크고, 학문적 위상이 뛰어난 전문가들이 즐비하다.

사실 모든 중국의 정책 싱크탱크에서 한반도 문제는 주류가 아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주요 도시들에 위치한 중점 대학에서도 한국학 관련 학과는 소수학과에 불과하다. 그나마 전통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동북지역에서도 한국학보다는 일본학이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 전문가에 비해 한반도 전문가 그룹은 중국 내에서 위상과 영향력이 낮은 한계가 엄연히 존재한다. 중국정부의 투자와 관심이 적다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한반도 전문가 그룹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전략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면, 소위 최소의 투자를 통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적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정책 네트워크 투자와 관리는 다소 명망가 중심, 일부 기관에 대한 과도한 투자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우선, 각종 학술 교류와 정책 네트워크에 일부 전문가의 중복 출현이 비일비재하다. 다음으로 우리 측 다수의 대학, 정책기관이 중국

의 일부 대학, 연구소에만 집중적 관심을 가지는 교류의 불균형 현상이다. 이는 중복성 문제뿐 아니라 과도한 투자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물론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 인재 풀과 전략거점이 부족하다는 근본적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너무 유행에 민감하고, 주요 대학, 명망 있는 인사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반성 역시 필요하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중국에는 꼭 한반도 전문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그룹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책관료,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너무 많다. 당장의 영향력은 미비하지만, 미래의 중국 외교 정책에 실질적 기여를 할 후속세대 전문가 그룹도 엄연히 존재한다.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중국 유학생들 역시 미래의 한반도 전문가그룹으로 성장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현재보다는 미래형 과제이다. 미래를 대비한 보다 고른 투자와 효율적 분배 그리고 보다 넓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3. 일본

일본의 정책 네트워크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관되고 명확한 조건을 내세운다. 바로 통일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핵무기를 갖지 않고, 일본에 적대적이지 않은 국가이다. 달리 말하면 한국의 주도 하에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반일 감정이 심하지 않은 통일국가를 의미한다.

일본은 장기적인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도 급격하고 예측 불가능한 유사 사태를 매우 경계한다. 전후 일본 외교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의 안정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일본은 한반도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에도 안정적인 한반도를 원한다. 게다가 일본은 항상 한반

도 유사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 시나리오 등을 준비하며, 이러한 작업은 주로 외무성이나 방위성의 산하 싱크탱크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나 방위연구소가 담당한다.

일본의 한반도 관련 싱크탱크와 전문가를 조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면서 조사 및 분류 작업을 하였다.

첫째, 의회 차원에서 참의원의 한반도 관련 외교·방위위원회의 역할이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 참의원은 직능대표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외교·방위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하고, 필요할 때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를 초청해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정확한 현안 인식을 갖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각종 결의안 채택 등에 활용하기도 한다.

둘째, 정부산하 싱크탱크와 민간 싱크탱크를 분류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공통점은 일본의 정부산하 및 민간 싱크탱크 모두 자체 정책 연구인력 보다는 아웃소싱을 통해 외부 한반도 전문가에게 연구 위탁 혹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싱크탱크 내부에서 한반도라는 지역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한반도 관련 연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한반도 관련 최소 연구 인력이 외부 한반도 전문가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연구보다는 행정에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셋째, 대학 연구기관은 일본 내에 지역별로 산재하고 있지만, 뚜렷한 정책 지향의 연구기관을 찾기는 어렵다. 먼저 대학 연구기관은 크게 수도인 도쿄 소재 대학들과 교토, 규슈, 그리고 본 작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히로시마 등 한반도 관련 연구기관이 존재한다. 하지만 도쿄 내 소재하는 도쿄대, 게이오대, 와세다대가 다소나마 한반도 정책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역은 정

책 지향적이라기보다는 한국학이라는 지역학 차원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도쿄 내 대학들도 일본 내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기 보다는 한국의 국제교류재단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한반도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해 한반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요 동아시아 국제정치학자를 조사하였다. 기타오카 신이치, 다나카 아키히코, 이노구치 다카시와 같은 국제정치학자는 한반도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현재 아베 정권의 중요한 정책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다. 아베 총리의 핵심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타오카, 다나카와 아베 총리와 거리를 두고 있지만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이노구치와의 네트워크 강화는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이 단순히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 및 한일관계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한반도 전문가는 원로, 중견, 소장 학자로 나누고 대표적 인물들을 소개하였다. 최근 일본 내에서 한반도 및 북한 문제를 전공으로 하는 학자는 크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및 북한 문제를 전공으로 하는 학자가 현실적으로 취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앞서 언급한 정책 싱크탱크나 대학 연구기관에 취업의 문이 많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77] 결국 이러한 기관들도 아웃소싱을 통해 기존에 검증된 학자들을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따라서 새로운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 및 정책제언이 나오기 쉽지 않은 구조이다.

---

77) 일본의 한 북한전문가는 일본 내 대학에서 북한 관련 학부 강의는 매우 인기가 있다고 한다. 최근 계속된 북한의 위협, 그리고 한반도 평화무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대학원 과정으로 들어가면 북한을 전공으로 선택하는 학생이 거의 없으며, 이는 학위 취득 후 취업이 여의치 않은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다.

여섯째, 일본 내에서 한일관계 및 북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언론인들의 분석도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일본 언론인들은 한국과 달리 비교적 자유롭게 북한을 방문할 수 있고, 여기서 소개한 언론인들은 서울, 평양 지국장[78] 출신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한국어 어학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한다. 또한 일본 언론인들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저술 활동에도 비교적 활발히 참여한다.

이와 같은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일본 내 정책 네트워크 실태를 살펴본 후,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정책 네트워크를 확산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관학 정책 네트워크의 강화이다. 일본은 정부주도형 발전국가의 형태를 가져왔으며 관료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아베 정권에서는 기존의 관료 중심에서 벗어나 '관저 중심' 정치를 강화한다. 관저 중심 정치에는 과거와 달리 학자와 같은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 형태를 통한 정책제언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관료 집단은 일본 내 최고의 엘리트 집단임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산업계, 관료, 학계 그리고 정계, 언론계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정책 네트워크와의 교류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책 네트워크와의 교류를 단순한 싱크탱크 간의 교류에 그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한반도 관련 대학 연구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일본 내 전반적인 한반도 관련 대학 연구기관은 연구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고, 연구인력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각 연구기관과 개별적으로 정책적 쟁점을 가지고 논의할 때 전문가를 확보하기

78) 평양 지국장은 실제 평양에 소재하지 않고, 베이징에 지국을 설치하고 있다(예: 교도통신).

어렵고, 충분한 논의를 하기가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대학 연구기관과 정책 싱크탱크가 주로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아웃소싱에 주력한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도 일본 사회 특성상 특정 원로교수의 제자 집단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 도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본 전국의 모든 한반도 관련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정책 심포지엄이나, 적어도 '교토 코리아학 컨소시엄'과 같은 지역 단위 컨소시엄 형태의 정책 연구 서클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 내 신진 학자 및 언론인들과의 네트워크 확대에 힘을 써야 한다. 현재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원로, 중견 학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10년 이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신진 학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향후 한일 정책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다양한 정책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연구 및 정책제언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원로, 중견 학자들과 달리 신진 학자들은 한반도 문제를 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일본 신진 학자들의 성향은 자칫 과거사, 영토, 안보 문제 등에서 한국측과 상호이해 부족에서 갈등을 빚을 소지가 많다. 따라서 향후 20년 이상을 이끌어 나갈 한일 신진 학자들의 교류를 통해 과거와 다른 새로운 한일 정책 네트워크의 장을 펼쳐 나가야 한다. 그리고 신진 학자뿐만 아니라 새롭게 서울 지국에 특파원으로 오는 언론인들을 포함시켜 다양한 한일 정책 네트워크 교류의 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4. 러시아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2012년 세 번째 집권 이후에 대외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눈에 띄게 배가해왔다. 이를 위해 푸틴 대통령 자신이 앞장서고 대통령 행정실이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싱크탱크 및 사회단체, 러시아 정교회 등이 일선에서 움직인다. 그 뿐 아니라 정치인들과 유력 기업인들이 재정 및 입법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가적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러시아의 대외적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소프트 파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러시아의 언론, 사회 기관, 정치권, 기업인 등 정부와 민간의 엘리트들이 러시아의 소프트 파워를 증대시키기 위해 러시아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의 활동을 통해 러시아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을 증진시키려면 상기한 기관의 성격 및 활동을 파악한 연후에 협력 대상으로 선택해야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그 각각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기반 확충을 위해 러시아의 차세대 여론주도층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러시아에서 주요 언론의 책임을 맡고 있거나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 중에는 의외로 젊은 연령에 중책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메드베데프 총리실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는 나탈리아 티마코바는 1975년 생으로 43세이며,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러시아역사기억재단의 이사장인 알렉산드르 듀코프는 1978년 생으로 40세이다. 푸틴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알려진 로시야 시보드냐(Rossiya Segodnya)지의 주필 마르가리타 시모누안(Margarita Simonyan) 역시 1980년 생으로 언론계 내에 젊은 인재들이 많이

활동한다. 향후에 푸틴 이후 러시아 관계 및 시민사회에서 더 큰 활동이 기대되는 엘리트들에 관심을 갖고 협력 기회를 만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다. 나이가 젊을수록 편견에 물들지 않고 격의 없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거는 희망을 러시아와 한국 양국 모두에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핵심 엘리트 및 지식인들과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러시아의 싱크탱크, 언론, 사회 기관 들을 움직이는 대표적 인사들 중에 중복되는 인물들이 흔치 않게 존재한다. 세르게이 프리호드코 전 부총리, 블라디미르 야쿠닌, 알렉산드르 포타닌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를 움직이는 유력인사들의 전체 규모가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영향력 있는 주요 인물들이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 정부쪽에서는 대통령 행정실의 핵심적인 인물들과 외무부의 핵심 브레인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 특히 푸틴 대통령의 오랜 측근들이 여러 부문에서 걸쳐 전방위적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 인사들을 제외하면 대기업 총수 등 올리가르히가 재정 지원 혹은 지분 확보를 통해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및 정책결정 그룹은 상당수가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MGIMO) 인맥으로 포진된다. 싱크탱크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인물들 다수가 다른 사회적 기관들에서도 중복된다는 사실은 한국에서 러시아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러시아 내 한반도 전문가들을 초월한 전문가 층과의 관계 강화가 시급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해 준다.

셋째, 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러시아의 외교정책 개념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러시아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국가의 공공외교에 참여하고 국제관계 분야에서 외국의전문가들과 대화를 하는데 주력해왔다. 이를 통해 서구의 전문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

파워를 확대하고자 했다. 그 결과 외국의 연구자들과 많은 접촉이 있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러시아의 이익 실현과 관련해서는 그 성과가 미지수이다. 러시아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공공외교에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공공외교의 대상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이 우선이다. 공공외교는 일차적으로 대상 국가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들이나 지식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외국의 대중들에게 자국의 우호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한국과 러시아 간에는 특히 공공외교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양 국의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이 교감을 하고 서로에게 우호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기에 단기간 내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리하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박영호, 여인곤, 조민, 이기현, 김성철.『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1.

이기현 , 이교덕, 전병곤, 신상진.『중국의 저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2.

전병곤, 양갑용.『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 연구 기관 및 전문가 현황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12.

Abelson, Donald E. *Capitol Idea: Think Tank and US Foreign Policy.* Ithaca [New York]: McGill-Queen's Press-MQUP, 2006.

Arin, Kubilay Yado. *Think Tanks: The Brain Trusts of US Foreign Policy.* Germany: Springer, 2014.

Chance, Alek "Think Tank in the United States: Activities, Agendas, and Influence." In *ICAS Report 2016.* Washington D.C.: Institute for China-America Studies, 2016.

Kazin, Michael. *The Populist Persuasion: An American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1995.

McGann, James G. *Think Tanks and Policy Advice in the United States: Academics. Advisors and Advocates.* London: Routledge, 2007.

Pallin, Carolina Vendiland Susanne Oxenstierna. *Russia Think Tanks and Soft Power.* Stockholm: Swedish Defence Research Agency, 2017.

Wiarda, Howard J. *Think Tanks and Foreign Policy: The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and Presidential Politics.* New York: Lexington Books, 2010.

Zakem, Vera, Paul Saunders, Umida Hashimova, and P. Kathleen Hammerberg. *Mapping Russian Media Network: Media's Role in Russian Foreign Policy and Decision-making.* Washington D.C.: International Affairs Group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2018.

チャルマーズ·ジョンソン(着), 矢野俊比古(翻訳).『通産省と日本の奇迹』. (东京: ティビー エス·ブリタニカ, 1982).

2. 논문

정구연. "우파포퓰리즘과 미국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담론201』. 제21권 2호, 2018.

Badovsky, Dmitry. "Vladimir Putin Succeeding in Creating a Direct Democracy Mechanism." *Rethinking Russia Special Issue.* no. 3. 2016.

Busby, Joshua. "off-center: Misplaced Emphases in Debates About Liberal Internationalism." H-Diplo/ISSF Roundtable Review. vol. 2, no. 4. 2011.

Mead, Russell. "The Jacksonian Revolt: American Populism and the Liberal Order." *Foreign Affairs.* vol. 96, no. 2. 2017.

Simons, Greg. "The Role of Russian NGOs in New Public Diplomacy." *Journal of Political Marketing.* vol. 17, no. 2. 2018.

Taggart, Paul. "Populism and Representative Politics in Contemporary Europe." *Journal of Political Ideology.* vol 9, no. 3. 2004.

王存刚. “当今中国的外交政策: 谁在制定? 谁在影响.”『基于国内行为体的视角』. 2012(3).

3. 기타자료

『중앙일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러시아는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러시아와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고 협력해야 하는가.”『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연세대 EU 장모네센터 공동주최 하계학술대회 대토론회 자료집』.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화상회의실, 2018년 6월 16일.

DofC. “WPF ‘Dialogue of Civilizations’ today.” 〈http://dofc-foundation.org/programmes〉 Accessed September 6, 2018.

Cohen, Eliot. “The Republican Party Abandons Conservatism.” *The Atlantic*. October 1, 2018. 〈https://www.theatlantic.com/ideas/archive/2018/09/republican-party-conservative/571747/〉.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Libraries: Research Institutes and Think Tanks.” 〈https://libraries.indiana.edu/research-institutes-and-think-tanks〉.

Knight, Ben. “Putin associate opens Russia-friendly think tank in Berlin.” 〈https://www.dw.com/en/putin-associate-opens-russia-friendly-think-tank-in-berlin/a-19372110〉.

Kucera, Filip. “The Influence of Russian Think Tanks on Russia’s Foreign Policy in the Arctic.” 〈https://openaccess.leidenuniv.nl/handle/1887/60436〉.

McGann, James G. “2016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 〈http://www.iris-france.org/wp-content/uploads/2017/

01/2016 GlobalGoToIndexReport.pdf〉.

Pew Research Center. "Political Polarization in the American Public: How Increasing Ideological Uniformity and Partisan Antipathy Affect Politics, Compromise and Everyday Life." June 12, 2014. 〈https://is.muni.cz/el/1423/podzim2016/POL571/um/Oct18Rf_Pew_Report__Political_Polarization_in_the_American_Public__Overview_Section_1.pdf〉.

Pew Research Center. "Political Polarization and Media Habit: From Fox News to Facebook, how liberals and Conservatives Keep up with Politics." October 21, 2014. 〈http://www. pewresearch.org/wp-content/uploads/sites/8/2014/10/Political-Polarization-and-Media-Habits-FINAL-REPORT-7-27-15.pdf〉.

"Public Policy Research Think Tanks 2017: Eastern Europe." 〈https://guides.library.upenn.edu/c.php?g=476482&p=3254048〉.

"Report: Russian Think Tank Made Plan to Sway 2016 U.S. Election." 〈https://www.thedailybeast.com/report-russian-think-tank-made-plan-to-sway-2016-us-election〉.

"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 November 30, 2016. 〈http://www.mid.ru〉.

"Report on Russian think tanks: Knowing your partner makes cooperation better." February 27, 2018. 〈https://www.foi.se/en/pressroom/news/news-archive〉.

United States Senate. "US Senate Democrat's Letter to President Trump." June 14, 2018. 〈https://www.foreign.senate.gov/imo/media/doc/06-04-18%20Menendez%20joint%20letter%20to%20Trump%20on%20NK%20Summit.pdf〉.

"В Топ-90 think tanks Центральной и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 по

пало 13 россий ских и 8 украинских центров," February 3, 2017. 〈https://thinktanks.by〉. .

고르바초프 펀드 〈http://www.gorby.ru〉.
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 〈http://korea.kieas.keio.ac.jp〉.
규슈대 한국연구센터 〈http://rcks.kyushu-u.ac.jp〉.
극동연구소〈http://www.ifes-ras.ru〉.
나카소네 야스히로 세계평화연구소 〈http://www.iips.org〉.
도시샤대 코리아연구센터 〈http://do-cks.net〉.
도쿄대 한국학연구센터 〈http://www.cks.c.u-tokyo.ac.jp〉.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www.lass.net.cn〉.
러시아전략연구소 〈https://en.riss.ru〉.
루스키 미르 재단〈http://russkiymir.ru〉.
리싱킹 러시아 〈http://rethinkingrussia.ru〉.
미국 의회 홈페이지 〈http://www.congress.gov〉.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홈페이지 〈http://foreignaffairs.house.gov〉.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oreign.senate.gov〉.
방위연구소 〈http://www.nids.mod.go.jp〉.
베이징대 한국학연구센터 〈baike.baidu.com〉.
베이징대학 국제전략연구원 〈www.iiss.pku.edu.cn〉.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www.siis.org.cn〉.
상하이 푸단대 한국학연구센터 〈www.iis.fudan.edu.cn〉.
옌벤대 한반도연구센터 〈cnsk.ybu,edu.cn〉.
와세다대 한국학연구소 〈https://www.waseda.jp〉.
일본경제연구센터 〈https://www.jcer.or.jp〉.
일본국제문제연구소 〈http://www2.jiia.or.jp〉.
일본국제포럼 〈https://www.jfir.or.jp〉.
외교방위정책위원회 〈http://svop.ru〉.

정보보안문제연구소 〈http://www.iisi.msu.ru〉.
중국개혁개방논단 〈www.crf.org.cn〉.
중국국제문제연구원 〈www.ciis.org.cn〉.
중국국제우호연락회 〈www.caifc.org.cn〉.
중국사회과학원 〈http://cass.cssn.cn〉.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지역·글로벌 전략연구원 〈http://niis.cssn.cn〉.
중한우호협회 〈www.china-korea.org〉.
중국인민외교학회 〈www.cpifa.org〉.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www.cicir.ac.cn〉.
지린대 동북아연구원 〈nasa.jlu.edu.cn〉.
지린성 사회과학원 〈www.jlass.org.cn〉.
차아얼학회 〈www.charhar.org.cn〉.
참의원 국제경제·외교에 관한 조사회 〈 http://kokkai.ndl.go.jp〉.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http://www.sangiin.go.jp〉.
칭화대학 국제관계연구원 〈www.imir.tsinghua.edu.cn〉.
캐넌글로벌전략연구소 〈http://www.canon-igs.org〉.
판구 연구소〈baike.baidu.com〉.
평화·안전보장연구소 〈http://www.rips.or.jp〉.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www.hljsk.gov.cn〉.
〈https://web.archive.org/web/20120306193712〉.
〈http://www.historyfoundation.ru/ru/council.php〉.
〈https://doc-research.org/about-us/mission〉.

최근 발간자료 안내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2017-01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주요 발언	통일연구원
2017-02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홍 민 외

KINU Insight

2017-0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 민
2017-02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전병곤
2017-0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박영자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옥 외 18,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	도경옥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옥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	도경옥 외 24,500원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도경옥 외 24,000원

연구보고서

2016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윤 외 14,000원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옥 외 14,000원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예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2,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3,000원
2016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7,500원
2016	북한의 제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홍석훈 외 9,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2016-02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2016-03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임강택, 이강우
2016-04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이상신, 오경섭, 임예준

〈Study Series〉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2017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7-01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7-03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7-04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이상신 외 8,500원
2017-05 대북 · 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민태은 외 9,500원
2017-06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민태은 외 13,000원
2017-07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조한범 외 7,500원
2017-08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 홍민 외 7,000원
2017-09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임강택 8,000원
2017-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정성윤 외 8,000원
2017-11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조정아, 최은영 9,500원
2017-12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임강택 외 12,000원
2017-13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상기 외 11,000원
2017-14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정구연 외 7,000원
2017-15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한동호 외 7,500원
2017-16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임예준, 이규창 9,000원
2017-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자 13,000원
2017-18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홍제환 7,500원

2017-19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홍민 6,000원
2017-20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정성윤 6,500원
2017-21-01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1부) 전병곤 외 9,500원
2017-21-02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2부) 전병곤 외 9,500원
2017-22-01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현승수 외 10,000원
2017-22-02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현승수 외 9,500원
2017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3,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2017-02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조한범, 이우태
2017-0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이상신 외
2017-04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 임강택, 홍제환
2017-0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이규창 외

〈Study Series〉

2017-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2017-02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2017-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Lee, Kitae
2017-04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2018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8-01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8-02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 이규창 외 14,000원
2018-03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성기영 외 10,500원
2018-04 국경협력의 가능성과 미래 이기태 외 9,000원
2018-05 북한과 주변국의 국경안보 이기태 외 8,000원
2018-06 중국 초국경 경제협력 연구: 통일 한반도 국경안보에 대한 시사점 이기태 외 12,000원
2018-07 KINU 통일의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의식 이상신 외 11,000원
2018-08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전략 조한범 외 8,000원
2018-09 북한의 주민 일탈과 법적 대응 박영자 외 11,500원

2018-10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방식의 모색	임강택 외 9,500원
2018-11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김진하 외 9.500원
2018-12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홍제환 외 9,000원
2018-13	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이우태 외 11,000원
2018-14	북한의 핵전략 분석	홍우택 외 6,500원
2018-15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도경옥 외 10,000원
2018-16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 (총괄보고서)	김상기 외 5,500원
2018-17	북핵 종합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촉진전략	정성윤 외 21,000원
2018-18	동북아플러스 책임 공동체 형성 방안	이기태 외 12,000원
2018-2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김상기 외 10,000원
2018-21	북한에서 국가-사회관계 양상 연구	한동호 외 14,000원
2018-2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박영자 외 13,500원
2018-23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오경섭 외 12,000원
2018-24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중 협력방안	정은이 외 9,500원
2018-25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신종호 8,500원
2018-26	2030 미중관계 시나리오와 한반도	신종호 외 12,0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8-01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박영자 외
2018-02	2018년 미국 중간선거 평가와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18-03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서보혁 외

〈Study Series〉

2018-01	The Implementation Strategy of the Establishment for Peaceful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Hong, Min·Cho, Han-Bum·Park, Ihn-Hwi
2018-02	2017 Survey of Inter-Korean Integration	Park, Juhwa·Rhee, Minkyu·Cho, Won-Bin
2018-03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ong-un Regime	Hong, Jea Hwan
2018-04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Policy	Chung, Sung-Yoon·Lee, Moo Chul·Lee, Soo-hyung
2018-05	Eight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y and Society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Park, Young-Ja et al.

연례정세보고서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통일연구원
201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7~2018	통일연구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5, No. 1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5, No. 2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6, No. 1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6, No. 2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7, No. 1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7, No. 2 (2018)	10,000원

기타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 · 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7	북한 내 이동의 자유	한동호 외
2017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7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2018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김진하 외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 락 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 수신거부 (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www.kinu.or.kr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KINU 통일연구원

값 9,500원
93340
9 788984 799424
ISBN 978-89-8479-942-4